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보고서

2022



목 차

제1장 개요	9
제1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개요	11
제2절 수립배경 및 특징	15
제3절 수립과정 및 추진체계	19
제2장 미래상과 목표	25
제1절 서울의 변화진단	27
제2절 2040 서울의 미래상	50
제3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계획목표	53
제3장 부문별 전략계획	69
제1절 개요	71
제2절 주택·정비 부문	75
제3절 경제·산업 부문	81
제4절 기후·환경 부문	86
제5절 안전·방재 부문	91
제6절 교통·물류 부문	97
제7절 사회·문화 부문	103

제4장 공간계획	109
제1절 도시공간구조	111
제2절 토지이용계획	126
제3절 도시관리계획	132
제5장 생활권 계획	145
제1절 생활권계획의 개요	147
제2절 생활권 구분 및 설정	150
제3절 권역별 구상	151
제6장 계획의 실현	181
제1절 계획체계 조정·보완	183
제2절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185
제3절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강화	191
제4절 재원 투입의 원칙과 방향	192

표 목 차

〈표 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2019~2023)	20
〈표 1-2〉 계획 수립과정별 계획참여 주체의 주요 역할 및 내용	21
〈표 2-1〉 서울시 폭우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29
〈표 2-2〉 서울시 폭염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29
〈표 2-3〉 서울시 폭설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30
〈표 2-4〉 서울시 가뭄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30
〈표 2-5〉 서울시 강풍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31
〈표 2-6〉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결과	32
〈표 2-7〉 서울 시민 의견 조사 개요	48
〈표 2-8〉 서울 시민 의견 조사 내용	48
〈표 2-9〉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미래상 수립과정	51
〈표 2-10〉 서울도시기본계획 미래상 변화	52
〈표 2-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53
〈표 3-1〉 서울형 부문별 전략계획의 개요	72
〈표 3-2〉 6개 부문별 목표와 전략(24개 목표, 70개 전략)	73
〈표 3-3〉 주택·정비 부문별 전략계획	75
〈표 3-4〉 경제·산업 부문별 전략계획	81
〈표 3-5〉 기후·환경 부문별 전략계획	86
〈표 3-6〉 안전·방재 부문별 전략계획	91
〈표 3-7〉 교통·물류 부문별 전략계획	97
〈표 3-8〉 사회·문화 부문별 전략계획	103
〈표 4-1〉 3도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114
〈표 4-2〉 7광역중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116
〈표 4-3〉 12대 지역중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117
〈표 4-4〉 서울-수도권 간 광역교통망 노선 계획	120
〈표 4-5〉 4대 혁신축의 육성방향 및 주요 거점별 개발방향	123
〈표 5-1〉 생활권계획별 특성 및 주요내용	149
〈표 5-2〉 도심권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152
〈표 5-3〉 동북권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158
〈표 5-4〉 서북권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164
〈표 5-5〉 서남권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169
〈표 5-6〉 동남권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175
〈표 6-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부문별 성과 진단지표(안)	189

그 림 목 차

〈그림 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위상	13
〈그림 1-2〉 2000년 이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변천	15
〈그림 1-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구성체계	18
〈그림 1-4〉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추진체계	23
〈그림 2-1〉 서울시 자연환경	27
〈그림 2-2〉 서울시 음영기복도	27
〈그림 2-3〉 서울의 도시 형태의 변화	28
〈그림 2-4〉 서울시 토지적성등급도	32
〈그림 2-5〉 서울의 자연증가 변화(2000~2020)	33
〈그림 2-6〉 연령대별 인구의 증감과 세대주 연령의 변화(2010, 2020)	34
〈그림 2-7〉 1인 가구 및 비친족 가구 현황(2010, 2020)과 연령대별 조혼인율(2020)	35
〈그림 2-8〉 주택구입부담지수의 변화(2010~2020)와 주택별 점유 현황(2010, 2020)	35
〈그림 2-9〉 서울의 GRDP 성장률 및 산업별 특화도(2010~2019)	36
〈그림 2-10〉 자치구별 GRDP의 추이(2010, 2018)	37
〈그림 2-11〉 자치구별 출근 유입통행량의 추이(2016, 2019)	37
〈그림 2-12〉 자치구별 주간인구와 야간인구 비교(2020)	38
〈그림 2-13〉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비율(2019)	39
〈그림 2-14〉 폐기물 발생량 및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2010~2019)	40
〈그림 2-15〉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2015~2020)	41
〈그림 2-16〉 세계 주요도시의 1인당 공원면적(2014)	41
〈그림 2-17〉 서울시 인구추계(2010~2040)	42
〈그림 2-18〉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43
〈그림 2-19〉 서울시 전동킥보드 사고 추이	44
〈그림 2-20〉 대도시권 생활인구 경로(상위 50개)	45
〈그림 2-21〉 서울시민 선호 미래 서울 핵심가치	49
〈그림 2-22〉 보행일상권 개념도	56
〈그림 2-23〉 서울의 (법정) 하천현황	57
〈그림 2-24〉 서울의 지상철도 현황 및 잠재력	60
〈그림 2-25〉 수직적·수평적 확장을 통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63
〈그림 2-26〉 세계 주요 도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64
〈그림 2-27〉 기술의 발전과 용도지역제의 변화	68
〈그림 3-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부문별 전략계획의 역할	71
〈그림 4-1〉 서울시 중심지 체계	112

〈그림 4-2〉 광역급행철도망과 중심지 체계를 연계한 광역대도시권	121
〈그림 4-3〉 4대 혁신축: 중심지와 산업거점 연계	122
〈그림 4-4〉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수변축	125
〈그림 4-5〉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구조	132
〈그림 4-6〉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	137
〈그림 5-1〉 권역생활권 구분	150
〈그림 5-2〉 권역별 구상 도출을 위한 논의 과정	151
〈그림 5-3〉 도심권 발전구상	157
〈그림 5-4〉 동북권 발전구상	163
〈그림 5-5〉 서북권 발전구상	168
〈그림 5-6〉 서남권 발전구상	174
〈그림 5-7〉 동남권 발전구상	179
〈그림 6-1〉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상시 대응체계 마련	185
〈그림 6-2〉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성과 진단지표의 구성 방향	186

제1장 개요

제1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개요

제2절 수립배경 및 특징

제3절 수립과정 및 추진체계

제1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개요

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의미

- 서울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을 의미한다.
-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인구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 도시공간에 대비하고, 부문별 전략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체계로 개선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의해 법정화되었고, 수립목적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20년 후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이 기본계획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적 역할을 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의 위상을 가진다.

도시기본계획은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교통·기반시설, 문화·복지 등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행정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계획이다.

2.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19년, 목표연도 2040년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의 기준연도를 2019년으로 하여 서울의 인구·산업·경제·환경·교통·주택 등 부문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분석과 시민·전문가·행정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상과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등 도시 전반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 계획의 목표연도는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후인 204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통계 전망을 근거로 계획인구를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 도시계획구역 605.96km²

-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전체로 하며 면적은 605.96km²를 대상으로 하였다.
- 계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과 공간구조 개편구상에서는 서울과 주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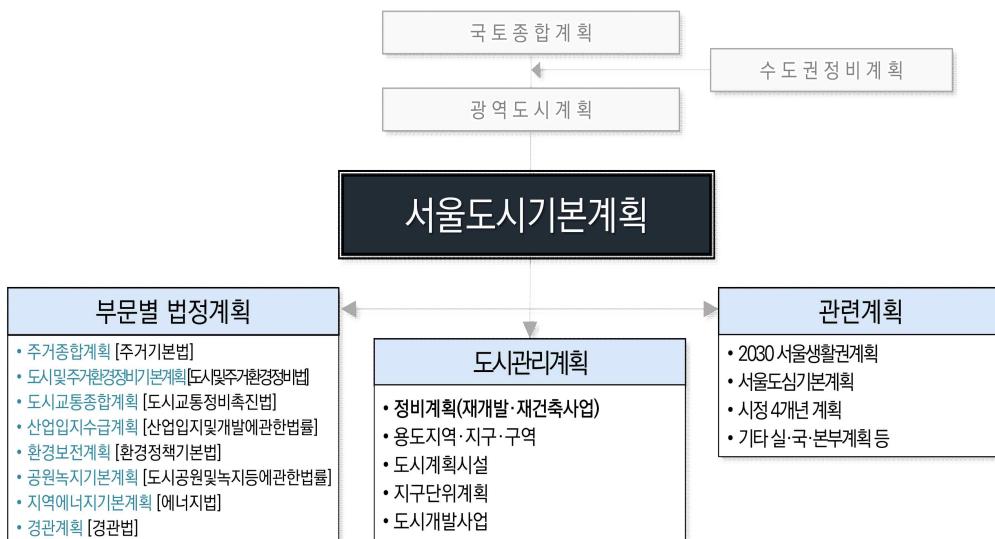
내용적 범위

-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도시공간에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공간목표를 제시하였다.
- 둘째, 미래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본부·국 정책과 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문별 전략계획 수립하였다.
- 셋째, 미래상과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을 공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공간 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공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하였다.
- 넷째,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생활권계획의 권역별 구상 제시하였다.
- 다섯째,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계획체계의 조정·보완, 상시모니터링체계,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재정투입의 원칙과 방향 제시하였다.

3. 계획의 위상 및 역할

서울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더불어 토지이용에 관련된 서울시 전 부문의 정책에 우선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모든 부문별 계획과 정책을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으로 계획하며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¹⁾.
- 도시기본계획은 복지·경제·환경·교통·안전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서울시 정책의 전 분야를 균형 있게 통합·조정하는 공간분야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갖는다.
- 도시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법정계획과 시정 운영계획 등 서울시 모든 계획 수립 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위상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서울의 모습을 내다보고 시대상 및 가치를 담은 미래상과 발전 방향의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은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여건, 기후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산업구조, 주택과 시가지 변화 등 주요 부문에 대한 기초현황분석과 디지털 전환, 팬데믹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재정비 절차가 필요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계획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설정한 계획과제를 공간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화하는 계획이다.
- 따라서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및 이와 연계된 토지이용의 원칙과 방향 제시하고 있으며, 권역 단위의 발전 방향 등 공간계획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특징을 갖는다.
- 각 분야의 부문별 정책과 계획을 공간차원에서 통합하고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도시공간의 활용과 토지이용을 규제·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을 도모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정책계획이자 전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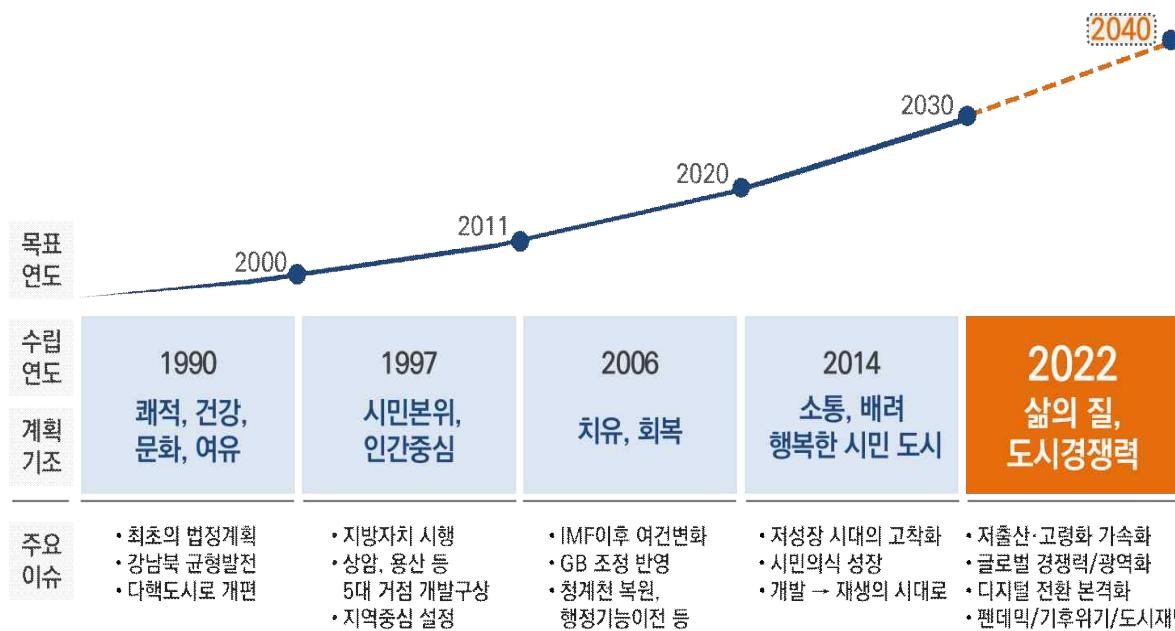
- 지속되는 서울의 저성장 기조, 재정투입에 대한 수요 증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시민 요구 등 공공정책 수요는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40년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수의 행정 분야를 융합하고 시민·전문가·행정가의 참여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서울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중점전략을 설정하였다.

제2절 수립배경 및 특징

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배경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러한 법정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2014년에 확정된 ‘2030년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81년 도시기본계획이 법정화된 이후 1990년(목표연도 2000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1997년과 2006년, 그리고 2014년에 실시한 세 번의 재정비까지 총 4회에 걸쳐 법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공식적으로 5번째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그림 1-2〉 2000년 이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변천

광역화, 디지털 전환, 세계화, 팬데믹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서울을 둘러싼 새로운 이슈는 GTX 광역교통망 신설 및 3기 신도시 공급 등 수도권 광역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대변되는 급속한 기술환경 변화, 세계 대도시권 경쟁의 심화, 글로벌 기후위기 증가 및 상수화되는 도시 감염병에 대한 대비, 지속적인 고령화 및 저출생 등이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대두된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 개편 필요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최초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수립한 시민참여형 계획이자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큰 의의가 있다.
-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가 강조되면서 단기·체감형 정책과 비물리적인 계획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100인의 시민참여단으로 대표되는 시민참여 방식과 참여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또한 서울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이슈 중심의 목표지향적 전략계획을 지향함에 따라 부문별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행정실무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 때문에,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의 내용과 형식을 일부 개편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2.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및 특징

참여형계획·전략계획의 기본 틀 유지하되, 계획수립 방식 및 구성체계 일부 개선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다양한 수립주체에 의한 참여형 계획과 전략계획이라는 기존 계획의 기조를 계승하되, 기존의 시민참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의 수립방식과 내용을 일부 개편하였다.
- 특히 새로운 여건변화와 시대가치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계획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시민·전문가·행정 등 다양한 수립 주체간의 협력적 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과정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금번 계획에서도 시민참여의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참여방식을 다양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선하였다.
- 또한, 폭 넓은 시민참여를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가 어려웠던 ‘참여 소외계층’(빈곤층,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을 발굴하여 미래 서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글로벌 광역대도시 서울의 역할에 걸맞게 시민계획단에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광역 시민과 외국인 시민을 포함하였고 대시민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시민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이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직접 설정하는 방식에서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미래가치와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환경·교통 등 관련 전문가 및 행정가의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미래상과 계획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부문별 전략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신설

- 금번 계획에서는 이슈중심의 전략계획과 서울시 실·국·본부의 부문별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핵심이슈별 계획을 ‘부문별 전략계획’으로 재편하고, 서울시 전반에 대한 계획의 일관성과 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간계획 부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추가하였다.
- ‘부문별 전략계획’은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서울시 특성에 맞게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서울시 실·국·본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지침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시관리계획’은 통합적 관점에서 도시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의 정책과제 및 주요 사업추진 시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이 있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실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구성체계

제3절 수립과정 및 추진체계

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 2019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착수하였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2030 계획의 평가와 함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의 성격과 위상, 구성체계, 미래상에 관한 이슈 등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2019년 5월, 2030 서울플랜의 기조를 유지하고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였다.
 - 19인의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통해 추진체계, 수립방향, 시민참여방식 등 결정
- 2019년 9월, 미래상 설정을 위하여 120명의 서울시민과 생활시민으로 구성된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2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시민이 바라는 미래 가치와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 2019년 11월, 시의원, 전문가, 실·본부·국 등으로 구성된 「2040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미래상과 계획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 2020년 3월, 작성된 계획안을 토대로 시민계획단 피드백을 진행하였으며, 동북·서북·서남·동남·도심권으로 권역별 워크숍을 추진하여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2020년 6월, 작성된 계획안을 토대로 서울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계획, 권역별 구상, 실현화 방안 등이 포함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다.
- 2020년 11월, 팬데믹 발생으로 계획 수립과정의 대면 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계획 수립을 잠정 중단하고 새롭게 발생한 여건 변화를 추가 분석하였다.
- 2021년 5월, 재보궐선거 결과로 서울시의 새로운 시정이 출범됨과 동시에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와 가속화된 시민 일상생활의 디지털화 등 신규 발생 이슈를 고려하여 기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 2022년 1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한 시민 의견 및 계획의 핵심 가치를 검토하며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2022년 3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조정작업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대외 발표를 시행, 새로운 미래상과 공간계획을 확정하였다.

- 2022년 4월, 새로운 미래상과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실·본부·국 및 자치구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계획안을 수정·보완하였다.
- 2022년 6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 2022년 10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하였다.
-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하였으며, 당일 원안가결을 득 하였다.
- 2023년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표 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2019~2023)

년도	주요 추진 과정
'19 상반기	<p>❖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척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회의 자문 및 학술용역 계약 체결·착수 • (4~5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사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p>❖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서울의 발전방향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서울시민 1,000명+생활시민 500명) • (8~9월) 소그룹 시민계층 의견수렴(빈곤층, 외국인, 장애인, 청소년 등) • (8~9월) 시민 참여형 「서울 미래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8~12월) 「2040 서울플랜 시민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2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계획의 수립과정을 기록·공유 • (9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모집 및 운영(1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의과정(2회)을 통해 2040년 서울의 핵심가치 및 계획과제 제시 • (10월) 2040 서울의 핵심가치 온라인 설문조사(1,000명) • (9~11월) 시민 도시아카데미 운영 <p>❖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 발족식(전문가·행정가·시의회 약 100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조정, 생활기반, 지속가능기반, 도시경쟁력, 시민사회혁신, 도시공간 • (10~12월)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제안 과제에 기반한 분과별 전략계획 논의, 연말까지 20회 회의 추진 <p>❖ 공공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월) 25개 자치구 순회 방문 의견수렴 • (11~12월) 서울시 실·국·본부 의견수렴
'20 상반기	<p>❖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2040 서울플랜 시민 서포터즈」 해산 • (2~3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워크숍, 온라인 대체 의견수렴 추진 <p>❖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월)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 운영 <p>❖ 공공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자치구 권역별 워크숍 개최

〈표 1-1 계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2019~2023)

년도	주요 추진 과정
'20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도시관리계획 부문 작성을 위한 TF회의(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관련 부서 면담) • (8~12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초안 작성 ❖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워크숍, 온라인 대체 의견수렴 추진 ❖ 공공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계획과제 및 권역별 구상에 대한 실·국·본부 의견수렴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수정·보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월) 팬데믹, 디지털 전환, 시정변화 등 신규 여건변화 대응 계획안 수정·보완 ❖ 서울시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시장보고(1차)
'21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수정·보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2월) 팬데믹, 디지털 전환, 시정변화 등 신규 여건변화 대응 계획안 수정·보완 ❖ 서울시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시장보고(2차) ❖ 공공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2월) 서울시 총괄건축가 면담 진행(10회 이상)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시장보고(3차) •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대외발표(기자설명회)
'22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 (9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 (10~12월) 국토계획평가 • (1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 ❖ 공공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월) 서울시 실·국·본부 및 자치구 의견수렴(부문별 전략계획, 권역별 계획) • (10~12월) 관계기관 의견청취(국토부·경기도·인천시)
'23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반영 및 최종 확정

〈표 1-2〉 계획 수립과정별 계획참여 주체의 주요 역할 및 내용

수립과정	내용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p>사전자문단 회의(총 4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9. 4. ~ 5. • 참여주체: 분야별 학계·기관·시민단체 등 전문가 19명 <p>2040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의견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주요 현안 이슈 및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 1차 설문조사(2019. 8.): 서울 시민 1,200명, 인천/경기 시민 500명
시민참여와 미래상	<p>참여소외계층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9. 8. 9. ~ 9. 7. • 참여주체: 빈곤층(쪽방촌 주민),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표 1-2 계속〉 계획 수립과정별 계획참여 주체의 주요 역할 및 내용

수립과정	내용
시민참여와 미래상	<p>'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미래포럼'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9. 8. 27.(1차), 2019. 9. 9.(2차) · 참여주체: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및 전문가 · 주요내용: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p>'2040 서울플랜 시민 서포터즈'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9. 8. 27. ~ 2020. 1. 30. (5개월) · 참여주체: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231명 · 주요내용: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계획의 수립과정을 기록·공유 <p>'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에 의한 미래상 및 계획과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9. 9. 21. ~ 계획 수립 시까지 · 참여주체: 지원서를 기반으로 선발한 일반시민 120명 · 참여방식: 미래상·계획과제 도출 및 계획수립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회의(2019. 9. 21.): 오리엔테이션, 2040 서울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등 - 2차 회의(2019. 9. 28.): 2040 서울의 미래상 및 주요 계획과제 논의 <p>2040 서울의 미래상과 핵심가치에 대한 시민의견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이 제안한 6개 미래상에 대한 의견수렴 및 최종 선정 · 1차 설문조사(2019. 8.): 서울시민(1,000명)+인천·경기시민(500명) · 2차 설문조사(2019. 10.): 서울시민(1,000명) <p>2040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건변화를 고려한 서울의 미래상 및 계획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조사 · 설문조사(2022. 1. 21. ~ 1. 25.) · 대상: 만 16~65세 서울거주 시민(1,000명) <p>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2. 6. 24. · 참여주체: 일반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누구나 참석 가능(참석 명부기준, 194명)
	<p>시민이 제안한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과별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9. 10. ~ 2020. 5. · 구성: 시민이 제안한 계획과제 기반 5개 분과 + 1개 총괄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혁신, 지속가능기반, 생활기반, 도시경쟁력, 도시공간 + 총괄조정 · 참여주체: 전문가, 시의원, 실본부·국장, 서울연구원 등 분과별 약 20명(총 107명)
	<p>팬데믹, 시정변화 등 신규 여건 변화 반영 신규 부문별 전략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2. 1. ~ 2022. 6. · 구성: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부문별 계획을 서울시에 맞게 재조정 ※ 주택·정비, 교통·물류, 기후·환경, 안전·방재, 경제·산업, 사회·문화 · 참여주체: 전문가, 실본부·국 담당부서 실무자, 서울연구원 등
	<p>자치구별 면담 및 권역별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1차)2019. 8. ~ 9. (2차)2020. 2. (3차)2022. 6. · 참여주체: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시계획 담당부서 실무자 · 자치구별 주요 이슈와 발전방향, 자치구 핵심사업, 권역별 계획 등에 대한 의견 제시
	<p>서울시 실·국·본부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1차)2019. 11. ~ 12. (2차)2020. 7. (3차)2022. 6. · 참여주체: 서울시 28개 주요 실·국·본부 실무자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식, 건의사항 등 행정주체의 의견 청취
	<p>관계기관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2. 10. 7. ~ 2022. 12. 15.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인천시, 경기도
공공 의견수렴 과정	

2.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추진체계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수립 주체 간의 협의를 통한 협력적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총괄계획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계획추진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 ‘총괄계획가’는 계획추진과 계획내용에 관한 결정 및 협의 등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조정 등 서울도시기본계획 전반을 총괄
- 추진위원회는 계획 전반을 담당하는 ‘총괄조정분과’와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이 제안한 계획과제를 바탕으로 ‘시민사회혁신분과’, ‘지속가능기반분과’, ‘생활기반분과’, ‘도시 경쟁력분과’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분과별 계획내용을 도시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시공간분과’를 추가하여 총 6개 분과로 운영하였다.
 - 총괄조정분과에는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민계획단 대표 참여
- 분과별 추진위원회는 관련 부문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연구진 등 20여 명内外로 구성하여 분과별 지향점과 목표, 전략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련 실·국·본부 정책을 반영하여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1-4〉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추진체계

제2장 미래상과 목표

제1절 서울의 변화진단

제2절 2040 서울의 미래상

제3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계획목표

제1절 서울의 변화진단

1. 서울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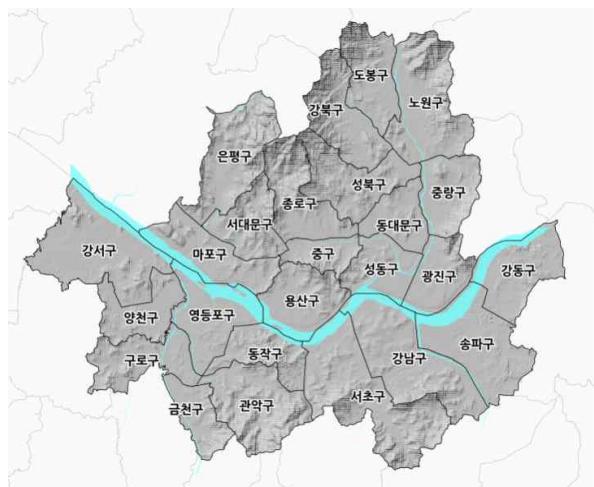
1) 서울의 일반현황

- 서울의 면적은 605.96km²이며,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서울의 중앙에는 한강이 동서를 가르고 있고, 권역별로 4대 지천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형적 모습을 보인다.

- 면적: 605.96km²
- 행정구역: 25개구, 426개동
- 인구: 951만 명 (주민등록인구 2021년 기준)
- 1인당 GRDP: 49,648천원(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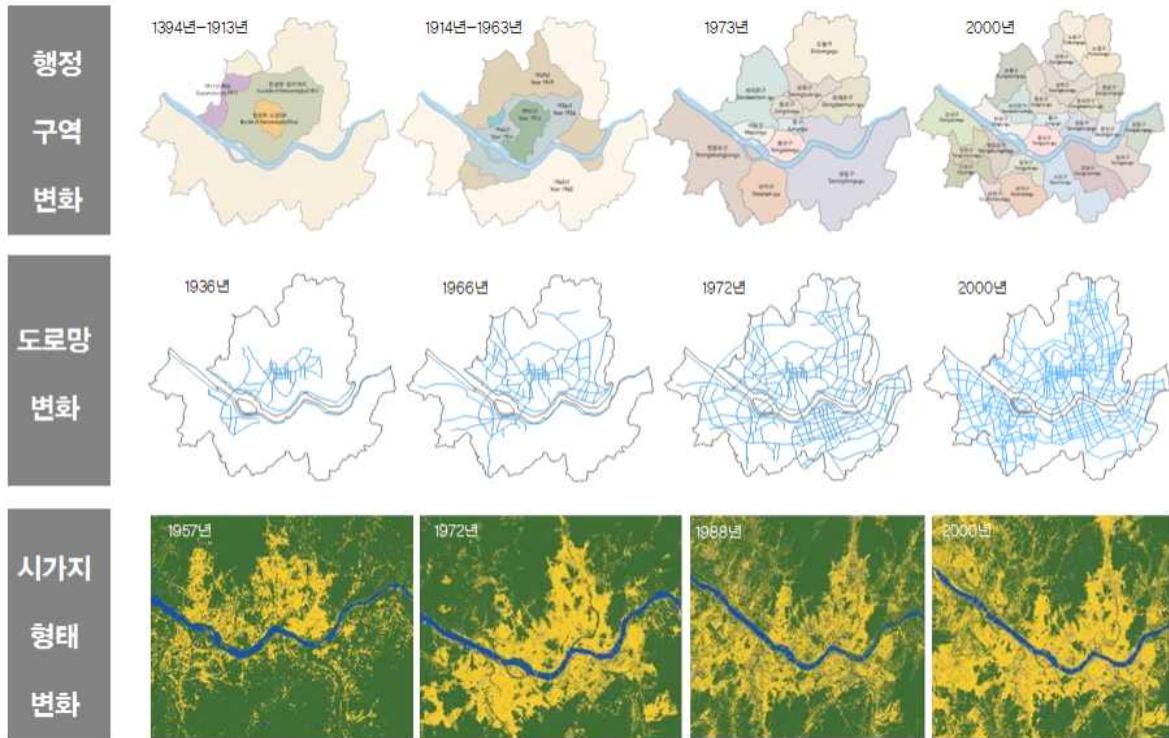
〈그림 2-1〉 서울시 자연환경



〈그림 2-2〉 서울시 읍면기복도

2) 서울의 도시형태 변화

- 서울은 1394년 조선의 수도로 결정된 이후 동서축의 도시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일제강점기에 남쪽으로 시가지가 확산되어 남북축의 도시구조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시가지가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어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 이후 서울의 인구증가 및 시역의 확장과 더불어 도시인구와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망이 발달되면서 방사형 가로망과 순환가로망체계가 형성되었으며 광역적으로는 서울과 주변 수도권이 연계되는 광역대도시권이 형성되었다.



〈그림 2-3〉 서울의 도시 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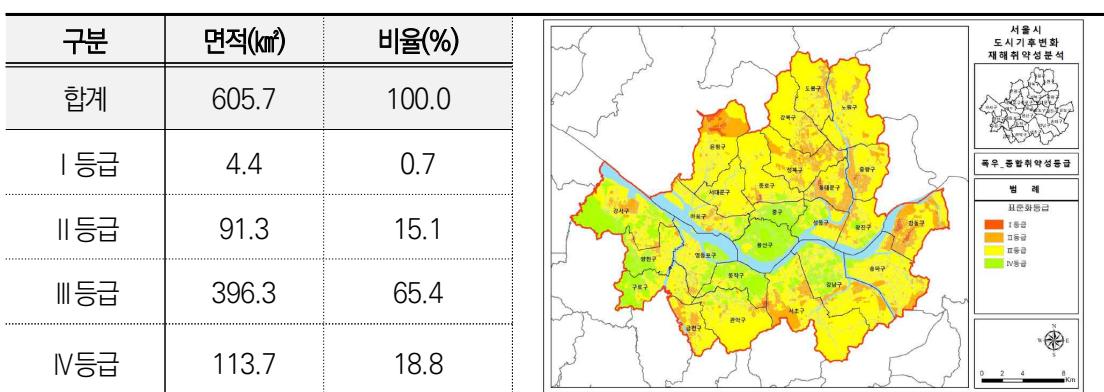
3) 서울의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 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도시 계획적 대책이 필요하며,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따라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의 기후 노출 및 도시민감도 분석을 시행, 도시기후변화에 따른 대상 재해(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에 대한 취약성을 I ~IV등급으로 평가하였다.
 - I 등급은 재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재해취약지역은 I, II등급 지역을 의미
 - 2008~2017년 서울시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으며, 특히 2010년 태풍 곤파스와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 본 재해취약성의 분석 결과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등에 반영되어, 재해 예방형·대응형 도시계획 수립을 도모하였다.

▣ 폭우 재해취약지역

- 서울시 내 폭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I 등급의 지역은 약 4.4km²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II등급 지역은 약 15.1km²가 분포하고 있다.
- 특히, 은평구의 주 취약 요인은 미래도시민감도의 순인구증가 및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지의 지표가 요인으로 판단되며, 성북구는 현재기후의 영향, 그 외 나머지 취약지역은 대부분 현재 도시민감도 지표 중 하천변저지대, 풍수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의 잠재취약지역 지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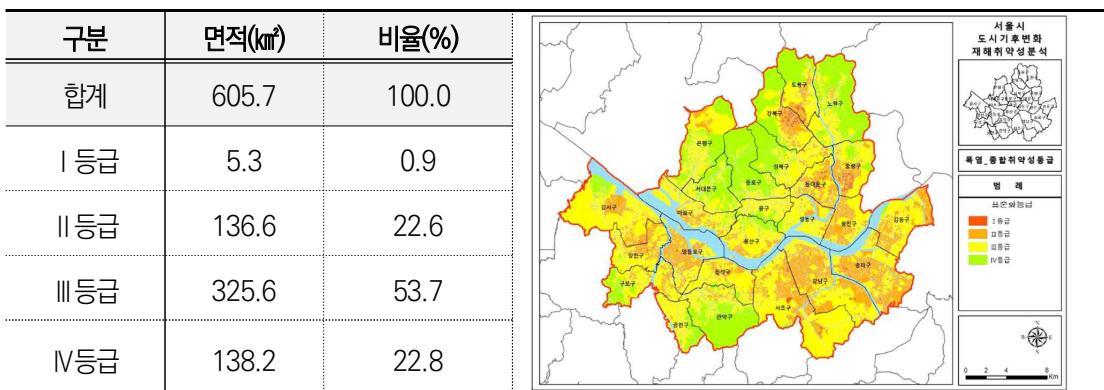
〈표 2-1〉 서울시 폭우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 폭염 재해취약지역

- 서울시 내 폭염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I 등급의 지역은 약 5.3km²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II등급 지역은 약 136.6km²가 분포하고 있다.
- 폭염재해취약지역이 다수 분포된 동남권과 서남권은 현재·미래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현재기후노출과 미래기후노출 지표가 주 요인으로 보이며, 동북권은 현재·미래 기후 노출지표와 추가로 현재도시민감도의 취약시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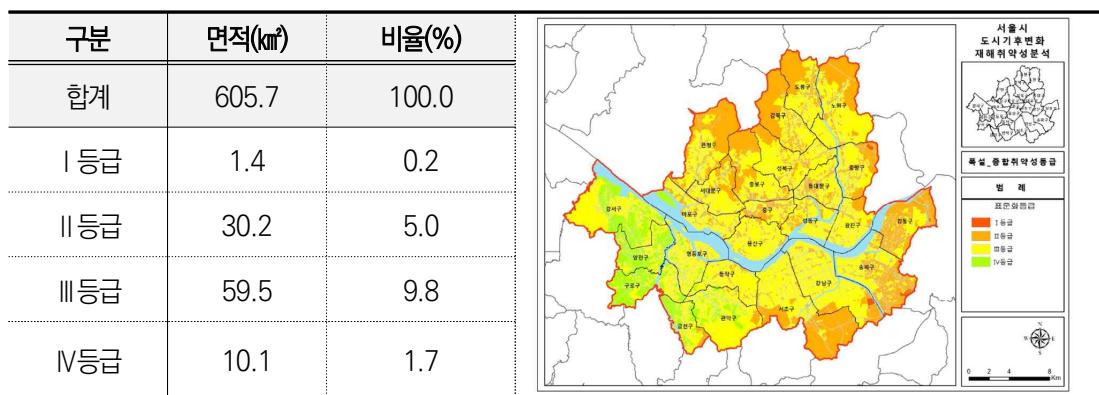
〈표 2-2〉 서울시 폭염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 폭설 재해취약지역

- 서울시 내 폭설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I 등급의 지역은 약 1.4km²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II 등급 지역은 약 182.8km²가 분포하고 있다.
- 폭설재해취약지역이 주로 분포된 동남권의 주 취약요인은 현재·미래기후노출 지표로 판단되며, 서울시 북쪽 외곽은 현재도시민감도의 잠재취약지표인 급경사지의 영향, 나머지 지역은 취약건축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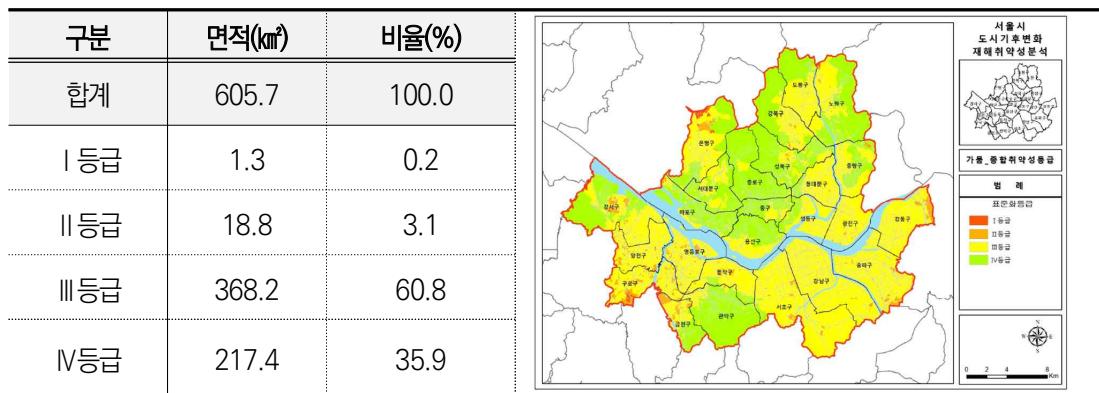
〈표 2-3〉 서울시 폭설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 가뭄 재해취약지역

- 서울시 내 가뭄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I 등급의 지역은 약 1.3km²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II 등급 지역은 약 18.8km²가 분포하고 있다.
- 가뭄재해취약지역의 주요인은 모두 미래기후노출과 개발사업진행 및 예정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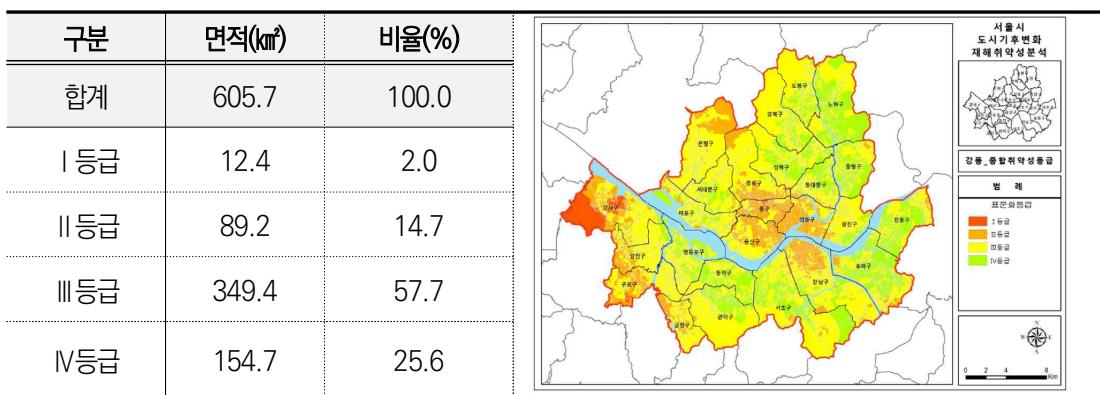
〈표 2-4〉 서울시 가뭄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 강풍 재해취약지역

- 서울시 내 가뭄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I 등급의 지역은 약 12.4km^2 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II등급 지역은 약 89.2km^2 가 분포하고 있다.
- 강풍재해취약지역이 분포된 서남권의 주 요인은 현재도시민감도 지표 중 취약건축물과 미래기후노출지표로 판단되며, 중심부는 현재기후노출의 영향, 은평구는 현재기후노출과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 2-5〉 서울시 강풍 종합재해취약성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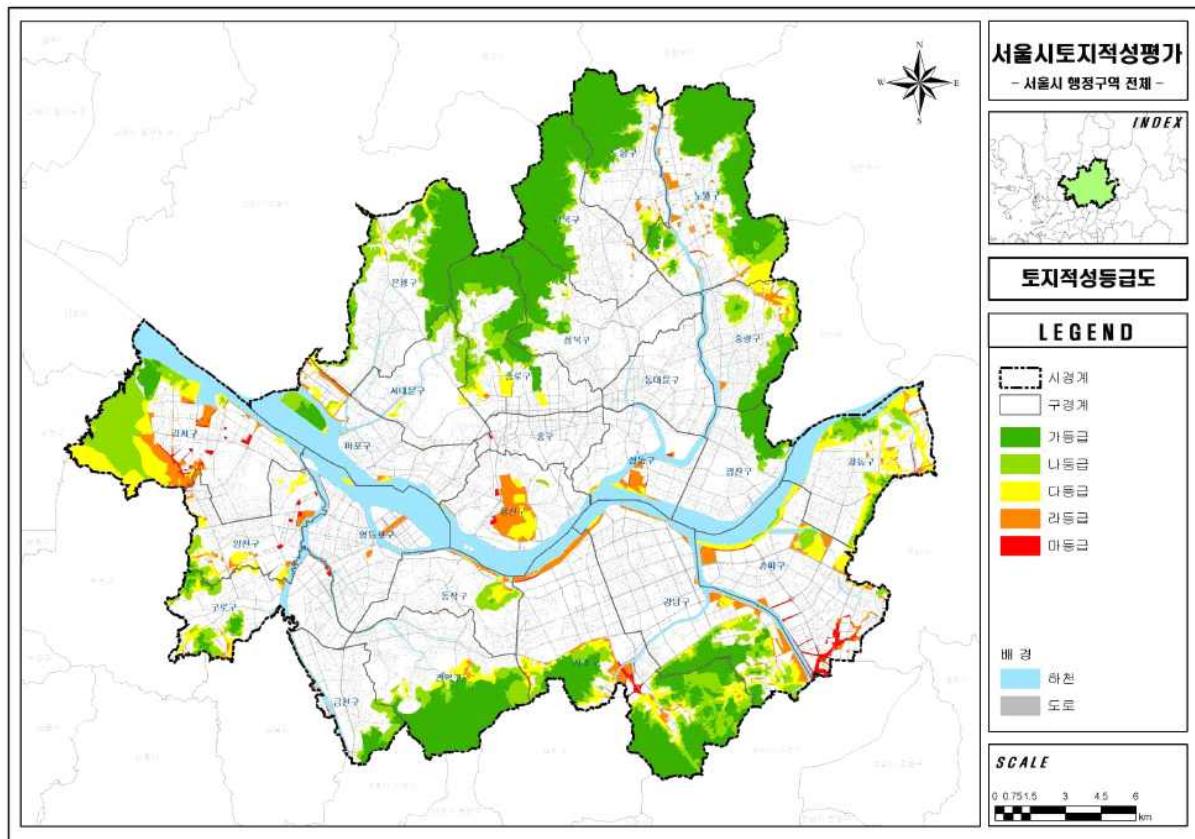


4) 서울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사이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본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도시공간구조와 도시관리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서울시 토지적성평가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녹지지역 전역에 대한 평가 진행
- 종합적성값과 표준화값(Z_i)에 따른 필지별 토지적성평가 결과, 서울시는 평가대상지 전체면적 234.59km^2 (63,867필지) 중 가등급 지역이 91.19km^2 (6,232필지), 나등급 지역이 54.16 (19,279필지), 다등급 지역이 52.58km^2 (21,461필지), 라등급 지역이 31.36km^2 (14,067필지), 마등급 지역이 5.39km^2 (2,828필지)로 분석되었다.

〈표 2-6〉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결과

적성등급	부여기준	필지수(개수)	필지비율(%)	면적(km ²)	면적비율(%)
기등급	$Z_i < -1.3$	6,232	9.8	91.19	38.9
나등급	$-1.3 \leq Z_i < -0.3$	19,279	30.2	54.16	23.1
다등급	$0.3 \leq Z_i < 0.7$	21,461	33.6	52.58	22.4
라등급	$0.7 \leq Z_i < 1.7$	14,067	22.0	31.36	13.4
마등급	$1.7 \leq Z_i$	2,828	4.4	5.30	2.3
합계		63,867	100.0	234.59	100.0



〈그림 2-4〉 서울시 토지적성등급도

2. 2010년 이후 서울의 변화 모니터링²⁾

1) 인구변화

2020년 서울의 자연증가 1,923명으로 사상 최소치, 사회적 증가도 10년 연속 ‘マイ너스’

- 서울 인구는 2000년 989.5만 명에서 2020년 958.6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자연증가는 같은 기간 9.4만 명에서 0.2만 명으로 감소하면서 사상 최소치를 기록하였다.
 - 서울의 출생아는 2020년 4.7만 명으로 2010년의 절반 가까이 감소
- 전입과 전출에 따른 사회적 증가도 매년 감소하였다.
 - 순 전출은 2001년 11.4만 명, 2010년 11.5만 명, 2020년 6.5만 명으로 감소
-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매년 서울에서 전출하는 인구가 많으며,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매년 서울로 오는 전입인구가 많다. 2020년 연령대별로는 15~29세 인구 외에는 전출하는 인구가 더 컸다.
- 급격한 인구 감소,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울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생활인구로 확장하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2-5〉 서울의 자연증가 변화(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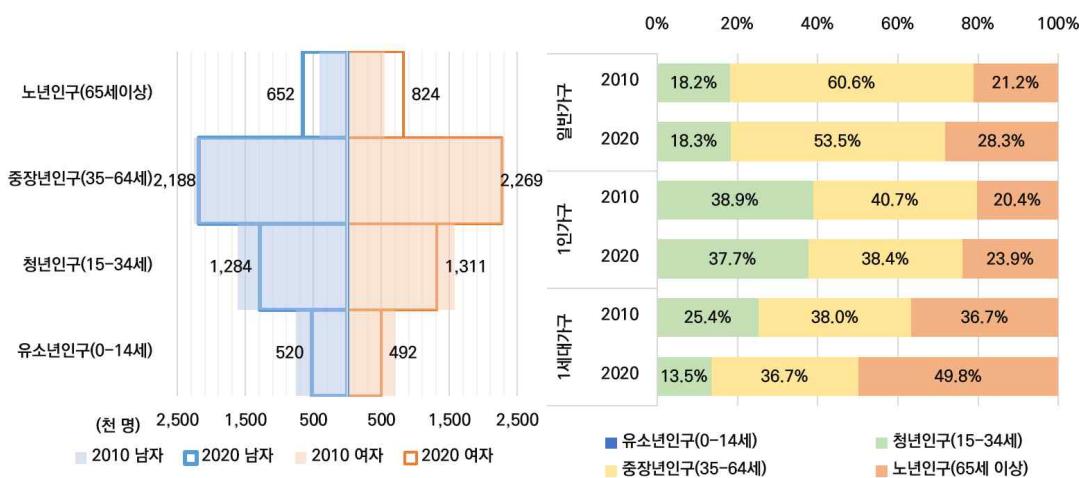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2) 서울시, 2021,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2)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서울 빠르게 고령화 중 - 2020년 15.4%까지

- 2020년 서울 인구는 유소년(0~14세) 10.6%, 청년(15~34세) 27.2%, 중장년(35~64세) 46.7%, 노년(65세 이상) 15.4%로 구성되며, 노년인구는 146.9만 명으로 나타났다.
 - ‘초기노인’(65~74세)은 노년인구의 60%에 해당하며, 2010년부터 연평균 3.1% 증가
 - 7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연평균 6.8% 증가를 나타냄



〈그림 2-6〉 연령대별 인구의 증감과 세대주 연령의 변화(2010, 2020)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연망인구;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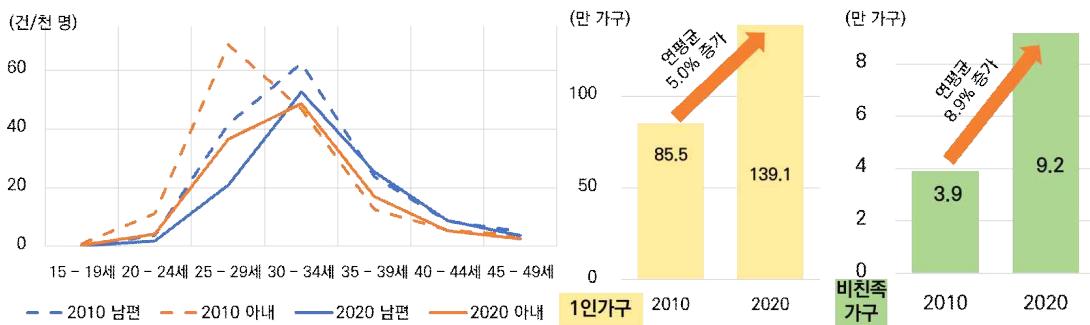
- 2세대 가구는 여전히 서울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형태의 가구이지만, 고령화의 진행과 자녀세대가 독립하면서 소형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 이에 따라 소형가구의 가구주 중 노년인구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 노년 1인 가구는 2020년 26.0만 가구로 2010년 13.4만 가구에 비하여 연평균 6.5% 증가

3) 1인가구 증가 및 새로운 가구 형태 등장

혼인 건수는 2010년의 63.5% 수준,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비율 34.9% 증가세

- 서울의 혼인 건수는 2020년 4.4만 건으로 2010년 7.0만 건에서 연평균 4.4% 감소하였고,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조혼인율)는 2020년 4.7로 2010년보다 2.2 감소하였다.
- 서울의 1인 가구는 2020년 139.1만 가구로 2010년(85.5만 가구)보다 연평균 5.0% 증가하였으며, 비율은 2010년 24.4%에서 2020년 34.9%로 10.5%p 늘어났다.
- 새로운 가구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속되는 가구 규모 축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하여 소형·저렴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1인 가구의 필요 지원에 대한 공유서비스 지원, 문화·여가 지원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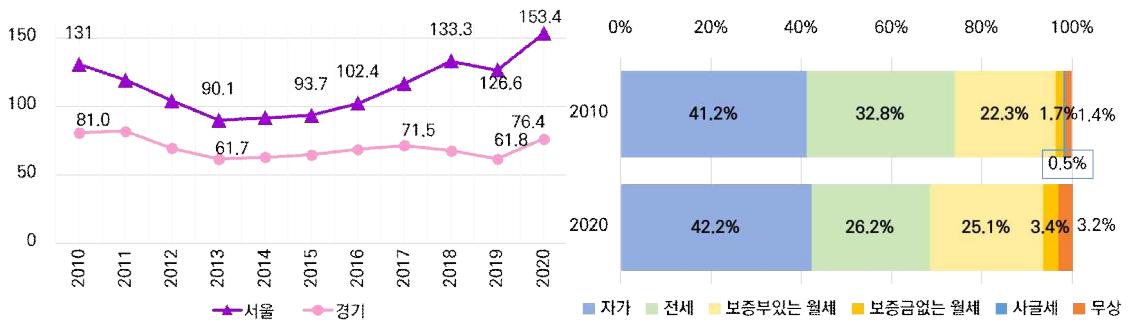
〈그림 2-7〉 1인 가구 및 비친족 가구 현황(2010, 2020)과 연령대별 조흔인율(202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2020; 인구동향조사, 2020

4) 주거비 부담 증가

주택 구입 부담 증가에 이어 전세가격 역시 큰 폭 상승, 주거비 부담 양상은 확산 중

- 서울의 주택가격지수는 2010년의 가격을 기준(100.0)으로 할 때 2013년 94.5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에는 116.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주택의 매매가격 증가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가격지수 역시 2010년 76.2에서 2020년 107.6까지 증가



〈그림 2-8〉 주택구입부담지수의 변화(2010~2020)와 주택별 점유 현황(2010, 2020)

자료: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통계시스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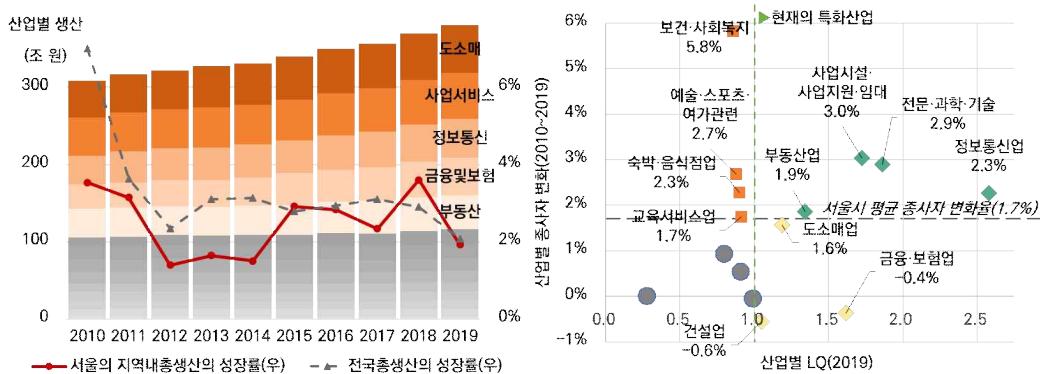
- 가계 소득수준과 비교한 주택구입부담도 증가하였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6년 100(가구소득의 약 25%를 담보대출 상환으로 부담), 2020년에는 153.4로 나타났다.
 - 이는 경기 지역의 주택 구입 부담(76.4)과 비교할 때 2배 차이가 나는 수치
- 2020년 자가비율은 42.2%, 전세 26.2%, 월세 28.5% 등으로 2010년에 비하여 전세 거주 비율은 6.6%p 감소하고 월세와 자가는 각각 2.8%p, 1.0%p 증가하였다.

-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저소득가구의 자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필요하며, 주거비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임차시장을 안정시킬 방안 역시 필요하다.

5) 산업고도화와 지속성장기반 업종 비중 증가

총생산은 저성장 기조이나 산업구조는 고도화되면서 지속성장 기반이 확대 중

- 서울의 지역 내 총생산(GRDP) 2019년 411.4조 원(2015년 가격 기준)으로 총생산은 2010년(333.2조 원)에 비하여 연평균 2.3% 증가하였다.
- 2019년 전체 GRDP에서 사업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3.0%로 추산된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10년 기준 연평균 변화율, 6.1%), 금융 및 보험업(4.8%), 정보통신업(3.2%)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서울의 경제성장 속도는 과거 성장기에 비해 느린 편이지만, 산업의 다양화, 특화산업의 고도화로 기초체력을 갖추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 서울이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등 사회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산업구조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림 2-9〉 서울의 GRDP 성장률 및 산업별 특화도(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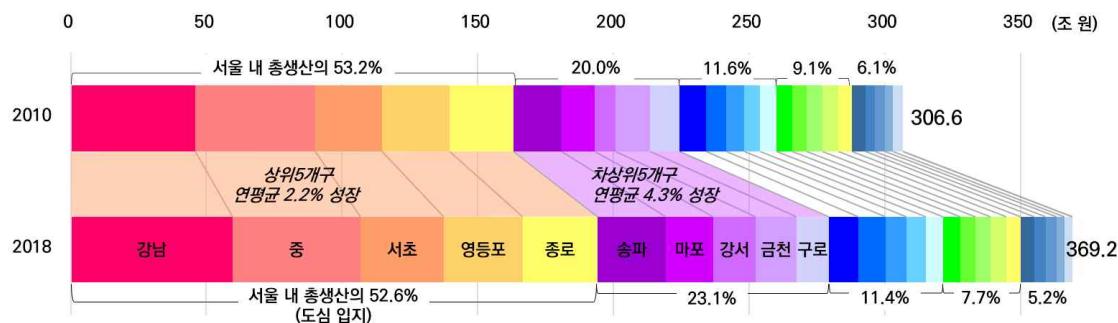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6) 공간구조의 다핵화

다핵화되고 있는 공간구조, 3도심 및 차상위 자치구의 성장세

- GRDP(2015년 가격 기준)가 10조 원 이상인 자치구는 2010년 10개 자치구에서 2018년 12개 자치구로 증가했다.

- 특히, 3도심이 입지하는 GRDP 상위 5개 자치구(강남구, 중구, 서초구, 영등포구, 종로구)의 비율은 2010년 53.2%에서 2018년 52.6%로 담보했지만, 차상위 5개 자치구(송파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의 비중은 20.0%에서 23.1%로 3.1%p 증가



〈그림 2-10〉 자치구별 GRDP의 추이(2010, 2018)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각 년도

- 통행량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서울을 도착지로 하는 2019년의 출근 통행량은 2016년보다 11.0만 건 증가(1.8%)하였으나, 2016년 출근 유입이 많았던 상위 5개 자치구(강남구, 중구, 서초구, 영등포구, 종로구)에서는 2019년 유입 통행량이 6.1만 건 감소(-2.3%)하였다.

- 차상위 5개 자치구(송파구, 마포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는 유입 통행량이 11.5만 건 증가(9.0%). 통행량의 차상위 5개 자치구는 GRDP의 차상위 5개 자치구와 동일



〈그림 2-11〉 자치구별 출근 유입통행량의 추이(2016,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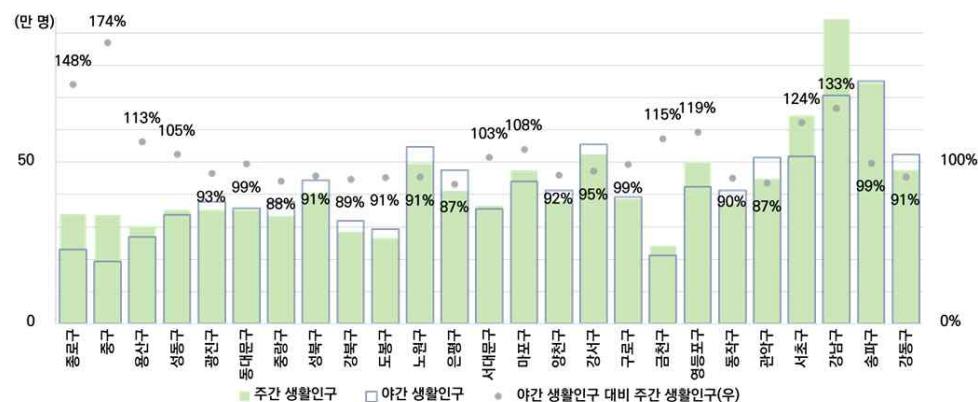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각 년도

- 중심지별 특성에 따라 기능이 고도화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7) 서울의 광역화 심화

수도권의 동반 성장으로 인한 서울의 광역화 심화

- 서울인구는 2010년 1,018만 명에서 2020년 953만 명으로 6.3% 감소했다. 반면, 경기·인천의 인구는 1,429만 명에서 1,615만 명으로 13.1% 증가했다.
 - 전국 인구는 2.9% 증가, 서울 비중은 1.8%p 감소, 경기·인천의 비중은 2.8%p 증가
- 서울의 종사자는 2010년 449만 명에서 2019년 523만 명으로 16.5% 증가했고, 경기·인천의 종사자는 458만 명에서 639만 명으로 39.7% 늘어났다.
 - 전국 종사자는 28.8% 증가, 서울의 비중은 2.4%p 감소, 경기·인천의 비중은 2.2%p 증가
- 인구와 종사자의 분포가 변화하는 가운데, 출근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내부 통행량은 2016년 447만 건에서 2019년 454만 건으로 1.6% 증가했으며, 광역통행량은 224만 건에서 233만 건으로 4.0% 증가했다.
- 2019년 기준 광역통행량 중 서울에서 경기·인천지역으로 출근하는 통행량은 전체 통행의 11.9%,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통행량은 22.0%였다.
- 2020년 서울 생활인구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생활인구의 평균치인 주간인구는 그 외 시간대 머무는 야간인구의 102.9%로 나타났다.
 - 특히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된 종구(174.0%), 종로구(148.0%), 강남구(133.5%), 서초구(124.4%)에서 야간 대비 주간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2-12> 자치구별 주간인구와 야간인구 비교(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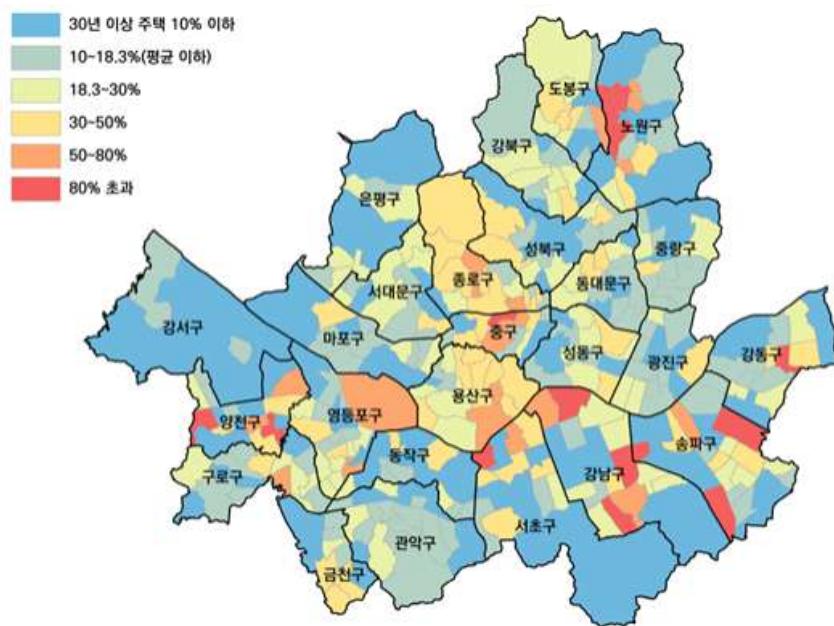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생활인구(내국인), 2020

- 이와 같이, 서울은 생활인구의 활동반경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대도시권에서 서울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 광역교통, 산업, 환경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8) 건축물 및 주택 노후화는 심화되고 신축실적은 저조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절반,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18%

- 2021년 현재 서울 전체 건축물의 49.5%가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나 신축 없이 현재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2024년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비율이 61.8%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3〉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비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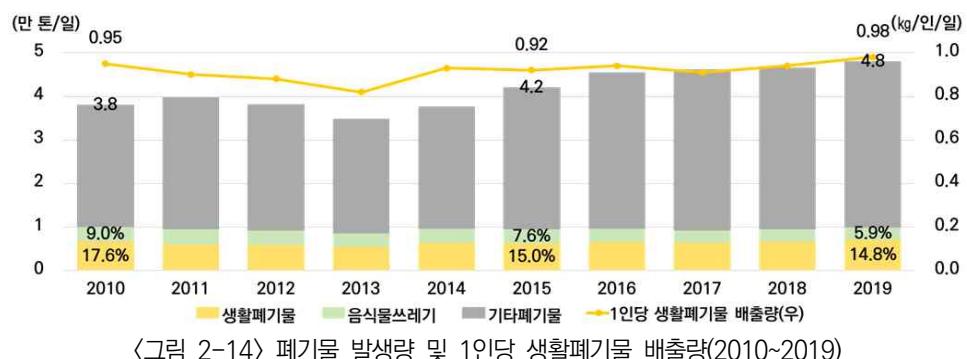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9

- 반면, 2020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총 0.5만 동으로 1999년 0.4만 동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10년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연간 0.7만 동에 그치고 있다.
-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서울 주택호수의 18.3%, 1990년대 건축된 주택은 26.6%로 10년 내 노후주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 특히, 노후주택의 비율은 노원구(33.9%), 양천구(29.7%), 용산구(28.8%), 종로구(26.7%), 영등포구(25.6%) 순으로 나타남
 -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상계 8·9·10동, 반포본동, 오륜동, 잠실7동은 모든 주택의 건축연한이 30년을 초과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수해가 필요한 상황
-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소규모 정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9) 대기질 개선과 폐기물 관리 등 광역거버넌스 차원으로 풀어야 할 과제 발생

□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다시 우려되는 대기오염

-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왔던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가 2025년 예정되면서 폐기물 처리는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 2019년 폐기물 배출량은 2015년보다 0.6만 톤 증가한 4.8만 톤이 배출, 이 중 생활폐기물은 9,847톤으로 2015년에 비해 409톤 증가
- 이후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소비증가 등을 고려하면 폐기물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료: 환경부, 서울시 폐기물 재활용 현황 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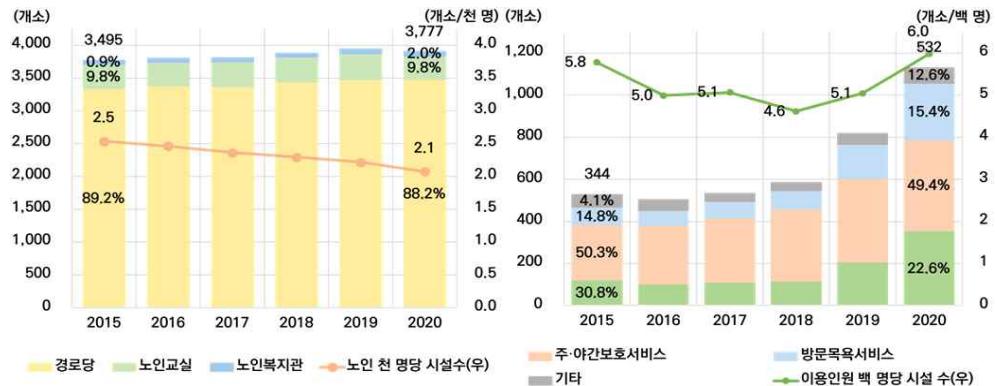
- 팬데믹 기간,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기질 지표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 단기간 고농도 발생으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의보는 발령 일수는 2019년 14일에서 2020년 4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 16일로 다시 증가
- 대기질 개선과 폐기물 감소를 위해서는 서울 대도시권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10) 생활서비스 및 공원녹지 수요 증가

□ 생활서비스 시설은 확충 중, 노년인구를 위한 시설은 수요 증가에 비해 더딘 공급

- 생활서비스 시설의 공급 지표는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 보육시설, 아동·노인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과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병원, 공원 등의 시설도 지속적인 확충 중
- 2020년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15.4%로 최근 10년 사이 비율이 6.0%p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역시 확충되고 있으나, 노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2020년에는 노인 천 명당 2.1개소로 2010년에 비해 0.9개소 감소
- 다양한 생활서비스 시설의 양적 공급은 긍정적이지만, 지역 수요에 알맞은 생활서비스 시설을 도입하여 질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2-15〉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2015~2020)

자료: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여가복지시설 통계, 각 년도;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통계, 각 년도

□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서 부족한 생활 녹지인프라

- 2014년 기준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16.2m^2$ 로 런던의 $33.4m^2$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싱가포르, 베이징, 뉴욕 등과 유사한 면적이며, 파리보다 큰 편이다.³⁾
- 서울은 2020년 기준 $16.87m^2$ 로 1인당 공원면적이 다소 증가. 단, 북한산 및 도시자연공원 등 산지 면적을 제외하면 1인당 공원면적은 $5.71m^2$ 로 감소
-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가공간에 대한 시민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권내 공원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양·질적인 수요변화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2-16〉 세계 주요도시의 1인당 공원면적(2014)

자료: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공원녹지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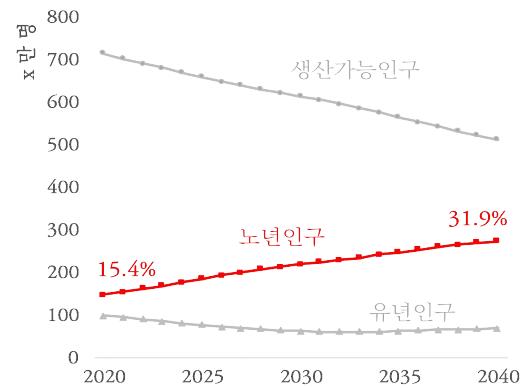
3)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생활인프라 공원녹지 부문 참조 재가공

3. 서울의 미래 여건변화와 과제

1)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

2040년 서울의 고령인구는 약 32%, 늘어나는 복지·의료 수요 대응 필요

- 장기적인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변화 속도는 둔화되는 반면, 기술발전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 서울의 고령화 속도는 빠른 편으로 노년인구 비율은 2018년 기준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17〉 서울시 인구추계(2010-2040)

자료: KOSIS, 장래인구추계

〈204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는 통계청 전망을 반영한 854만 명으로 설정〉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는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성장 등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도시의 환경용량, 인프라 수요 등을 결정
- 2040년 계획인구는 다음의 근거를 고려하여 통계청의 추계인구(중위)인 854만 명으로 설정
 - 첫째, 광역 교통망의 발달로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으며,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교통수단의 발달로 광역 생활권의 범위 확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둘째, 서울의 인구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로 오가며 생활하는 인구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거주 인구로만은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구이동 특성을 보유
- 서울대도시권으로의 공간적 확장, 인접 지역 간 발생하는 생활인구 등 복잡한 현황을 고려하여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인구를 설정

2) 일상의 반강제적 디지털 전환에 대응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민 일상생활 및 도시공간 변화 감지

- ‘19년 갑작스럽게 발생한 팬데믹은 도시의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반강제적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다.
 - 원격의료,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의 등장
 - 중급역량⁴⁾이 2021년 기준, 19년 대비 10.1% 증가한 74.1%로 높은 증가 추세
- 팬데믹이 앞당겨온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생활이 증첩

4) 중급역량(IU디지털발전수준 측정기준):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사용 및 소프트웨어 검색, 설치 등

되는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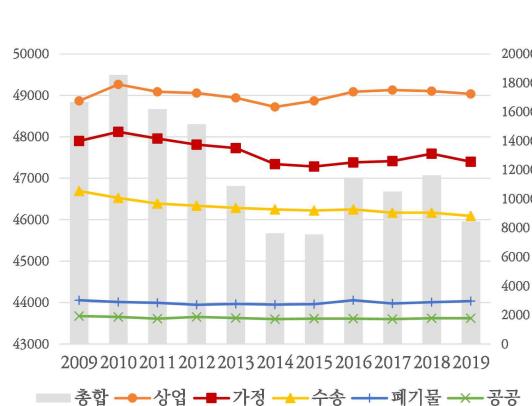
3) 반복되는 팬데믹에 도시공간적 대응

상수화 되는 팬데믹, 회복탄력적 도시에 대한 관심 고조

-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을 마비시켰고 강제적인 거리두기 정책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졌다.
- 전염병에 의한 팬데믹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인 예방 체계와 즉각적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 물리적 기반의 기능 보완, 방역·방재 관련 시설 확충 등

4)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 필요



〈그림 2-18〉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분별 현황,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현재의 도시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표면·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따르면, 상업과 가정 그리고 수송에서의 배출량이 약 84.1%에 달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5)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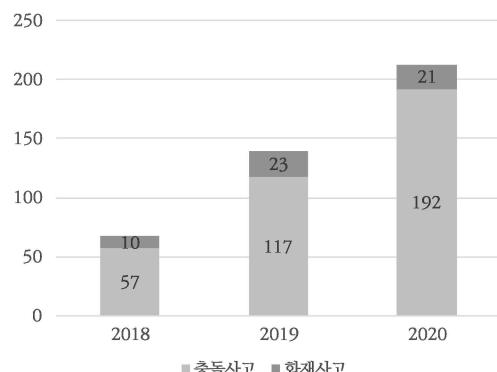
심화되는 글로벌 도시 경쟁, 악화되는 수위도시 서울의 경쟁력

- 현재의 도시들은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맞물려 규모와 상관없이 전 세계 도시들을 상대로 경쟁을 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도시 브랜딩을 통한 평판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하지만, 지난 10년간 서울은 글로벌 파워도시, 세계도시경쟁력 지표 등에서 경제 영역의 순위가 낮아졌고 삶의 질 부문의 평가 역시 더 나아지지 않고 정체 중인 상황이다.

- 심화되는 글로벌 도시경쟁에 대응하여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과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6) 미래교통수단의 등장과 첨단 인프라 요구 증대

자율주행, UAM 등 미래 교통에 공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그림 2-19〉 서울시 전동킥보드 사고 추이
자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자율주행차량, 전동킥보드 등 교통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교통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착 가이드라인이 없어, 위험한 교통 사고가 유발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대다수는 전동 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사고
-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존-신규 교통수단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와 함께 발생할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적인 교통수단 정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7) 시가지 공간의 포화, 개발가용지의 부족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 대응과 성장동력 확보 한계

- 서울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가용지는 고갈된 상태이며, 남은 공간은 주택공급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다.
 -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25%를 제외하면 65%에 해당하는 시가화면적 366km² 중 미개발지는 거의 없는 상태
- 외연적 팽창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콤팩트 시티로의 공간구조 재편을 지향하고 복합 개발을 통해 약해진 도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8) 늙어가는 서울, 도시 정비의 정체에 따른 환경 악화

정비사업 추진동력 저하,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 2038년 서울시 기반시설 노후화 비율은 2018년 대비 2.7배 급증, 1960~70년대 집중 조성된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 2040년, 서울 전체 주택 중 노후 물량 50%로 추정

- 때문에,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성 검토와 개선비용 증가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9) 경직된 서울,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 증대

지역특성과 미래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도시계획 요구

-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미래 융복합 시대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환경을 담아내기에는 자율성·유연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 서울의 고질적인 주거난과 주거비 부담 해소, 도심 속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과거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완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10) 수도권 광역화 현상 가속

교통망 발달에 따른 광역대도시권 공간구조 개편

-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시화 됨에 따라 1일 생활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향후 새로운 광역생활권 조성됨에 따라서 시도 간 인구 유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 2020년 기준, 서울 생활인구 중 경기·인천 인구는 약 174만 명



〈그림 2-20〉 대도시권 생활인구 경로(상위 50개)

자료: 서울생활인구, 2020. 1. 22. 14시 기준

4.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지역간 연대·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스마트 공간 창출, 기술혁신을 강조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수립하여야 한다.
- 2019년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6대 전략에서는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마련,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 등을 강조
- 이에 따라 금번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 지역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미래 성장거점 육성 및 연계를 위한 중심지 기능 혁신, 보행일상권 개념 도입을 통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기반시설 입체화 및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2)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균형발전, 삶의 질, 혁신성장을 강조

-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 2020년 수립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좋은 수도권”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균형발전 도모, 주민 삶의 질 개선, 수도권 혁신성장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특히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고,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및 도로망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적극 감축 및 녹색 인프라 확충 등을 강조하고 있다.
- 금번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전략계획과 공간계획에서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광역화에 따른 수도권 내 교통, 산업 등 네트워크 연계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서울로의 전환 등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3)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중)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강조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도권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다.
- 2019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중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발전목표와 10년 내 우선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수도권의 현안이슈 및 메가트렌트를 고려하여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등 주요 부문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 광역 생활권 단위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구상으로 시·군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 차원의 부문별 계획 기본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광역생활권 단위의 중심지(광역·권역·지역거점), 발전축(교통축), 보전축(녹지축, 수계축)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4)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서울시 각종 균형발전 정책 종합하여 지역간 격차해소 및 특화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제시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2022년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는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추진”을 목표로 하여,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지역간 교통 격차 해소,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 특히 산업·일자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5개 권역별로 전략산업 육성 및 일자리 거점 조성을 위한 이행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재정비하는 서울생활권계획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이행과제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5. 시민이 바라는 서울의 미래

1) 조사 개요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서울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선정하고 그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설정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본 설문조사는 계획 수립 기간 중 시정변화 및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2019년에 실시했던 대시민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실시되었다.
- 설문조사는 1,000명의 서울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의 비율을 사전 설정한 뒤,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표 2-7〉 서울 시민 의견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만 16~65세 서울거주 시민
표본크기	1,0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2. 1. 21. ~ 25.
조사기관	(주)오피니언라이브

〈표 2-8〉 서울 시민 의견 조사 내용

주제	내용
서울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에 대한 만족도 서울의 살기 좋은 도시 점수 평가 부문별 생활환경 만족도
서울의 여건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건변화 별 영향력에 대한 인식
서울의 공간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핵심가치 도시공간의 중요이슈 우선 추진 과제
미래생활 및 공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생활 및 공간변화 예측 현재 생활권의 만족도 향후 희망하는 여가, 업무, 주거, 교통 환경

2) 조사 결과

시민은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미래 서울 도시공간의 핵심 가치로 선호

- 설문조사 결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시민이 뽑은 핵심 가치는 ‘삶의 질’, ‘도시 경쟁력’, ‘균형발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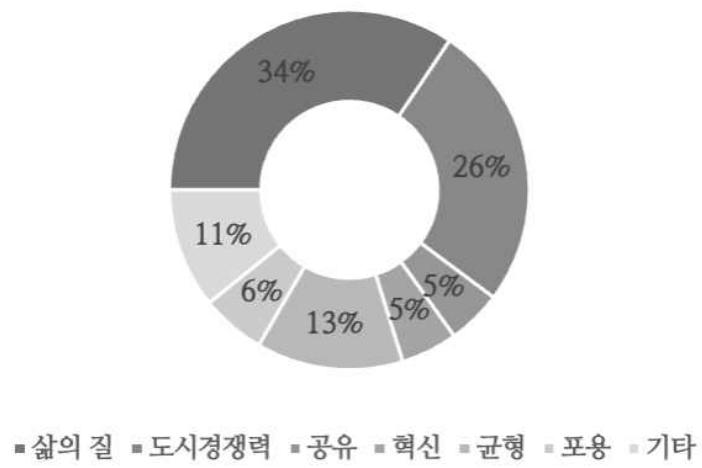
- 삶의 질(지속성·안심·환경, 34.4%), 도시경쟁력(일자리·활력·다양성, 25.8%), 균형발전(발전·성장·조화, 13.2%), 포용(공존·존중·화합, 5.8%), 혁신(기술·산업·융합, 5.1%), 공유(교류·연결·참여, 4.9%)

[삶의 질] 시민의 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

- 디지털 전환에 따라 초개인화된 사회에 대응하여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도시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거주지를 중심으로 도보권 내에 업무·여가·주거·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자족성을 갖춘 일종의 작은 서울들을 구축한다.

[도시경쟁력] 도시의 경제·산업적 지속가능성을 높여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확산, 글로벌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을 지향한다.
- 도시 곳곳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형성하여 특색을 갖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림 2-21〉 서울시민 선호 미래 서울 핵심가치

제2절 2040 서울의 미래상

1. 미래상 개요

1) 미래상 수립의 의의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시민 집단 및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2040년 서울의 미래상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담긴 지향점과 가치, 철학을 기조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하였다.
-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공간에 큰 변화를 유발한 글로벌 팬데믹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등 신규 여건 변화에 대한 대시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2019년 시민이 제안한 미래상⁵⁾에 대한 수정·보완을 추진하였다.

2) 미래상 수립과정

- 2019년 8월, 상대적으로 계획과정에 참여가 어려웠던 ‘참여 소외계층’(빈곤층,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을 별도 발굴하여 미래 서울에 대한 의견을 수렴, 다양한 계층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차별 없는 서울의 모습을 계획하였다.
- 2019년 9월, 2030 서울플랜부터 시작한 시민참여형 계획 기조를 이어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선정하고 계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120인의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선발, 2차례의 숙의 과정을 통해 6개의 미래상(안)을 작성하였다.
 - 시민계획단은 서울 시민 100명과 함께,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광역 시민 20명으로 구성
- 2019년 10월, 미래상(안)에 대한 서울 시민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대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결정된 미래상(안)은 제안서로 작성되어 동월 11일 서울시에 전달되었다.
 - 온라인 설문조사(1,000명)와 엠보팅 설문조사(393명)를 병행하여 실시
- 2022년 1월, 팬데믹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등 신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 2022년 3월,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기존 미래상의 가치와 기조를 토대로 도시·환경·교통 등 관련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미래상이 최종 결정되었다.

5) 2019년 시민이 제안한 미래상: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가능한 쾌적도시 서울

〈표 2-9〉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미래상 수립과정

〈참여 소외계층 의견 수렴〉

- 참여대상: 빈곤층(쪽방촌 주민),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 진행기간: 2019. 8. 9. ~ 9. 7.
- 진행방법: 대상별 지원기관 책임자와의 사전 자문을 통해 간담회 진행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선정〉

- 시민계획단 선발: 지원서 기반 120인 선별(서울시민 100인 + 생활시민 20인)
- 시민계획단 참여 방식: 숙의 방식을 통한 2차례 본회의(2019. 9. 21. & 9. 28.)진행

〈시민 온라인 선호도 설문조사 실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 온라인으로 서울시민(1,000명) 의견 조사 - 조사기간: 2019. 10. 1. ~ 10.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엠보팅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 서울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393명) - 조사기간: 2019. 10. 2. ~ 10. 7. |
|---|---|

〈시민 미래상 제안서 전달〉

- 일자: 2019. 10. 11.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미래상 수정·보완을 위한 대시민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만 16~65세 서울거주 시민
- 표본 수: 1,000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기간: 2022. 1. 21. ~ 1. 25.
- 조사내용

주제	내용
서울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 대한 만족도 - 서울의 살기 좋은 도시 점수 평가 - 부문별 생활환경 만족도
서울의 여건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 변화 별 영향력에 대한 인식
서울의 공간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핵심가치 - 도시공간의 중요이슈 - 우선 추진 과제
미래생활 및 공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생활 및 공간변화 예측 - 현재 생활권의 만족도 - 향후 원하는 여가환경, 업무환경, 주거환경, 교통환경 방향



2.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미래상

1) 미래상 의미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 앞선 과정을 통해 수립된 2040년 서울의 미래상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이며, 이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상에 중요한 지침으로 기능한다.

살기 좋은 나의 서울

- ‘살기 좋은 나의 서울’은 다양화되는 시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주목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가치로 두며, 서울 어디서든 누구나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의미한다.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은 수위도시로서 서울이 가진 국제업무·교류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의경쟁력 강화’에 가치를 두며, 세계도시의 선도적 기준으로서 나아가는 서울을 의미한다.
- 이는 미래 가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핵심 가치’에 대한 응답자의 1순위인 ‘삶의 질’(34.4%)과 2순위인 ‘도시경쟁력’(25.5%)의 응답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기조로 미래상을 구상한 것이다.
-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40년 서울의 미래상인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은 2040년을 목표로 서울시가 추구할 도시변화의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2) 서울도시기본계획 미래상 변화

〈표 2-10〉 서울도시기본계획 미래상 변화

구분	2030 서울플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주체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 대시민 설문조사
미래상 핵심가치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소통·배려	→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삶의 질·도시경쟁력
수립과정	시민계획단 수립 및 결정	시민계획단 미래상(안) 제안 & 서울 시민 설문조사로 수정·보완

제3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미래상인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래 7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2-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구 분	7대 목표		주요 내용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1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보행일상권 조성’	주거·일자리·여가문화·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도보 30분내로 조성
	2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수변 중심 공간 재편’	물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 중심으로 재편
	3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기반시설 입체화’	도심 속 새로운 공간 창출을 위한 사람 중심의 기반시설 입체화 추진
서울의 성장 견인 “도시경쟁력”	4	미래성장거점 육성·연계 ‘중심지 기능 혁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심지 기능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5	기술발전에 선제적 대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신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미래교통 기반시설 마련
대전환시대 미래 서울의 “가치와 방향”	6	미래위기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공간계획의 주요원칙,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서울로의 전환
	7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 ‘도시계획 대전환’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로의 전환

1.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보행일상권 조성’

1) 배경

반강제적 디지털 전환으로 가속화되는 주거·업무·여가기능의 융복합 현상

-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시·공간의 경계를 극복하는 ‘초연결화’ 현상과 ‘초개인화’ 현상이 결합되어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공간과 시간’이 가장 중요한 ‘초맞춤화’ 시대를 열었다.
-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택근무와 이더닝, 온라인 상거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일상생활권은 주거중심에서 다양한 도시기능을 포함하는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 변화하는 생활양식을 담을 새로운 도시공간 요구

- 현재의 도시는 스마트 플랫폼 산업에 의해 동네 구석구석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

고 있고, 공간의 제약없이 24시간 어디서든지 여가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자율주행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등 새로운 이동패턴의 수요가 늘고 있다.

- 개인이 선택하는 유연한 근무시간과 업무공간, 스마트 기술로 인하여 늘어나는 여가시간의 활용, 업무·쇼핑·교육·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복합주거공간 등 변화하는 미래 생활양식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으로 도시기능을 해결하는 ‘보행일상권’ 조성

- 뉴노멀시대 미래 서울은 초연결과 용도복합이 이루어지는 ‘융복합 도시’, 보행과 PM 등 저탄소 미래교통수단이 중심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장소가 도시공간의 중심이 되는 ‘마이크로시티’ 경향에 대응해야 한다.
- 주거, 업무, 여가 기능이 통합·연계하여 변화된 생활양식을 통해 보행권 단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자족적인 생활권을 구성하는 ‘보행일상권’이 미래 변화된 삶의 양식을 담을 그릇이 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특화 기능 및 공급 서비스 계획, 주거환경 개선, 공공공간 조성, 접근성 확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대한 선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보행일상권의 개념〉

- ‘보행일상권’이란 내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주거를 비롯한 업무·소비·여가·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도보 30분 내로 걸어서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생활권을 의미
- 디지털 대전환과 팬데믹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시민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의 새로운 개념으로, 더 이상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나’의 생활 반경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 기존에 수립한 116개 지역생활권을 기준으로 주거·상업·업무·여가문화 기능이 융복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자족적이고 탄소중립적이며 감염병에 안전한 새로운 서울형 생활권 단위를 의미

2) 추진전략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자립적 생활권 형성

- 도보 30분 반경에서 주거·일자리·여가·상업 등 다양한 도시생활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자립적 보행일상권을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 이를 통해 ‘주거용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도시기능을 보행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인간 삶의 기본인 ‘주거’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복합·기능하는 양질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업무·교육·쇼핑·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확장
- 교통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업무환경을 조성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보행일상권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업무거점을 조성
- 공원녹지·수변과 같은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자연·문화시설에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여가환경을 조성

누구나 이동이 편리한 보행 중심의 통합형 네트워크 구축

-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생활권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집적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중심지이자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 걸어서 누리는 보행일상권인 만큼 ‘보행’을 중심으로 근린 모빌리티(자전거, PM 등)를 통합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보장한다.
- 생활권내 이동 네트워크는 녹지, 수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
- 도로, 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지상부는 보행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하 공간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보행일상권에서 자립적인 자원순환 체계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목표로 보행일상권 단위에서부터 제로 에너지 도시를 실천하는 지역단위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 특히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분산형 복합자원순환시설을 확충하여 선순환적인 공간체계를 마련한다.
- 자원재활용 체계의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생활권까지 공간단위에 따른 적합한 자원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보행일상권의 실현은 기 수립된 지역생활권의 재정비를 통하여 추진

- 보행일상권 실현은 기준에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심복합기능을 집적하고 물류거점 및 생활SOC 등을 설치하여

생활거점으로서의 중심기능을 강화

- 주거지는 향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며, 도심형·체류형 주거, 스마트하우징 기법을 활용한 모듈형 주거 등 다양한 미래수요 대응형 주거기능 도입
- 생활권 전체를 녹지와 수변이 어우러진 오픈스페이스로 구성하여 다양한 여가수요에 대응
-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조성모델 제시한다.
 - 일자리 중심, 문화여가 중심, 산업공간 중심, 주거 중심 등 지역생활권 특성을 반영
 - 서울시 전역을 100여개 이상의 작고 자족적인 일상 생활권으로 조성하도록 유도

유연한 용도지역 계획으로 공간 효율성 극대화

-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자립적인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권 계획과 연계하여 주민과 자치구 중심으로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⁶⁾을 활용하여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그림 2-22〉 보행일상권 개념도

6) 서울은 360여 개의 역세권과 100여 개의 공공 보건시설, 1,000여 개의 지역 보건센터와 같은 공공의료 시스템, 1,000여 개의 공공/지역문화시설과 400여 개의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 2,900여 개의 공원녹지와 423km의 하천을 보유 중

2.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수변 중심 공간 재편’

1) 배경

수변 공간의 잠재력을 통한 도시 활력 제고 필요

- 서울은 한강과 4대 지천 등 풍부한 수변공간을 지니고 있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도로와 철로 등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공간과 단절되고, 녹지 중심의 획일적인 이용행태라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수변 공간의 잠재력을 발굴해 시민 생활에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필요한 도시기능을 도입하여 새로운 가용공간으로서 수변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그림 2-23〉 서울의 하천현황(법정)

2) 추진전략

시민 일상생활의 중심으로서 물길과 수변 공간의 잠재력을 제고

-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모두 경유하는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이자 지역과 일상의 중심으로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한다.
- 수변의 명소화와 더불어, 수상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수변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수변을 도시의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조성한다.

- 수변 명소 조성 → 수변 명소 접근성 강화 → 수변 명소 네트워크 구축 → 수상 활용성 강화

물길의 규모와 입지별로 수변 공간 활성화 전략 수립, 서울 전역에 수변 문화 확산 도모

-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소하천·지류, 4대 지천, 한강의 특화된 수변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부문별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수변 활성화 전략 수립 시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변지역의 높이·밀도 등 관리 기준을 포함
- 소하천·지류는 일상 속 감춰진 수변 공간을 발굴하여 테라스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친화 생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수변을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 4대 지천(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탄천)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변 거점을 조성하고 주변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여가와 친수공간, 일자리가 결합된 권역 발전의 중심으로 조성한다.
- 한강은 수변과 도시공간 간의 경계를 허물어 일체화된 수변도시로의 조성을 도모하고, 업무·산업·관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변 특화거점 조성 및 거점 간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울 전체의 활력을 제고한다.

공원·녹지축의 연계를 통한 생활문화 중심지로서 수변 공간의 역할 강화

- 도로 등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녹지축·하천축을 복원하고, 소하천·지류-4대 지천-한강의 위계별 전략 수립 추진 시, 주변 정비사업 및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구체화한다.
- 공원·녹지체계를 연계한 공공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을 더욱 쾌적한 생활문화 중심지로 조성한다.
 - 수변이 공원녹지축과 확대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공
 - 수변의 재해방지와 안전성 증대, 자전거도로 확폭과 보도 분리 등 수변의 안전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3.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기반시설 입체화’

1) 배경

철도 중심의 성장을 거듭한 서울, 도시 내 철도에 의한 보행 단절 및 주변 주거환경 악화

- 도심의 철도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보행체계 단절과 지역 환경 악화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초래하는 시설물이 되었다.
 - 특히 지상철도 대부분이 시가지화가 높은 서울 시내를 관통하면서 지역 간 물리적인 단절과 도심 공간 활용을 제한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 서울 내 지상철도 연장: 총 101.2km(국철: 71.6km, 도시철도: 29.6km)

가속되는 수도권 광역화, 서울의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필요

- 하지만 GTX 등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수도권 광역화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간 연계성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초래하는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추진전략

지상 단선철도로 단절된 지역 내 연결성 확보

- 소폭 단선철도로 지역 내 공간 단절이 발생하는 지역에 육교와 경사형 이동 수단 등 보행 중심의 연결 수단을 설치하여 단절된 보행체계를 연결한다.

철도 상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연결 및 공간 창출로 거점 기능 고도화

- 철도의 지하화 및 상부공간의 데크 활용을 통하여 지역 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서울 중심부 내 새 공간을 창출하는 등 가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 주요 거점 역사와 차량기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여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 개발로 지역 중심역할을 부여한다.
- 서울 내 차량기지 면적: 4.6km²(여의도 면적의 약 1.5배)

서울 전역의 지상 철도에 대한 단계적 지하화 검토, 단절된 동-서 지역 통합

- 노후하고 단절된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의 미래 성장중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으로 단계적인 철도 지하화를 검토한다.
- 재원 확보를 위해 지상철도 부지의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그림 2-24〉 서울의 지상철도 현황 및 잠재력

4. 미래성장거점 육성·연계, ‘중심지 기능 혁신’

1) 배경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간혁신으로 유연한 미래 변화 대응

- 서울은 고도성장기에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였으나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 가용공간 부족, 계획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다.
- 이에 기존의 경직되고 일률적인 제한과 규제보다는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가용지를 확보하는 등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여가가 융복합된 중심지에 대한 요구 증대

- 개인의 삶의 질과 여가생활 등 질적인 측면이 중요시됨에 따라,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여가 등이 융복합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시작했다.
- 서울시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 시, 중심지 와 산업거점을 연계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추진전략

3도심(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중심으로 중심지 기능 고도화

- 3도심을 중심으로 미래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지역 간 연계, 입체복합개발 등을 추진하여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서 중심공간의 기능 고도화를 도모한다.

미래 신성장 산업 거점과 중심지 체계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유도

-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중심으로 중심지 체계와 주변 산업자원을 연계하여 분야 간 연계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 청년첨단 혁신축(동북권), 감성문화 혁신축(서북권), 국제경제 혁신축(서남권), 미래융합 혁신축(동남권)

정성적 계획지원 체계로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 구상

- 미래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공간 수요에 대응하고, 정량적·규제적 접근보다는 정성적 계획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5. 기술발전에 선제적 대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1) 배경

미래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도시 활동 변화 및 공간구조 재편 대비

- 빠르게 진화하는 미래 신 교통수단은 도시공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도시 내 이동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 내 다양한 통행 행태가 공존하는 포용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미래교통수단 정착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지원 필요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통은, 통상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수단 도입이 된 다음 준비하기보다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구상이 요구되며, 새로운 도시 인프라 확충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추진전략

자율주행 자동차 본격 운영 체계 구축

- 자율주행은 현재 제일 가시화되고 있는 미래 교통기술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간선도로급 이상 도로에서 운영 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 2040년까지 서울 전역 자율주행 운행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 2040년까지 서울 전역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환경을 구축하고 수송 분담률 10%를 달성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 기반 마련 및 터미널 확충

- 도심에서 김포공항까지 시범노선을 운영하는 등 상용화 노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한강, 지천 등 주요 수변 공간 중심으로 광역노선을 확보한다. 또한 UAM 인프라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및 도시계획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UAM 시범노선을 운영하고, 한강 등 주요 수변 공간 중심에 단계적 광역노선을 확장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 구축

- 도심 및 광역거점에서는 서울 내부와 외부의 연계를 위한 미래 교통과 기존 교통을 연결 하는 시설을 도입한다. 또한 교통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물류, 상업 등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역 거점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도입한다.

공중, 지상, 지하 등 다차원 新물류네트워크 구축

- 도심 내 물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공중 활용을 위한 드론 배송 인프라 조성, 지상부의 물류 로봇 배송, 지하철을 활용한 지하 배송체계 구축 등 ‘공중+지상+지하’를 모두 활용하는 ‘3차원 新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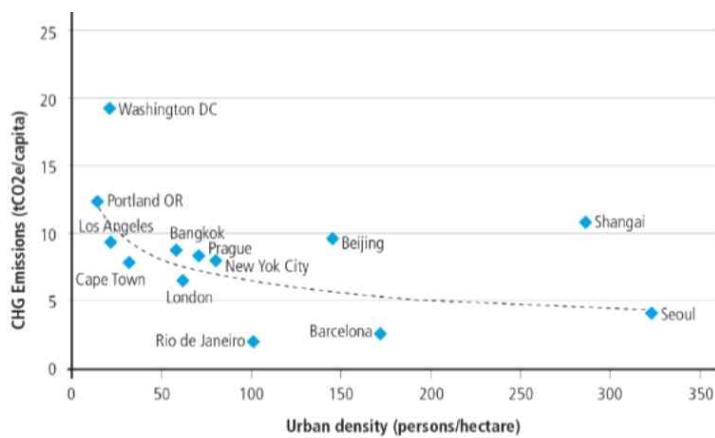
〈그림 2-25〉 수직적·수평적 확장을 통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6. 미래위기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1) 배경

전(全)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도시 차원의 대응 필요

- 서울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6,685천 톤CO₂eq로 2005년 배출량에 비해 5.6%(276만 톤CO₂eq) 감소하였으며, 서울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4.7CO₂eq/인으로 국가의 13.8 톤CO₂eq/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4년 기준 서울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4.5CO₂eq/인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⁷⁾.



〈그림 2-26〉 세계 주요 도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World Bank, 2014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는 21세기에 전(全)지구적으로 가장 위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국제·국가·도시의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파리협정(2015)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136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뉴욕, 런던 등과 같은 많은 글로벌 도시에서 탄소중립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추진중이다.
- 우리나라는 2020년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2020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선언에 따른 부문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40%, 2040년까지 70% 감축목표를 제시하였고, 2022년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22~’26년) 2005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음

7) 황인창 외, 2020, 파리협정 이행 위한 서울시 ‘2050 탄소중립’ 전략, 서울연구원, pp6-9

- 특히, 서울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과 수송 부문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2026년까지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100만호를 추진,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신규건물 제로 에너지 건물(ZEB) 의무화를 통해 기존 및 신규건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촉진
 - 수송부문 배출감축을 위해 전기차 비중을 2026년까지 10%(21년 5.2만대 → '26년 40만대)로 확대하고, 22만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계획 중(21년 2만기)

시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요구 심화

- 서울은 인구, 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로 기온 상승, 폭염, 집중호우, 태풍, 한파 등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후위험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특히 다양화·복합화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해 전통적인 자연·사회재난의 범주뿐 아니라, 신종 복합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다면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2) 추진전략

탄소중립·기후 위기 적응대책은 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주요 원칙으로 고려

- 탄소중립은 돌이키기 어려운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에 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포괄적 '원칙'으로 확립한다.
 -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든 예산사업에 고려·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기후예 산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
- 모든 실·국·본부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이러한 원칙 수립과 기본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가뭄 등과 같은 기상재해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수립 시 주요하게 고려한다.

장기적·구조적 전환을 위해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탄소중립·기후 위기 적응대책 반영

-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책은 개별 사업 단위로 마련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 및 도시 인프라 전반에서 더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토지이용 공간구조 개편,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계획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한다.

-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내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도시 에너지 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한다.

미래위기 대응·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와 시스템 구축

- 기후 위기, 도시 재난 등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실·국·본부 간 원활한 협력과 정책 결정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개별 부서만의 사업과 정책이 아닌, 다부서·다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적인 관리책 마련
 - 명확한 정보공유와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통해 전방위적인 안전·방재체계 구축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의 성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집계할 수 있는 종합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7.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 ‘도시계획 대전환’

1) 배경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도시공간, 경직된 도시계획의 근본적 한계 직면

-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에 따른 주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도시 곳곳에서 감지되는 한편, 물리적 공간을 구축하는 도시계획은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변화되는 도시의 미래 모습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체계 요구

- 과거 산업화 초기에 만들어진 용도지역제는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전, 토지의 기능을 선도적으로 규정하는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개발 시점의 시장수요와 괴리가 있다.
-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높이 관리는 단조로운 경관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추진전략

도시계획체계 재정비를 통한 용도지역 운영·관리의 유연화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경직된 용도지역의 관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도시기능을 유연하게 도입하는 새로운 도시관리방향으로 ‘Beyond Zoning Seoul’을 추진하여, 도시공간과 토지의 융복합적·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 이를 위해, 허용 용도와 밀도를 규정하는 현 용도지역제의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역 간 칸막이를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지자체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용도와 밀도 규정에 대한 완화를 추진한다.

용도지구·구역의 유연한 운영으로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다기능 복합지역 조성

- 미래 도시 공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관리의 유연화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 차원에서의 정성적 높이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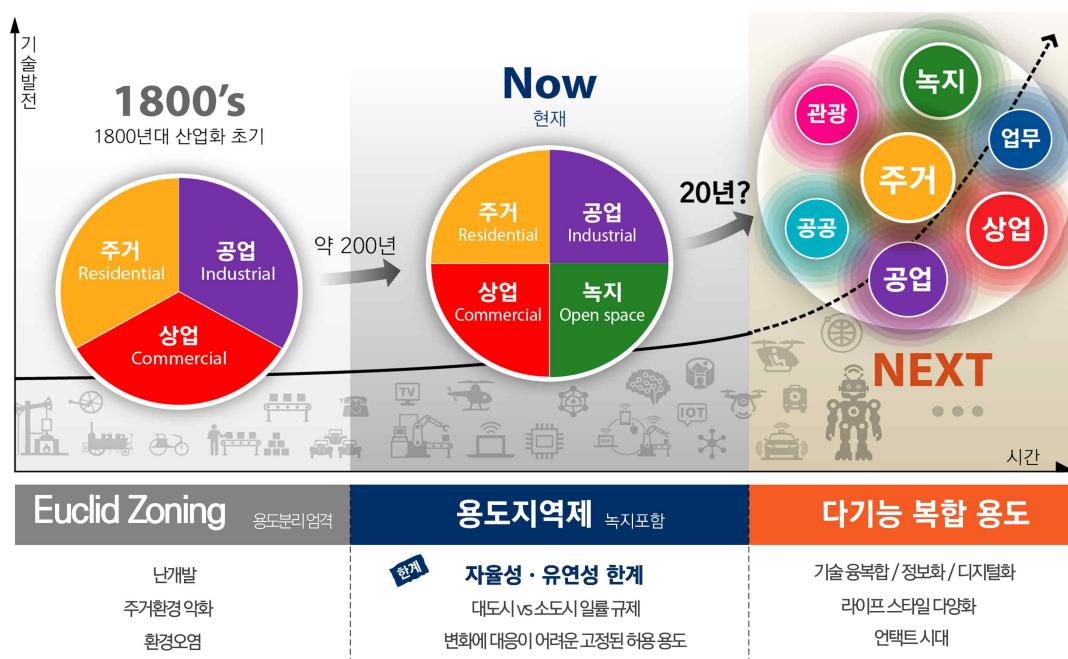
- 기존의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높이 규제가 아닌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구, 교통, 역사, 문

화 등 인문학적 특성, 산업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 잠재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높이 관리를 도모한다.

- 절대적인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가 서로 연계되는 입체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지 특성 및 계획내용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도시경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미래 도시변화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연구 추진

- 미래 변화 및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용도지역제의 유연한 운영·관리를 위해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하는 ‘서울형 新 도시계획체계’를 연구하고, 정부와 협의 및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논의를 통해 검토해 나간다.



〈그림 2-27〉 기술의 발전과 용도지역제의 변화

제3장 부문별 전략계획

제1절 개요

제2절 주택·정비 부문

제3절 경제·산업 부문

제4절 기후·환경 부문

제5절 안전·방재 부문

제6절 교통·물류 부문

제7절 사회·문화 부문

제1절 개요

1. 개요

시민 의견과 서울시 관련 부서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 개편 필요

- 2014년, 2030 서울플랜에서는 시민 친화적인 계획구조를 위해 핵심 이슈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였으나, 핵심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과 서울시 실·국·본부의 부문별 계획 간 연계방안이 부재하여 계획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미래 서울의 과제를 토대로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부문별 전략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관련 실·국·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3-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부문별 전략계획의 역할

2. 구성 방향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서울형 부문별 전략계획’으로 재구성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미래상과 7개 목표를 실현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 실·국·본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서울형 부문별 전략계획’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상 부문인 ‘도심 및 주거환경’, ‘기반시설’,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녹지’,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기조와 서울의 실정에 맞춰 ‘주택·정비’, ‘경제·산업’, ‘기후·환경’, ‘안전·방재’, ‘교통·물류’, ‘사회·문화’의 6개 부문으로 재구성
- 이를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주택, 교통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계획과 함께 경제, 문화, 복지 등 비물리적인 인문·사회적 방향과 가치를 함께 담는 종합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1〉 서울형 부문별 전략계획의 개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지침 상 부문	서울형 부문별 전략계획	관련 실·국·본부
도심 및 주거환경	1. 주택·정비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2. 경제·산업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디지털정책관, 관광체육국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	3. 기후·환경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등
공원·녹지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4. 안전·방재	안전총괄실 등
기반시설	5. 교통·물류	도시교통실 등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6. 사회·문화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등

* 경관 및 미관 관련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계획의 실현성 강화와 활용도 제고 목표

- 부문별 전략계획은 7대 목표를 실현하고 실·국·본부의 실효성 있는 지침서로 기능하기 위해 실제 관련 부서와의 방문 면담 및 서면 의견 수렴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
- 이를 통해 7대 목표뿐 아니라 관련 부서의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계획의 실현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3-2〉 6개 부문별 목표와 전략(24개 목표, 70개 전략)

1. “주택·정비” 부문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유도	1-1-1	저이용·유 휴지 활용 등 다양한 도시 계획적 수단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 활성화
	1-1-2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강화
	1-1-3	주변 지역과 상생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1-1-4	중심지 특성을 반영하고 복합기능을 강화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1-1-5	정비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여 공공성 확보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고도화	1-2-1	적정한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한 기준과 지원방안 마련
	1-2-2	거주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및 거주자 친화적인 주거공간 개발
	1-2-3	주거 안정 측면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첨단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	1-3-1	주거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주택 개발 기반 구축
	1-3-2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및 장수명(長壽命) 주택 공급 유도 및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	1-4-1	다양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복합 커뮤니티 거점 조성
	1-4-2	주민주도 주거환경 개선과 재생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 지원·관리
	1-4-3	수변 친화적인 주택 개발 계획으로 지역에 열린 수변 공간 확보
2. “경제·산업” 부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	2-1-1	미래 신기술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지속적 확보
	2-1-2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변화를 담는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
	2-1-3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금융 산업 선도
	2-1-4	스마트 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을 위한 스마트 앱커시설 도입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2-2-1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지원
	2-2-2	공익을 추구하는 창업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
	2-2-3	대학가 중심의 캠퍼스타운 조성 및 미래 청년 인재 양성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	2-3-1	디지털 기반 미래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2-3-2	역동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
	2-3-3	MICE·의료관광 등 다양한 산업 연계를 통한 관광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2-4-1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 강화 및 공동 협업 확대
	2-4-2	노동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지원 제공
	2-4-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3. “기후·환경” 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	3-1-1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적극 적용
	3-1-2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활용과 친환경 수송 차량 및 관련 인프라 확충
	3-1-3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
	3-1-4	대기 환경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배출원 관리체계 강화
건강한 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자립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	3-2-1	자원순환·관리 자립을 위한 분산형 폐기물처리 시설 구축
	3-2-2	기후 행동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 행동 활성화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	3-3-1	건물 에너지 분야 효율성 개선 및 도심 속 생물 다양성 확보
	3-3-2	지속 가능한 통합 물순환 체계 구축
다양한 수변을 경험할 수 있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3-4-1	수변 공간을 생활의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3-4-2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른 수변 공간 활성화 전략 마련
	3-4-3	지역 맥락을 고려한 수변 공간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표 3-2 계속〉 6개 부문별 목표와 전략(24개 목표, 70개 전략)

4. “안전·방재” 부문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 대처를 위한 전 방위 방재체계 구축	4-1-1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난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4-1-2	전통적인 자연·사회재난의 범주를 넘어선 신종 복합재난 대비
	4-1-3	건강위험물질로부터 안전한 시민 보건 시스템 구축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속 안전 환경 구축	4-2-1	보행 친화적 생활환경을 위한 안전한 이동 네트워크 구축
	4-2-2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4-2-3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구축
안정적 도시생활을 보장하는 의료복지체계 구축	4-3-1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복지체계 구축
	4-3-2	수요자 중심의 생애과정별 건강보장 지원체계 구축
	4-3-3	안전한 시민보건시스템 구축
도시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고도화	4-4-1	대중교통 노후시설 교체 및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4-4-2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4-4-3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 구축·정비

5. “교통·물류” 부문

미래교통수단과 융합을 위한 선제적 교통환경 구축	5-1-1	신 교통수단·기술발전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정비
	5-1-2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지속 추진
	5-1-3	다양한 이동 수단의 기능 정립 및 교통 네트워크 마련
	5-1-4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기반 마련 및 터미널 확충
도시 이동성 효율화를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연결체계 구축	5-2-1	철도망 확충 및 고도화로 3도심 간 직결체계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5-2-2	노선버스 운영 효율화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지속기능성 확보
	5-2-3	주요 거점 환승시설 개선 및 추가 확대를 통한 광역화 대응
스마트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 도모	5-3-1	입체적 개발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 지원
	5-3-2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스마트 도시물류체계 구축
보행자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5-4-1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지속 추진
	5-4-2	교통수단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6. “사회·문화” 부문

시민이 함께 사는 환경을 위한 지역 공동체 문화 정착	6-1-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6-1-2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공간과 서비스 제공
모두의 동등한 생활을 위한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	6-2-1	평등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6-2-2	모든 시민의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 보장
	6-2-3	다양한 사회 구성원 존중 및 인정
시민 일상생활의 여유를 위한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6-3-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체계 정착
	6-3-2	생애별달단계와 생애전환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6-3-3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고령사회대응과 세대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6-4-1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돌봄 강화
	6-4-2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및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제2절 주택·정비 부문

1. 개요

- 서울의 인구는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주거비로 인해 시민의 비자발적인 탈(脫)서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한편, 기술발달로 인한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교육·여가 등 일상생활이 공간에 구애받지 않게 되면서 주거공간과 균린 환경이 향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에 대응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직주근접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도시관리 체계 구축 및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 을 공급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서비스 체계 를 고도화를 도모하였다.
- 또한, 기술 수용의 방향과 가치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주 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주택을 개발 및 공급한다.

2. 세부추진 방안

〈표 3-3〉 주택·정비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	전략
1-1.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 정비사업 유도	1-1-1 저이용·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 활성화 1-1-2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강화 1-1-3 주변 지역과 상생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1-1-4 중심지 특성을 반영하고 복합기능을 강화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1-1-5 정비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여 공공성 확보
1-2.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고도화	1-2-1 적정한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한 기준과 지원방안 마련 1-2-2 거주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및 거주자 친화적인 주거공간 개발 1-2-3 주거 안정 측면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3. 첨단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	1-3-1 주거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주택 개발 기반 구축 1-3-2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및 장수명(長壽命) 주택 공급 유도 및 확대
1-4.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	1-4-1 다양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복합 커뮤니티 거점 조성 1-4-2 주민주도 주거환경 개선과 재생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 지원·관리 1-4-3 수변 친화적인 주택 개발 계획으로 지역에 열린 수변 공간 확보

1-1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 정비사업 유도

1-1-1 저이용·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 활성화

- 저이용·유휴지와 기반시설 등 서울시 내 공공자산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게 운용하여, 역세권 개발, 유휴시설의 주거 용도 전환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적용한다.
 -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등 용도지역 체계의 유연한 운영과 유휴시설의 용도 전환 및 복합화 검토
- 주택공급·재고·관리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 데이터를 통합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택공급 관리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1-1-2 부담가능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강화

-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리모델링 지원형 안심주택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확대한다.
 - 각종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로 물량을 확보하고 저밀·저이용 국공유지 활용, 시설의 복합개발이나 용도전환 등으로 건설·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확대
 - 서울 전역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물량과 연동한 자치구 지원체계 마련
- 공공주택 공급 시 민간 토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를 운용하고, 건축제한·주차장설치 완화, 보조금, 용자·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민간 참여 시, 정책대상의 입주, 저렴한 임대료 부과, 장기 거주 보장 등 공공성 확보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신규 녹지축이 연계되도록 공원·녹지 입지를 유도

1-1-3 주변 지역과 상생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시, 주거공간이 도시 맥락과 어우러지고 주변 지역과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 대규모 단지 유지에 따른 공간 단절을 해소하고 아파트단지 경계부 가로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마련

- 계획 수립 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자연적인 대기 순환을 고려한 시설물·녹지 배치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사업구역과 주변 지역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며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높이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생활SOC와 공공임대상가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보 및 가로변 저층부 배치를 유도한다.
 - 공원·녹지는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기존 녹지축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
- 공동주택 재건축 시,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과 지역 경관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를 적용한다.

1-1-4 중심지 특성을 반영하고 복합기능을 강화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 도심의 특성을 고려하고 도심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지역 여건에 부합한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을 적용하여 산업 공간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 도심 제조업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도심 산업 활성화 및 혁신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 도심에 집적된 귀금속, 인쇄, 패션, 봉제, 기계금속 등 제조업 기반의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 집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 용도, 임대산업시설 확보비율 상향 적용 등 도심 제조업을 유지·지원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 마련
- 광역중심과 역세권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 주거기능과 생활SOC, 생활편의기능을 확충한 복합개발로 직주근접형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1-1-5 정비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여 공공성 확보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
 - 재건축사업의 소형임대주택 의무화를 재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자원 확보
 - 공공기여로 공급되는 공적자원은 시민 접근성, 효용성을 강화하여 공공성이 높은 시설로 조성
- 서울시에서 공공기여를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1-2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고도화

1-2-1 적정한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한 기준과 지원방안 마련

- 현행 기준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열악한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보건성·편리성·쾌적성이 반영된 ‘서울형 적정 주거기준’을 개발한다.
 - 다양한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의 물리적 환경(면적, 방 수, 주택 구조, 채광, 통풍, 설비, 성능 등)과 주변 환경(교통, 공원·녹지, 생활SOC 등 공급 현황 및 접근성·연계성)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기준 개발
- ‘서울형 적정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 신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한다.

1-2-2 거주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및 거주자 친화적인 주거공간 개발

- 거주자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한다.
 - 홀몸 어르신을 위한 도배·장판 교체, 전구 교환, 집기 수리 등 주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가스·동체 감지 등 안전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안전 보장
 - 노인복지와 청년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세대 간 주거 공유모델’을 확대·공급하며 지속적인 관리 추진
 -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주거실태조사 및 지원 서비스 개발
 - 청년과 자녀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
- 연령과 신체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무장애 건축 등 거주자 친화적인 주거를 개발한다.

1-2-3 주거 안정 측면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있는 권리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및 적정성, 임대료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 주택 수선, 임대료 증감 등 분쟁의 소지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 마련

1-3 첨단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

1-3-1 주거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주택 개발 기반 구축

- 미래 IoT 기술개발 및 정착을 위한 정부·기업·연구소의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지능형 주택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 주택 관련 신기술을 다양하게 발굴·개발하고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평가·검증·보완·실용화 단계를 추진
 - 주거생활 관련 개인정보 수집·활용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고령자·장애인 등 기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적용 단계별 가이드라인 개발

1-3-2 지속가능한 친환경 및 장수명(長壽命) 주택 공급 유도 및 확대

- 패시브 하우스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친환경 주택으로의 개량 및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탄소 배출저감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
 - 건물에너지 분야의 화석연료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패시브하우스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 적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가변형 주택, 모듈러 주택, 골조내장 분리형 주택 등 거주자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1-4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

1-4-1 다양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복합 커뮤니티 거점 조성

- 서울의 모든 가구와 세대가 수준 높은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별로 이용과 접근이 편리한 곳에 생활SOC를 비롯하여 주거·창업·문화·복지 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집적한 지역복합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 지역복합커뮤니티 거점 내에 충분한 녹화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녹지 네트워크 연결

- 지역복합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조성하거나 생활SOC 확보 시, 저이용·미이용 되는 국공유지, 지하 및 수변 공간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시설 종류를 결정
 - 단절된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및 새로운 도시공간자산 확보
 - 보행일상권 내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존 시설과 새롭게 발굴된 공간자산을 체계적으로 맵핑·관리

1-4-2 주민주도 주거환경 개선과 재생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 지원·관리

- 저층주거지에서 건축협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시,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고 주변 지역을 고려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 주거환경 개선 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여, 공동개발 등에 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
 - 일조·채광, 조망, 보행환경 등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주변 지역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이나 저층주거지 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및 신규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입지 우선 고려
-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된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유도·지원한다.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의 다양한 방식의 사업과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주민 스스로 재생사업의 추진·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집수리, 리모델링, 개별신축, 건축협정, 각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저층주거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 정책 지속

1-4-3 수변 친화적인 주택 개발 계획으로 지역에 열린 수변 공간 확보

- 수변 인접 지역의 주택 개발사업 추진 시,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주민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접근성, 공유시설, 도시경관, 하천 양안의 토지이용 특성 등을 고려한 수변중심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제3절 경제·산업 부문

1. 개요

-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제 혁신 도시 서울을 목표로 신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구축, 관광 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고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중심으로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부여한다.
- 기술의 빠른 변화와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래 신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연계하기 위해 신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한다.
- 또한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 인재를 양성한다.
-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래 콘텐츠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속적인 장소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조성한다.
- 상생협력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변화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2. 세부추진 방안

〈표 3-4〉 경제·산업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		전략	
2-1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	2-1-1	미래 신기술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지속적 확보
		2-1-2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변화를 담는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
		2-1-3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금융 산업 선도
		2-1-4	스마트 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을 위한 스마트 앵커시설 도입
2-2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2-2-1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지원
		2-2-2	공익을 추구하는 창업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
		2-2-3	대학가 중심의 캠퍼스타운 조성 및 미래 청년 인재 양성
2-3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	2-3-1	디지털 기반 미래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2-3-2	역동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
		2-3-3	MICE·의료관광 등 다양한 산업 연계를 통한 관광 생태계 구축
2-4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2-4-1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 강화 및 공동 협업 확대
		2-4-2	노동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지원 제공
		2-4-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2-1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

2-1-1 미래 신기술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지속적 확보

-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명 및 분야별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 미래 유망 기술 분야의 국내외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등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 미래 신산업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돋기 위해 임대료 및 업무공간 지원, 해외 진출 투자, 자금순환, 기술 경영 자문 등 다양한 경영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장기적인 주요 사업 또는 실·국·본부 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기적 실효성을 따져 정책, 기반시설, 공간 등을 지원한다.

2-1-2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변화를 담는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

-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지역 간 연계, 가용지 창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도시로의 기능을 고도화한다.
- ‘4대 신성장 혁신축⁸⁾’을 중심으로 중심지 체계와 주변 산업자원을 연계하여 분야 간 연계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서울시 성장동력을 발굴한다.
 - 관련 산업이 중심지에 위치한 경우 서울시 공간계획 중심지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비중심지의 경우 혁신거점이나 전략거점으로 지정하여 지원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를 뷰티·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뷰티·패션·디자인 융합의 ‘서울 뷰티·패션허브’ 조성과 ‘서울뷰티먼스’의 매년 개최로 다양한 업종 간 협업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다.
- 늘어나는 원격근무와 업무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행일상권 내 공유·거점 오피스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지역 기반 일자리 발굴을 추진한다.

2-1-3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금융 산업 선도

- 여의도-용산을 중심으로 국제 디지털 금융 혁신 코어를 조성하고, 성장 단계에 맞춰 금융사 및 관련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청년층의 핀테크 창업환경을 조성·지원한다.

8) 청년첨단 혁신축(바이오·의료·ICT), 감성문화 혁신축(방송·문화·미디어·R&D), 국제경쟁 혁신축(금융·핀테크·업무·역사), 미래융합 혁신축(AI·R&D·로봇·MICE)

- 디지털 관련 교육 및 핀테크 분야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지원해 디지털 금융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2-1-4 스마트 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을 위한 스마트 앵커시설 도입

- 도심제조업이 집적된 주요 지점에 스마트 기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앵커 시설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현대화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자생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 현재 서울시에 집적된 귀금속, 인쇄, 패션, 봉제, 기계 금속 등 제조업 기반의 특화산업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심지의 육성을 지원하고,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 등 산업 활성화 및 집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정책을 마련한다.

2-2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2-2-1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지원

- 창업지원 펀드 조성, 벤처캐피털 육성 등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시장 연계 지원을 도모한다.
- 원활한 운영 자금 조달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 펀드를 운영하여 창업 단계 별로 지원한다.
-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선발된 스타트업의 성장을 책임지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외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테스트베드와 인프라 조성 및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국제 경연과 공모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창업·연구 인재들이 함께 교류하여 협업의 기회를 확대·제공한다.

2-2-2 공익을 추구하는 창업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

- 도시 문제해결과 환경문제 대응 등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 창업기업을 공공에서 적극 지원하여 도시의 사회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
- 지역 기반의 리빙랩 등 시민주도형 문제해결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의 시선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연계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2-2-3 대학가 중심의 캠퍼스타운 조성 및 미래 청년 인재 양성

- 지역사회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대학가 중심의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 상생을 유도한다.
- 저성장·양극화 국면에 대처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에서 비롯되는 차세대 산업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신성장·혁신 일자리거점에 일자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 캠퍼스타운, 흥릉, 양재 R&CD 사업 등과 연계된 혁신성장 선도형 모델, 노후도심산업지구의 일자리 보존형 모델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재생모델 확립
- 지속적인 미래성장과 창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융합형·수요맞춤형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인력을 양성한다.

2-3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

2-3-1 디지털 기반 미래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콘텐츠, 프로그램,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지원, 투자육성 등 문화 콘텐츠와 첨단기술과의 융합·육성을 위한 다차원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 서울이 지난 역사·문화 자원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울을 즐기며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을 개발
- 상암 DMC와 남산일대를 서북권의 창조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
-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수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전문기관을 조성한다.

2-3-2 역동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

- 서울만의 정체성을 지닌 장소를 구축하고 서울을 전 세계에서 방문하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발굴을 확대 지원한다.
-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펀드 조성 등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 서울시민, 생활시민, 외래관광객, 관광약자 등 서울을 향유하는 모든 관광객을 ‘관광시민’으로 포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2-3-3 MICE·의료관광 등 다양한 산업 연계를 통한 관광 생태계 구축

- 개별 산업보다는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산업 환경 구축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다양한 여건변화에 유연한 구조로 전환한다.
- 관광과 연계한 의료·MICE 산업을 확대하고, 동남권(삼성역, 종합운동장)에 새롭게 조성되는 MICE 클러스터(국제교류복합지구) 외에도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4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2-4-1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 강화 및 공동 협업 확대

- 서울의 산업구조가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제조업 기반의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감소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분야별 최소한의 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 강화와 공동사업,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협업을 강조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전통산업과 다양한 서비스업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권역별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서비스업이 전통산업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마련과 규제완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2-4-2 노동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지원 제공

- 사회변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노동형태가 출현하는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과 같은 특수노동자들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 정책을 마련한다.
 - 사회보험을 지원하고 병가와 휴가비 등 서울시 유급병가(보건의료) 및 유급휴가(문화관광) 지원을 확대
- 높은 수준의 고용의 질과 근로환경 속에서 정당한 대가와 노동인권 및 권익을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4-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업 도중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이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공적 안전망 제도 확충을 통해 사업 안정을 도모한다.

제4절 기후·환경 부문

1. 개요

- 기후변화는 21세기에 전(全)지구적으로 가장 위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 생활의 모든 측면과 연관되어 있어 향후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물, 교통, 에너지 등 도시의 주요 인프라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제도가 필요하다. 제로에너지 건물, 친환경 차량 및 교통 인프라의 확대, 자원·에너지 순환 기반 조성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풍수해, 도심열섬현상 등 기후재난 및 극한 기후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능동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 한편, 환경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심 곳곳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심숲과 생활공원 등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수변 공간과 연계하여 풍부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민 개개인과 기업 등 다양한 도시 내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 환경계획 담당부서와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표 3-5〉 기후·환경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		전략
3-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	3-1-1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적극 적용
		3-1-2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활용과 친환경 수송 차량 및 관련 인프라 확충
		3-1-3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
		3-1-4 대기 환경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배출원 관리체계 강화
3-2	건강한 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자립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	3-2-1 자원순환·관리 자립을 위한 분산형 폐기물처리 시설 구축
		3-2-2 기후 행동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 행동 활성화
3-3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	3-3-1 건물 에너지 분야 효율성 개선 및 도심 속 생물 다양성 확보
		3-3-2 지속 가능한 통합 물순환 체계 구축
3-4	다양한 수변을 경험할 수 있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3-4-1 수변 공간을 생활의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3-4-2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른 수변 공간 활성화 전략 마련
		3-4-3 지역 맥락을 고려한 수변 공간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2. 세부추진 방안

3-1 2050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

3-1-1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적극 적용

-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확대로 새로운 친환경 기술 확산과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장 확대를 촉진한다.
- 기존건물 건물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총량제, 건물에너지 소비증 명제 등을 도입하고 건물 에너지·온실가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건물 적용 재생에너지와 수요자원을 확대하여 건물을 분산형 에너지 생산공간으로 전환한다.
 - 건물 내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등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적용 시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정책적 혜택 제공
- 신규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제로에너지 건물에 대한 기준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인증제도 및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정보 제공

3-1-2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활용과 친환경 수송 차량 및 관련 인프라 확충

- 자율주행차, 무인 전동차, 신규 이동수단 등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및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공해 차량 제재, 녹색 혼잡통행료 도입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승용차 통행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과 개인이동수단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
- 운행거리가 긴 택시, 대중교통, 물류배송차량 등을 우선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충전 인프라를 적기에 확대한다.
 - 저층 주거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지역 현황 따라 적합한 충전 지원 확대

3-1-3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

- 도시에 내재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 및 활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 태양광, 소형 열병합, 연료전지발전 등 저탄소 에너지 산업을 지속해서 지원·육성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시, 녹지 훼손 최소화 및 주민 수용성 향상
-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대체에너지 설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의 옥상 및 주차장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 중 사용하고 남은 잉여 전력을 손쉽게 거래하여 순환 에너지 경제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한다.

3-1-4 대기 환경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배출원 관리체계 강화

- 서울의 대기 환경용량과 자연적인 대기순환을 고려한 정비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 자연적인 대기순환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바람길 확보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역 내 시설물을 정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
- 배출원별, 계절별 배출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PM2.5, NOx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감축한다.

3-2 건강한 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자립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

3-2-1 자원순환·관리 자립을 위한 분산형 폐기물처리 시설 구축

- 외부에 의존하던 폐기물처리에서 벗어나 자원순환관리의 자립을 지향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부터 광역 단위까지 공간단위별 차등화된 분산형 복합자원순환시설을 확충한다.
 - 지역 맞춤형 자원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완결형 순환도시는 보행일상권을 기반으로 추진
 - 보행일상권 단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감량 및 재사용·재활용 등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자치구 단위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및 재활용처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행생활권 단위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의 폐기물을 순환처리
 - 광역단위인 5대 권역별로는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확보하여 공간단위별로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 관리체계를 완성
- 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 재활용 최대화, 재사용, 새활용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 재활용 산업의 성장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원천감량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합 관리하는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3-2-2 기후 행동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 행동 활성화

- 자원순환부터 기후 행동까지 수도권 시민과 정부, 기업의 협력을 위해, 서울시-중앙부처-수도권이 함께 기후환경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과 민·관 협력형 사업 확대로 효과적인 규제·관리 기반 강화한다.
- 개인·단체·기업 등 서울시 모든 구성원의 자원순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과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
- 에너지 공급자뿐만 아니라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요자 측면에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캠페인을 확대한다.
- 연령, 직업, 국적 등을 고려한 친환경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이용 및 일회용품 사용 감축 등 시민에게 기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3-3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

3-3-1 건물 에너지 분야 효율성 개선 및 도심 속 생물 다양성 확보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물 에너지 분야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녹지, 하천, 농지, 옥상·벽면·실내녹화 등 다양한 입체 녹화 기법 도입을 권장하고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 토양이 함유한 수분의 증발산 기능, 빗물의 투수 및 저장을 통한 기후 상태 개선 기능, 건전한 생태환경 제공 기능 등 자연 순환의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률 계획기법 반영
- 공원·녹지 조성 시, 공공자전거(따릉이) 거치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주차시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참여 유도
-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이로 흘러드는 지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자연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의 증진을 도모한다.

3-3-2 지속가능한 통합 물순환 체계 구축

- 수질·수량·수생태 등 도시 내 물순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관리체계를 만들어 지속가능하고 일원화·고도화된 물관리 시설 연결망을 구축한다.
-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해 건물, 가로, 녹지 등 도시공간 전체에 원활한 빗물 순환이 이루 어지도록 다양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한다.
- 수열원·하수 에너지 등 물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을 소규모 분산 설치하여, 물순환 회복과 지역 에너지 자급 능력을 제고한다.

3-4 다양한 수변을 경험할 수 있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3-4-1 수변 공간을 생활의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 도로 등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녹지축·하천축을 복원하고, 수변 인근 정비사업 및 개발 사업 추진 시, 소하천·지천·한강 등 수변과의 연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 수변을 명소화하고 수상 활용성을 높이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해, 수변을 도시의 외곽이 아닌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본격화한다.
 - [1단계] 수변 명소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변 명소 활성화로 수변의 매력 발굴
 - [2단계] 수변 접근성 강화: 보행 및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쉬운 환경을 조성
 - [3단계] 수변 명소 네트워크 구축: 수변 거점 간 보행·신교통 네트워크 구축
 - [4단계] 수상 활용성 강화: 수변·수상 활용성 강화로 수변을 중심화

3-4-2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른 수변 공간 활성화 전략 마련

- 소하천·지류에는 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공간 등 수변 친화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지에서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생활 속 수변 공간으로 조성한다.
 - 수변 공간에 도입되는 공간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공간을 우선하여 도입
- 도로 등 기반시설 입체화를 통해 4대 지천과 주변 주거지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자연을 활용하여 권역의 업무·문화·여가의 중심이 되는 친수형 거점을 조성한다.
-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과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도모하여 한강 수변 공간을 혁신하고 신 교통수단을 통해, 한강 수변 거점 간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제공을 통해 한강 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공간 확보를 유도

3-4-3 지역 맥락을 고려한 수변 공간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역 맥락을 고려하여 수변 공간에 위치한 건축환경의 ‘규모’, ‘밀도’, ‘형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수변 공간에 구체적 성격을 부여한다.
- 수변이 더욱 쾌적한 생활문화중심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축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변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숲, 공원 등을 수변 공간과 연계 조성하여 기존 수변의 생태환경 보존을 도모

제5절 안전·방재 부문

1. 개요

- 다양화·대형화 되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의 취약성을 줄이고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 위험의 징후를 감시하고 위기 발생 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문 간 협력과 연계 사업을 도모한다.
- 시민의 안전한 보행일상권 및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보행 및 자전거, 개인 이동 수단 등을 이용 시, 누구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환경에서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위험 및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험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스스로 주체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한다.
-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예방적인 안전관리 수단을 활용하고 도시공간의 노후화로 인한 재난 및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2. 세부추진 방안

〈표 3-6〉 안전·방재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		전략
4-1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 대처를 위한 전 방위 방재체계 구축	4-1-1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난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4-1-2 전통적인 자연·사회재난의 범주를 넘어선 신종 복합재난 대비
		4-1-3 건강위험물질로부터 안전한 시민 보건 시스템 구축
4-2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속 안전 환경 구축	4-2-1 보행 친화적 생활환경을 위한 안전한 이동 네트워크 구축
		4-2-2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4-2-3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구축
4-3	안정적 도시생활을 보장하는 의료복지체계 구축	4-3-1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복지체계 구축
		4-3-2 수요자 중심의 생애과정별 건강보장 지원체계 구축
		4-3-3 안전한 시민보건시스템 구축
4-4	도시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고도화	4-4-1 대중교통 노후시설 교체 및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4-4-2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4-4-3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 구축·정비

4-1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 대처를 위한 전 방위 방재체계 구축

4-1-1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난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태풍, 폭염, 한파, 가뭄 등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예방태세를 구축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회복체계를 마련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개발 초기단계부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난위험을 고려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개발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 지하·반지하주택, 저지대, 경사지 등 상습적인 재난취약지역의 근본적인 위험해소를 위해 지구단위 차원에서 재난관리, 주거지원, 도시정비 등에 걸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방재시설 능력을 강화하되 극단적인 기상상황으로 인한 잔존위험에 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지, 하천 등 자연적인 경계를 고려한 분산형 안전관리, 개별 건축 차원의 소규모 방재대책,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체계, 행정기관의 위기관리체계, 시민 자율방재 등 비구조적(non-structural) 영역의 역할 보강
 - 방재시설의 평상시 활용과 도로, 공원·녹지 등 비방재 기반시설의 방재적 활용을 위해, 기반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도시방재능력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일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의 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 재난위험 노출이 심각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폭염·한파 취약지역 및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량 지원사업, 공공·민간시설을 활용한 무더위·한파쉼터 조성 등 확대

4-1-2 전통적인 자연·사회재난의 범주를 넘어선 신종 복합재난 대비

- 미래에 예상되는 재난은 전통적인 자연·사회재난에 비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상호 결합하여 큰 파급력을 미치기에,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다부서·다기관의 통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하여 다양한 재난대응주체들 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과 정보전달체계 확립
 - 재난대응 매뉴얼의 고도화와 함께 재난사례 및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해 매뉴얼 숙지 및 체화(體化)
 -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주요 공공시설 및 도로를 대피시설, 이재민 수용시설, 방재거점, 방재도로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동시에 예비 공간을 사전에 확보

- 재난 발생 시,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일상권 차원에서 주민센터를 운영하여 평소에는 일상생활수요에 대응하고 유사시에는 안전 및 방위지원기능으로 운영
- 과밀도시에 따른 군중밀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주요 환승역사, 경기장, 대규모 이벤트 행사장 등 고위험지역에 대한 공간별 대책을 마련
 - 군중밀집 위험관리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대응매뉴얼 고도화 마련
- 국경을 넘어선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유행성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침투할 것을 대비하여 도시방역체계를 강화한다.
 - 스마트 ICT 기술을 활용한 물리적·제도적 방역 기반 조성
 - 대형재난을 예견·예방하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 예측시스템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

4-1-3 건강위험물질로부터 안전한 시민 보건 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생활화학물질, 미량유해물질, 난분해성물질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민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 사전 예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건강위험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4-2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속 안전 환경 구축

4-2-1 보행 친화적 생활환경을 위한 안전한 이동 네트워크 구축

- 걸어서 누리는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활동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근린 모빌리티(자전거, PM 등)를 연결한 보행·대중교통의 통합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보행 네트워크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4-2-2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 골목길 사고다발지역, 차량·보행자 겸용 도로, 보행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교통사고 고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환경정비와 도로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방범·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물리적 환경정비와 비물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여성,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형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 장소별 범죄 위험도, 위험요인, 취약요인, 불안요인 등을 고려한 맞춤화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여정비 및 관리
 - 지능형 CCTV, AI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인식 및 이상감지 등 첨단화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통합을 통한 광역적 방범시스템 구축
 - 범죄취약지역 감시·순찰에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을 활성화하여 중복 없고 공백 없는 그물망 감시 시스템 구축
-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유해한 원료·제조물 등을 매개로 한 생활 속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및 현장 중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을 통한 안전관리로 전환한다.

4-2-3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구축

-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시민의 위험인식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민 특성에 맞춤화된 흥보·교육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과 채널을 다양화한다.
 - 시민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안전의식을 정례적으로 조사·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정책에 반영
- 위험 상황에 관한 의사결정에 시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위험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 도시 내 각종 재난·재해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과 투명하게 공유하여 시민이 주체적으로 안전문화 조성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채널을 확대
 -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이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판단능력(risk literacy) 함양에 중점을 두며, 임박한 위험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에 관련된 정보도 시민과 널리 공유하여 위험에 준비된 사회 조성

4-3 안정적 도시생활을 보장하는 의료복지체계 구축

4-3-1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복지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감염병 진료기관을 지정 및 신설하고 장비를 확충하여 서울시 차원의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 취약성이 드러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자치구와 연계하여 강화한다.
-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마련 및 지역사회 돌봄제공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훈련을 추진하여 상시적인 감염병 위험에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4-3-2 수요자 중심 생애과정별 건강보장 지원체계 구축

- 신체활동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통하여 감염병과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구축하도록 한다.
- 건강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지역사회에 도입하여 동주민센터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 및 복지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 미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치매친화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전문 병상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 기능의 강화 및 지역사회와 연계를 구축한다.

4-3-3 안전한 시민보건시스템 구축

- 공공이 주도하던 보건시스템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활기차고 실용적인 건강도시를 구축하도록 한다.
- 건강과 웰빙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WHO 건강도시연맹을 강화를 통하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4-4 도시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고도화

4-4-1 대중교통 노후시설 교체 및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준공 후 시설·설비 상당부분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지하철의 경우 운행 장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교체를 추진한다.
- 효율적인 시설 재투자·교체를 위해 대중교통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적기에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필요 재정을 확보한다.

4-4-2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스마트 ICT 기술을 이용하여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상

시 점검하며 잠재적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조성한다.

- 노후한 기반시설로 인한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사전적 예방과 점검에 초점을 맞춰 관리
- 효율적인 기반시설 네트워크 관리와 문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합적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

4-4-3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정비

- 미래 신 교통수단과 스마트 인프라 등이 기존 대중교통, 모빌리티(자전거, PM 등), 보행환경과 안전하게 융합될 수 있도록 보행·대중교통을 연계하는 통합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기존 도로체계에 신 교통수단이 편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체계 개편 및 스마트 교통안전관리체계 확립
 - 보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도를 분리하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와 같은 신규 1인 이동수단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속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감시체계 구축

제6절 교통·물류 부문

1. 개요

- 미래 교통수단과 도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미래 교통수단과 기존 교통수단이 조화롭게 정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와 환경을 실현하며, 중심지 간 연결과 편리한 환승을 도모하여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유·휴부지, 공공시설, 지하공간 등의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물류 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 기존 교통 인프라 시설은 지하화를 도모하고 상부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 개발을 통해, 도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과 교통 및 도시물류 체계를 구현한다.

2. 세부추진 방안

〈표 3-7〉 교통·물류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		전략
5-1	미래교통수단과 융합을 위한 선제적 교통환경 구축	5-1-1 신 교통수단·기술발전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정비
		5-1-2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지속 추진
		5-1-3 다양한 이동 수단의 기능 정립 및 교통 네트워크 마련
		5-1-4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기반 마련 및 터미널 확충
5-2	도시 이동성 효율화를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연결체계 구축	5-2-1 철도망 확충 및 고도화로 3도심 간 직결체계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5-2-2 노선버스 운영 효율화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지속가능성 확보
		5-2-3 주요 거점 환승시설 개선 및 추가 확대를 통한 광역화 대응
5-3	스마트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 도모	5-3-1 입체적 개발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 지원
		5-3-2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스마트 도시물류체계 구축
5-4	보행자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5-4-1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지속 추진
		5-4-2 교통수단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5-1 미래교통수단과 융합을 위한 선제적 교통환경 구축

5-1-1 신 교통수단·기술발전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정비

- UAM·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수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첨단 기반시설과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확충한다.
 -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지역의 확대, 지역 거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구현,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버스노선 설계 등
 - 도로정밀지도, 교통데이터 등을 갖춘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지속적으로 확대
 - 미래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준, 건축법, 주차장법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항공 모빌리티의 친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와 안전한 운영체계를 구축 및 기존 교통체계와 연결을 도모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이에 대한 연계를 고려한다.

5-1-2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지속 추진

- 도시공간의 위계에 따라 유형별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하여,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을 지원하고 교통 외 다양한 도시 기능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공간을 조성한다.
 - 광역형: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거점과 GTX, UAM 등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공공·상업시설 등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 지역형: 4개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간선 통행거점 및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 기존교통시설 입체화 추진
 - 근린형: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공유형 이동 수단 등에 대한 공유시설, 소규모 주차장, 정류소 등 기존 교통시설과 접목
- 기존의 교통수단과 자율주행자동차, UAM,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관제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최적의 통합교통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제공하여, 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각종 교통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1-3 다양한 이동 수단의 기능 정립 및 교통 네트워크 마련

- 광역철도, 도시철도, 시내버스, 공유교통,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한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교통체계를 재정비한다.
 - 일정 통행거리 이상의 장거리 및 주요 거점 간 연결은 GTX 등 광역급행철도 중심의 수송체계로 구축
 - 일정 통행거리 이내의 중·단거리의 지역과 거점 간 연결은 자율주행 공유수단, 자전거, PM,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이 활용되도록 지선 체계 구축
 - 생활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정립하여 권역별 단절 없는 자전거도로 구축을 통한 교통체계 재정비
- 보행활동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근린 모빌리티(자전거, PM 등)를 연결한 보행·대중교통의 통합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보행네트워크 및 근린 모빌리티의 역할을 고려하여 버스노선 굴곡도 개선, 운행빈도 조정, 지·간선 노선개편 등 버스노선 조정을 검토한다.

5-1-4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기반 마련 및 터미널 확충

- 도심에서 김포공항까지 시범노선을 운영하는 등 상용화 노선을 확보하고, 용산, 잠실 등 대단위 개발지구 및 한강, 주요 지천 등 물길 연접부를 중심으로 UAM 터미널을 설치를 검토하여,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한다.
-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서울시 전역을 연결할 수 있는 운항노선을 검토한다.
 - 25년까지 UAM 상용화 시범노선 운영, 29년까지 한강 등 주요 수변 공간 중심에 단계적 광역노선 확보
 - 이후 중랑천, 안양천 등 주요 지천으로 확대하여 도심 항공교통의 간선노선체계 구축
- 민간 대규모 개발 시, 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요가 크게 감소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발굴해 UAM 터미널을 조성하는 경우 도시계획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5-2 도시 이동성 효율화를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연결체계 구축

5-2-1 철도망 확충 및 고도화로 3도심 간 직결체계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 거점 및 지역 간 빠른 이동을 위해 광역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고, 철도 인프라의 급행화를 통해 3도심 간 직결체계를 완성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 4호선 등 기존 도시철도의 급행화를 추진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도시를 직결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확충을 검토
- 도시철도 취약지역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하여 강북횡단선 등 철도 노선망을 조성한다.

5-2-2 노선버스 운영 효율화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 간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거점과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확대하여 적용하며, BRT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급행화를 추진한다.
- 철도망 확충과 함께 노선버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노선체계 개편과 노선조정, 새로운 노선 운영방식 도입, 거버넌스 개선, 도시철도와 노선버스 연계 강화 등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 또한, 노선버스에 자율주행 기술 등을 도입하여 운행비용 절감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 준공영제 개선, 요금 합리화 추진 등으로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5-2-3 주요 거점 환승시설 개선 및 추가 확대를 통한 광역화 대응

- 광역화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거점에서 서울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의 직결·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도심의 혼잡을 줄이고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 광역급행철도와 도시철도망의 검토·확대를 추진하여 증가하는 환승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도가 연계되는 주요 거점의 환승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한다.
- 교통 서비스 범위를 수도권의 생활시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인접 시·도간 협력적인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 외곽 환승시설 조성에 대해 공조한다.

5-3 스마트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 도모

5-3-1 입체적 개발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 지원

- 지역 간 이동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광역·급행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에 서는 도로 등의 지속 정비로 보행 및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 노후된 도로의 지하화를 검토하여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지상 도로 공간의 보행자 안전 향상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한다.
- 교통 소외 지역과 대규모 도시변화 예정지, 교통 네트워크 단절구간 등을 고려하여 지하 공간을 활용한 도로 및 물류 인프라 지속 공급하여 지상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새로운 도시공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의 지상부에 입체적 연결 및 활용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등 다른 용도와 복합개발이 가능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복합화를 적극 추진한다.
- 공영차고지, 차량기지, 빗물펌프장 등 공공시설의 복합개발과 유수지 등 유휴부지, 지하 공간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생활물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5-3-2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스마트 도시물류체계 구축

- 증가하는 생활물동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도시철도부지 등 도심 내 유휴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인 도시물류 배송망을 마련한다.
 - 헤브물류단지: 낙후된 물류터미널, 도시철도차량기지, 공영차고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복합개발을 통한 물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되는 물량을 처리하는 기능
 - 서브물류시설: 공영주차장, 도시철도 유휴부지 등에 중소규모의 물류시설을 설치하여 최종 목적지로 배송하는 생활물류시설로서, 중소 택배 분류장 또는 대규모 주거시설 내 공동집 배송시설 등을 포함
- 최종 목적지인 일반 건축물 및 주거시설 등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화물조업구역 등을 적정규모로 설치하여 로봇 등 무인 배송과 지하·공중 등 입체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류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해 민·관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 도시물류에 활용되는 운송 수단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고, 배송거점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보급하여 친환경 물류환경을 조성한다.

5-4 보행자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5-4-1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지속 추진

- 지역 내에서는 보행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가 많은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구분하여 탄력적인 속도 정책을 운영한다.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보행·교통약자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개선,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확대 등 보행중심 교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을 지속한다.
- 시민이 보행을 통해 대중교통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같은 신규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간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도를 분리하고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속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 개인·공공 자전거의 이용증가에 대비하여 시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자-보행자-차량의 분리를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중심의 계획 수립
- 도로 다이어트(차로 축소) 등 도로공간 재편으로 보도폭을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네트워크축을 형성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띠녹지를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보행중심 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계획 시에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교목·관목·초화류가 어우러진 가로변 숲길 조성

5-4-2 교통수단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신 교통수단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확대를 지원한다.
-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공해차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보도 확폭 등으로 도로 공간을 재편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오염물질 배출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적용 공간범위를 확대한다.
- 친환경 중·단거리 교통수단인 개인·공공자전거를 비롯하여 PM 등의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시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및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공동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의 미세먼지 배출을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제 권고 기준 농도를 달성한다.

제7절 사회·문화 부문

1. 개요

- 서울시민 누구나 성별·연령·지역·인종·국적 등 개인을 구별하는 특성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평등한 도시생활을 위해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누구나 보호·보장받으며 누릴 수 있는 권익과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생활을 지원한다.
- 이러한 도시환경이 보행일상권 내에 균등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생활권 단위 중심의 생활문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을 통한 공동체 활동을 확대한다.
- 생애발달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취업, 의료 등에 대한 적합한 설계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 세부추진 방안

〈표 3-8〉 사회·문화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		전략	
6-1	시민이 함께 사는 환경을 위한 지역 공동체 문화 정착	6-1-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6-1-2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공간과 서비스 제공
6-2	모두의 동등한 생활을 위한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	6-2-1	평등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6-2-2	모든 시민의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 보장
		6-2-3	다양한 사회 구성원 존중 및 인정
6-3	시민의 일상생활의 여유를 위한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6-3-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체계 정착
		6-3-2	생애발달단계와 생애전환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6-3-3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6-4	고령사회대응과 세대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6-4-1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돌봄 강화
		6-4-2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및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6-1 시민이 함께 사는 환경을 위한 지역 공동체 문화 정착

6-1-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재정·공간·교육 등 필요 한 부분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강구한다.
 - 지역 사회 내 아카이브 활동, 마을모임, 문화예술교육, 축제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일상의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
 -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여 물리적인 ‘공간’조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물질적인 생활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보행일상권 내에 시민이 직접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하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6-1-2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공간과 서비스 제공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을 위해 세대 교류형 주거공유 모델 을 개발·공급하여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함께 거주하는 새로운 이웃공동체를 형성한다.
 - 저출생, 고령화, 1·2인가구의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생활의 변화를 파악하여 사회 적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문화 조성
- 연령과 성별 등 신체조건의 구애 없이 누구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과 무장애 건축 등 거주자 친화적인 주거 대안을 개발·공급하고, 고령자를 위한 주거 유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한다.
 -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시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심리적 불안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개발 및 확대
 -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고령자들이 보다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신체변 화를 고려한 다양한 주거 대안과 서비스 개발
 - 1인가구가 대안적 이웃관계 형성을 통해 단독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대별, 세대상생 형 공유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

6-2 모두의 동등한 생활을 위한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

6-2-1 평등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채용·평가·승진·보상과 같은 경력 형성의 모든 단계에서 성별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며 일터 전반에서 성평등한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

- 성희롱과 성폭력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 한다.

6-2-2 모든 시민의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 보장

-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 확대를 극대화하고, 통합사회 구축 및 경쟁력을 제고한다.
-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은퇴자, 서울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 개개인의 여건과 역량에 맞춰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공영역의 사회참여 활동 연계 및 지원을 확대한다.
 - 청년 니트에 대한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 유지 지원
 - 고령자의 역량별 맞춤형 직무설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 및 경력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진입 전 단계의 다양한 사회참여 지원체계 마련
 - 국내 노동인력 부족이 전망되는 산업·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기반 마련

6-2-3 다양한 사회 구성원 존중 및 인정

- 국적, 인종, 종교, 연령, 장애 등 개인을 구별하는 특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제약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인식을 공유·확산시켜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권리 이행을 지원한다.
- 1인 가구, 비혼(동거)가족, 이주민 가족과 같은 가족 형태에 대한 다양성과 선택권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맞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망 형성과 생활공동체 지원
- 글로벌 시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정책과 교육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민과 공존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한다.

6-3 시민의 일상생활의 여유를 위한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6-3-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체계 정착

- 유아에서 노령인구까지 모든 생애과정에서 문화적 활동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적합한 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여 노년의 생활문화를 활성화
- 수요자 중심으로 인구구조, 지역 특색, 지역 주민의 수요를 우선 반영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용공간 인프라를 확충한다.

6-3-2 생애발달단계와 생애전환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와 같은 생애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한다.
- 취업, 출산, 이직, 은퇴 등 생애전환기에 있는 시민이 생애단계 전환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 실직·은퇴 등 진로 장벽에 부딪친 중장년층의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 관점에서 제2의 진로설계와 개발을 지원
 - 전문적인 성인 진로 개발을 위해 진로상담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

6-3-3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상태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풍부한 공공보건지원 인프라와 수준 높은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의료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과정에 적합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생활권 계획과 연계하여 보행일상권 내에 지역사회 의료거점 공간으로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공공병원 규모를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지원한다.
 - 권역별로 의료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감염과 응급, 재활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6-4 고령사회대응과 세대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6-4-1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돌봄 강화

- 보행일상권을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주거와 의료, 돌봄 등 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구축한다.
-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놓인 시민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통합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한다.
-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보육 서비스 및 시설 확대 등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의 공백이 없는 가족 및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마련
 - 아동·청소년을 사회적 약자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과 주체로 상정하여, 스스로 개입할 수 있는 참여에 대한 권리와 시민권을 보장

6-4-2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및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세대 간 및 세대 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 소득안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지원체계를 통해 소득 양극화 완화
 - 가족돌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 강화
-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의 권익향상과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한다.
 - 사회적으로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 간 이해를 돋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사업 등 세대 간 교류하는 프로그램 확대 지원
 - 경제, 환경, 사회통합 분야별 세대 간 형평성을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세대 간 형평성 측정·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제4장 공간계획

제1절 도시공간구조

제2절 토지이용계획

제3절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공간구조

1. 중심지 체계

1) 기본 방향

3도심·7광역중심·12중심의 중심지 체계 유지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중심의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며, 미래 공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한다.
 - 「2030 서울플랜 모니터링」에서 도출한 중심지 특성과 변화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중심지 별 육성방향을 제시
- 서울의 중심지 기능 고도화는 중심지별로 주요 기능, 공간 특성 등에 따라 확립된 중심지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복합되어 24시간 활력이 있는 지역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중심지 체계와 광역교통망·대중교통체계·수변·산업거점 연계로 중심지 기능 고도화 지원

- 중심지 체계와 광역교통망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심지 내 주요 교통 결절점을 보행축과 연계한 통합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한다.
 - 지리적으로 단절되었거나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중심지는 대중교통 간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능 차별화로 대응
- 한강과 주요 지천에 인접한 중심지는 여가·관광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중심지 내 또는 인접 수변 공간을 우선하여 명소화하고 연결 보행로를 조성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 한강 수변 양안에 인접한 중심지 간 도시기능을 연계하여 수변거점을 활성화
- 중심지와 인접한 산업거점·배후지역은 중심지와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한다.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로 다기능 복합용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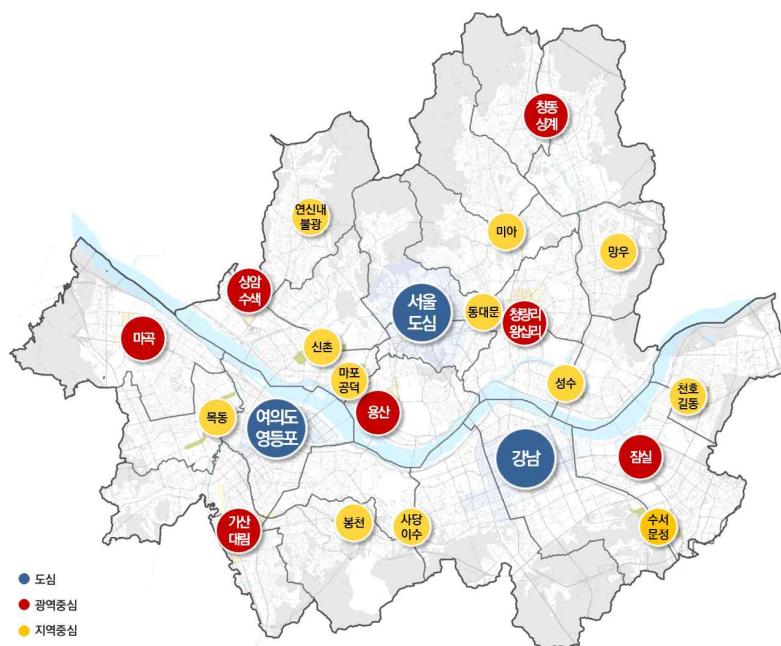
- 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용도 및 기능의 복합화를 유도한다.
- 지역거점과 역세권 등 중심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의 성장 가능성은 높이고 복합용도

확산을 도모한다.

- 중심지 정비 및 육성 수단으로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심지별 특성에 따라 용도 및 밀도의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세제 및 재정지원 등 비물리적 지원방안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 등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화한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심지 육성 및 관리방안 마련

- 중심지별 육성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중심지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면서 중심지별 기능을 특화·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3도심·7광역·12지역 중심은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관리·육성 방안 마련
 - 지구 중심과 역세권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그림 4-1〉 서울시 중심지 체계

2) 3도심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도심의 정체성과 장소성 강화

- 글로벌 대도시로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 수준의 전문화된 서비스 기능과 24시간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성한다.
 - 국제문화교류중심지인 서울도심은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주요 공간축인 4+1축을 활성화하

여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조성

-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영등포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
- 국제 업무 중심지인 강남은 영동대로와 경부간선도로의 입체복합화로 가용지를 확보하여 업무복합기능을 강화
- 수도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광화문~용산~영등포”축을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한다.
 - 북악산~청와대~광화문광장~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도심 축을 보행로·녹지와 연결하며 통합 개발하여 국가상징가로로 조성
- 도심을 보행 중심의 쾌적하고 매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장소성을 강화하고 가로를 활성화한다.
 - 3도심에 녹색교통지역 지정 등 보행 중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유도·지원방안 마련하고, 도심의 공원·녹지축 체계,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한강·지천의 수변명소 간 보행로·신 교통수단 연계 등 추진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로 도심 가용지 확보 및 복합 개발 추진

- 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높이 기준 유연화 및 용적률 기준 완화 등 도시계획적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기여 등 공적기능을 확보한다.
- 노후 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도심에 쾌적한 업무·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다기능 녹지생태도시를 구현하도록 정비사업 추진 시 적극 지원한다.
 - 노후지역 재정비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반시설의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

3도심 간 직결체계 완성을 위하여 광역급행철도망 연계 및 도심 간 이동 수단 다양화

- 3도심과 용산의 대중교통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급행노선의 도심 내 정차·환승역의 신설 제안을 검토하여 3+1(서울도심-여의도·영등포-강남-용산)의 직결체계를 완성한다.
 - 도심의 광역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 계획된 광역급행노선 외에 추가적으로 GTX-A 노선은 광화문·시청역을, GTX-B 노선은 종로3가역 또는 동대문역 신설 제안을 검토
- 자전거를 비롯하여 개인용 이동수단(PM), 수상교통,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이동수단으로 도심 간 연결 수단을 다양화하고, 교통수단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 여의도~잠실종합운동장, 남산공원~용산공원~용산역(정비창)~여의도 등을 연결하는 신이동수단 인프라를 신설을 검토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편의와 관광 매력을 증진

〈표 4-1〉 3도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중심지명	특성 및 육성방향
서울도심 (국제 문화교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축을 중심으로 도심 내 활력 증진 및 신산업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축이란 서울도심 내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정책과 공간계획을 결합한 혁신 전략으로서 남북방향 4개 산업·발전축과 동서방향 1개 산업·발전축으로 구성 - 국가중심축(청와대~시청):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도심 비즈니스 허브로 구축 - 역사문화관광축(인사동~명동):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 확대 - 남북녹지축(창덕궁~한강): 종묘~퇴계로를 중심으로 혁신거점 조성, 녹지생태도심 구현 - 복합문화축(대학로~장충단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중심으로 패션·뷰티 산업 육성과 인근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연계하여 문화·관광기능 활성화 - 글로벌상업축(광화문~동대문): 청계천을 중심으로 4축을 동서로 연결, 상업지역 통합 연계 • 광화문 일대 종합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중심공간으로 체계적 조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되는 광화문 광장, 경복궁~서울역~용산 일대를 계획적 관리 •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원활한 정비로 서울도심 활력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용지 창출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도시관리체계 도입 - 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복합용도 도입,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 및 지원
여의도· 영등포 (국제금융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영등포 간 상호보완적 도심 기능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 국제디지털금융업무 생태계 육성하고 용산 가용지 개발과 연계하여 기능 범위를 확대 - 영등포는 중심상업과 문화, 첨단·혁신산업기능 공간으로 특화 • 영등포 산업지역을 재생·정비하여 신산업·일자리 중심 공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 재생과 정비방안 마련 - 경인축 일대에 도시관리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일자리 중심지로 육성하고 상업·문화·여가 등 다양한 도심기능을 확충하며 도림천까지 보행로 연계 - 영등포~신도림 철도구간의 지상 부분 입체화를 검토하여 서남권의 육성 기반 마련 • 국제적 수준의 매력적인 도심환경 및 서남권 생활·문화중심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와 용산을 연계하여 한강중심의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 - 샛강과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으로 상부 가용공간을 확보하여 영등포와 연계, 대중교통 중심의 순환체계 구축 - 여의도 배후지원을 위한 노량진 가용지 및 마저이용 부지의 전략적 활용 - 문화·여가기능 및 공원·녹지 확충, 수변경관 및 공공공간 네트워크 접근성 개선
강남 (국제업무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입체화로 가용지 창출하여 국제업무기능 동서방향 확산과 동서 공간 통합·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간선도로 입체화로 확충한 도로 상부 가용공간 및 잠원·반포·서초 IC부지를 활용하여 업무·문화 거점 조성, 동서공간의 통합·연계 및 중심기능의 동서방향 확산 강화 - 현대차GBC(Global Business Center), 영동대로 복합개발,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 등 핵심 사업을 연계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 • 일자리·업무기능이 집적된 강남 도심의 지속적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헤란로와 주변 지역의 기능고도화를 위한 재정비 추진 - 강남 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GTX-A·C 노선과 SRT 노선의 통합 운영 검토

3) 7광역중심

광역 경제권의 일자리 및 다기능 복합 중심지로 육성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신설·도입에 따른 서울 대도시권의 본격적인 광역경제권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광역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하도록 한다.
- 7개 광역중심이 서울 내·외 간 교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광역 일자리거점으로서 서울의 경제·산업에 활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중심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강화한다.
 - GTX 정착역인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는 광역경제권 업무거점으로 특화 육성
 - 가용지인 철도부지는 입체복합화하여 교통환승기능과 업무·상업·주거기능을 강화
- 대도시권 일자리 거점으로서 광역중심의 특화기능을 유지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일자리·주거·여가기능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중심지로 육성한다.

기반시설의 입체복합화로 가용지 확보 및 보행이 편리한 매력 도시로 육성

- 중심지 내부를 공간적으로 단절하는 철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입체복합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가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기능을 도입하여 중심지 활력을 제고한다.
- 기반시설에 의한 공간 단절로 보행과 이동이 불편한 광역거점은 기반시설 입체복합화로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 거점으로 재구조화 한다.

중심지와 수변 명소 간 보행로 연계 및 중심지의 문화·여가 기능을 강화

- 중심지에 인접한 한강 및 지천의 수변명소를 보행로와 연계하여 문화·여가기능을 제고하며, 한강 양안으로 인접한 중심지와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한다.

신 교통수단의 등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환승체계를 선제적으로 대비

- 기술발달에 따른 UAM, 자율주행, PM 등 미래교통수단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3차원 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
 -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 구축, 서울형 도심항공 교통인프라 확보, 모빌리티 허브 및 3차원 물류체계 구축 등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신 교통수단과 기존 대중교통의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거점에 광역형, 지역형, 근린형 등 중심지 위계에 따른 유형별 환승체계를 계획한다.

〈표 4-2〉 7광역중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중심지명	특성 및 육성방향
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심·여의도와 연계한 한강 중심 국제업무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의 공간부족 및 금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가용지인 용산정비창을 국제경제혁신축의 핵심으로 조성 - 글로벌·다국적기업,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여 국제 비즈니스·MICE 기능을 강화 - 도심항공교통, 수상교통 등 미래교통수단 인프라 확충, 여의도 간 연결성 강화 • 용산공원과 연계한 국제 수준의 어메니티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역~용산역 구간의 철도 지하화·입체화로 동서 간 단절 해소 및 녹지 확충 - 용산공원 주변 도시공간·조직 재구조화, 주변 지역과의 조화 도모 <p>※ 용산은 3도심의 기능적 연계를 지원하는 공간이자, 용산 대통령실이 위치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상징거점으로서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p>
청량리·왕십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동북권 혁신산업·문화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 및 유라시아 철도물류 거점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청량리는 업무기능을, 왕십리는 상업·업무·문화 중심기능을 강화 • 청량리 철도 상부의 입체적 활용 추진, 혁신 공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량리 철도 상부 입체복합개발 추진, 흥릉R&D와 기능 연계성 강화
창동·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동북부 일자리·문화산업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메디컬, 친환경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업무·문화산업 중심기능 육성 • 글로벌 창조문화산업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고도화 및 배후도시 간 연계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상암·수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미디어 산업 기반의 글로벌 창조문화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암과 수색이 통합된 공간구조로 조성하고 산업·중심상업·문화·여가기능을 집적 - 서북권의 산업·경제거점으로 육성하며 장기적으로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조성
마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기반의 고용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족적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국제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된 업무·상업중심지로 육성
가산·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밸리·배후지역 혁신 및 고도화로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을 지속 육성, 산업·창업 지원기능 및 업무·숙박·주거·문화·쇼핑·여가기능을 강화 - 도로·보행체계 정비, 공원·녹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 및 근무환경 조성
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 도심과 연계한 국제 업무·관광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국제적 관광·쇼핑·MICE 산업벨트 육성 - 업무기능을 강화하며 상업·여가 기능, 수변 공간, 보행체계 간 연계성 강화

4) 12지역중심

고용기반 및 고차 생활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권역별 지역중심의 특화 육성

- 지역중심은 균형발전을 위해 직주균형의 지역고용기반을 형성하고 공공서비스 공급과 상업·문화 등 고차 생활서비스 기능을 담당하여 권역별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권역 내 상업·업무·문화의 중심지 역할과 함께 지역의 고유기능, 입지여건, 배후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심지별 특화 기능을 육성한다.

지역중심 육성 및 중심지 간 연계를 위한 광역급행철도 신규 정차역 제안

- GTX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중심 내에는 추가적인 신규 정차역을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과 중심지 육성을 유도한다.
 - GTX-B 노선은 서울역(도심)과 청량리역(광역중심) 사이에 있는 지역중심 내 정차역 신설 검토·제안
 - GTX-C 노선은 삼성역(도심)와 청량리역(광역중심) 사이에 추가 환승역 신설 검토·제안

〈표 4-3〉 12대 지역중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권역	중심지명	특성 및 육성방향
도심권	동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형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조산업 지원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문화 등 복합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상업 등 도심 산업 기능을 보완
	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권 자족기능을 선도하는 창조적 지식기반산업과 생활서비스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산업, 상업·업무의 복합시설을 집적하고 강남 도심의 산업·업무 기능과 연계
	망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부 수도권의 비즈니스와 생활서비스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을 기반으로 권역 내 고차생활서비스기능 강화, 가용지를 활용하여 산업·업무기능 육성
동북권	미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2권 문화·쇼핑·업무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업무와 문화, 교육 기능을 확충하여 권역 자족성을 강화
	연신내·불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부 수도권 상업·문화 및 혁신산업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GTX 신설에 따른 광역접근성 향상을 고려하여 업무·상업·문화 및 주거기능을 복합화하고, 혁신파크와 연계한 혁신산업 거점 조성
	신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출판,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및 환경 조성 - 의료·AI기술 등 IT융합산업기능을 육성하며 관광·서비스산업과 연계
서북권	마포·공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심, 여의도를 지원하는 서북권의 업무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균형상업·문화기능을 보완

〈표 4-3 계속〉 12대 지역중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권역	중심지명	특성 및 육성방향
서남권	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남1권의 상업·업무·문화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업무·문화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서비스 기능을 보완
	봉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상업·문화가 복합된 서남2권의 업무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과 낙성대 일대 R&D 기능을 연계하여 벤처 및 창업을 지원하는 업무·상업·여가·주거 등 복합기능을 육성
	사당·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교통 환승을 담당하는 쇼핑·여가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남부지역과 연계되는 광역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 복합기능을 육성하여 고용기반을 마련하며, 권역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
동남권	수서·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장 로봇·IT산업이 특화된 첨단산업·업무 서비스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상업을 비롯한 산업교류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여가 및 도심주거 기능을 보완하며 수서와 문정 간 공간적·기능적 연계 강화
	천호·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동부의 상업·업무복합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상업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쇼핑·여가·문화 등 일자리 지원 및 생활문화기반을 활성화하며, 광역 교통 기능을 제고

5) 53지구중심 및 역세권

지구중심 및 역세권은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생활권 중심지로 기능

-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의 중심지 체계와 함께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로 5개 권역별 직주균형을 강화하여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한다.
- 지구중심은 자치구 단위 혹은 자치구 내 생활권의 중심지이자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으로 관리한다.
- 역세권은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생활편의기능의 집적 지역으로서 생활권 중심지의 역할을 역세권과 중심기능의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확장한다.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하여 지구중심 및 역세권의 다기능 복합개발 추진

- 지구중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의 압축 도시인 ‘보행일상권’을 실현한다.
 - 시민활동이 집중되는 지구중심·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고밀 입체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공급

도시 자족성 및 회복력을 강화하는 다핵연계형·회복탄력적 공간구조 실현

- 지역중심-지구중심-역세권의 기능 연계로 자족성과 다양성을 가진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를 구축하고 유연한 운영으로 도시기능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한다.
 -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는 상위 서비스 기능을 중심지 간 연계로 보완하는 형태
 - 팬데믹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시에도 일상생활을 위한 도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 범위의 자족적 공간기반을 마련
- 지역생활권별 보행일상권을 조성하여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위기상황과 기술발달로 인해 확대되는 비대면 생활방식 등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권역별 자족성 확보를 위한 지구중심의 생활편의 지원기능 강화

-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인 지구중심은 주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지정하고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지구중심 기능을 유지한다.
- 다만, 지역 여건변화와 서울시 정책 등에 따라 지구중심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향후 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역세권은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복합기능 도입 및 지역 생활의 거점으로 육성

- 역세권은 다양한 도시계획적 방안을 도입하여 집약적인 복합기능지역으로 조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근린단위의 생활SOC를 역세권에 전략적으로 설치한다.
 - 지역별 자족성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세권 활성화 추진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용적률 증가분을 민간 개발의 유인책과 공공기여시설 확충에 적극 활용
 - 고용 관련시설 집적을 위한 적정 환경 조성, 주거·비주거 기능의 입체복합화, 유휴 비주거시설의 주거용도 전환, 비주거 간 비율의 유연한 적용 등 다양한 방안 활용
- 기존의 생활SOC와 함께, 비대면 생활방식 확대에 따라 발생된 재택근무 지원 공간, 스마트 물류 시설 등 새로운 종류의 생활SOC를 역세권에 공급한다.

2. 광역교통축

1) 기본 방향

광역철도망과 중심지 체계를 연계하여 서울대도시권 실현

- GTX 등 광역철도망과 중심지 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도모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대도시권 공간구조를 강화한다.
- 수도권과 서울시 내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 광역급행노선과 서울시 중심지 체계를 연계한 신규 정차역 도입과 추가적인 광역급행철도망 신설 제안을 검토한다.
- 서울시 내 중심지를 대중교통으로 연계하고 혼잡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선 계획 마련

〈표 4-4〉 서울-수도권 간 광역교통망 노선 계획

노선명	구간	노선명	구간
GTX-A	파주 운정~삼성	대장홍대선	부천대장~홍대입구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용산~삼송
GTX-B	송도~마석	위례 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GTX-C	양주 덕정~수원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강동하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 노선명과 구간은 추후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도로 네트워크 강화 및 지하 간선망 구축으로 장기 교통수요 대응

- 늘어날 광역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지하 도로 간선망을 구축을 검토하여 광역축별 혼잡구간의 정체를 완화하고 사람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지상도로 공간을 조성한다.
- 저비용·고효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여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한다.

2) 추진 방안

서북권-서남권, 동북권-서북권 간 연계를 향상하기 위한 도시철도망 체계 보완

- 서부선 경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북권과 서남권의 연계를 우선 강화하고, 향후 고양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강북횡단선 경전철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동북권과 서북권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심지 활성화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체계 마련

- 다양한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으로 중심지를 활성화하고 이용자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노선이 통과하는 중심지 내에 환승센터를 조성한다.

- 개인 모빌리티, 미래교통수단 등과 환승 시 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체계 구축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규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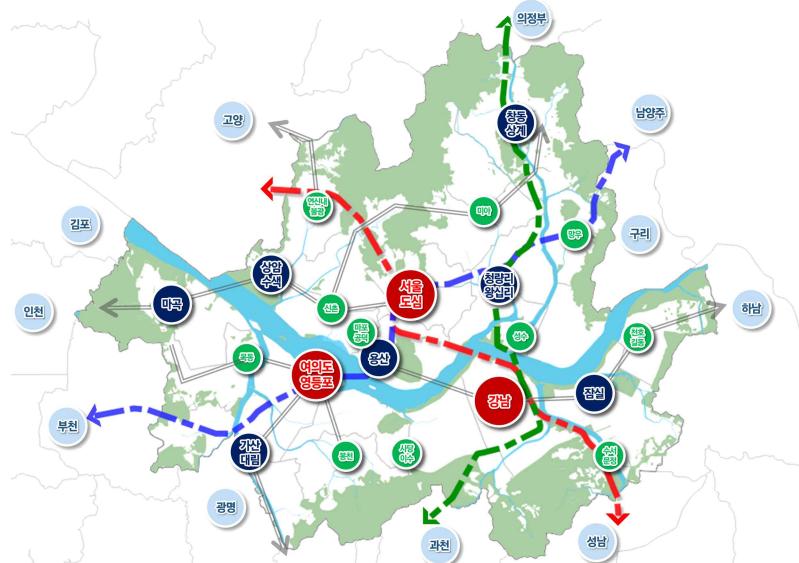
- 강북횡단선을 비롯한 다수 경전철 개통으로 형성되는 신규 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⁹⁾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순환망 구성

- 광역생활권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서울과 주변 도시 간 이동은 광역 방사축을 이용하고, 대도시 간 우회 이동은 순환축을 활용한다.
 - (순환축)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운영 중, 장기적으로 제2순환고속도로 완성
 - (방사축) 9개의 광역 방사축 운영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경원선·경의선축 등 발전축 형성

- 서북권은 경의선축을 따라 상암·수색 등에 대한 개발사업과 함께 서북권 배후도시인 고양, 파주 등을 광역적으로 연계한다.
- 동북권은 경원선축의 철도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철도구간 입체복합화로 지역 단절 해소와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림 4-2〉 광역급행철도망과 중심지 체계를 연계한 광역대도시권

9)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3. 산업·경제축

1) 기본 방향

중심지 체계와 산업거점·자원을 연계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 서울의 성장 잠재력을 지속·극대화하고 경제성장을 도약시키기 위해 중심지 체계, 6대 융복합 산업거점, 신성장 산업거점을 연계하여 관련 산업을 협력·육성한다.
 - 홍릉(바이오의료), 마곡(R&D), G밸리(IoT), DMC(문화콘텐츠), 양재·개포(R&D, AI, 빅데이터), 마포·여의도(블록체인, 핀테크) 등 6대 융복합 산업거점을 지속 관리·육성
 - 양호한 광역 접근성, 개발가용지 보유 등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광운대, 구로, 김포 공항, 수서·문정 등을 신성장 산업거점으로 지정·육성

2) 추진 방안

4대 혁신축 육성방향 마련과 산업거점별 특화산업 육성

- 중심지 체계와 산업거점, 주변 산업자원, 광역 배후도시들과 산업적 연계를 고려한 4대 혁신축을 구축하고 특화된 고용기반을 창출하며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권역별 자원과 연계하여 미래 산업의 기반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그림 4-3〉 4대 혁신축: 중심지와 산업거점 연계

〈표 4-5〉 4대 혁신축의 육성방향 및 주요 거점별 개발방향

구분	혁신축 육성방향	주요 거점별 개발방향
청년첨단 혁신축 (바이오·의료·ICT)	• '홍릉 바이오의료허브'를 중심으로 청량리 역 배후기능을 활용하여 홍릉~창동 바이오 메디컬 혁신산업 공간마련	• 창동·상계 광역중심: 바이오·ICT 첨단산업단지 • 광운대: 인력 및 인프라 지원 기반 • 홍릉: 바이오·의료 R&D •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 업무 및 광역 협동 가능 • 성수·건대 지역중심: BT·IT산업, 지식기반산업
감성문화 혁신축 (방송·문화·미디어·R&D)	• 상암 DMC를 중심으로 미래 창조문화 콘텐츠 시장의 혁신기지 육성 • 마곡 산업단지 및 광역중심을 거점으로 BT·IT·NT·GT·R&D 기능 지원·육성	• 상암·수색 지역중심: 디지털·문화 콘텐츠산업 • 마곡 광역중심: BT·IT·NT·GT 등 R&D • 김포공항: 관광, 컨벤션, 상업시설 등 서비스 산업
국제경쟁 혁신축 (금융·핀테크·업무·역사)	• 광화문~서울역~용산~여의도~영등포로 이어지는 국가중심공간 조성 • 여의도·영등포 도심과 용산을 연계하여 금융중심 고차업무중심지 조성 • 대규모 이전적지(구로차량기지) 활용 및 G밸리 연계로 서남권 경제 거점 구축	• 광화문~서울역: 역사·경제·문화·정치 상징거점 • 용산~여의도·영등포 도심: 금융서비스·벤처 창업 • 마포·공덕 지역중심: 금융벤처 및 블록체인·핀테크 • 구로: G밸리 연계·지원거점 • G밸리: 제조업체와 IT업체 간 융·복합
미래융합 혁신축 (AI·R&D·로봇·MICE)	• 강남 도심, 삼성, 양재 R&D 혁신지구 및 개포 포이밸리, 수서·문정 지역중심을 연계하여 AI, 빅데이터, IT, 로봇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	• 양재 R&D 혁신지구: AI,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등 • 강남 도심~삼성: MICE산업 특화 육성 • 수서·문정 지역중심: 로봇 및 IT산업 특화

4. 공원·녹지·수변축

1) 기본 방향

환상녹지축과 남북녹지축을 중심으로 도심 녹지 회복

- 서울의 주 녹지축인 '내·외사산 중심의 환상녹지축'과 '종묘~남산~용산공원~한강~현충원~관악산을 관통하는 남북녹지축'을 중심으로 도심 녹지를 회복한다.
- 서울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오픈스페이스를 창출하기 위해 건물과 도로 공간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3차원의 그린인프라를 확대 조성한다.

수변 중심의 도시공간 개편

- 수변 접근성을 강화하고 동네단위의 개천에서부터 4대 지천(안양천·홍제천·중랑천·탄천), 한강으로 이어지는 수변중심의 공간구조를 구축하여 시민 생활·여가공간을 확대한다.
- 수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고 감성요소를 도입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다양한 수변문화를 활성화한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

-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환경 오염원 정화와 생물다양성 제고, 자연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 감염병 확산을 막는 완충공간 등의 역할을 하는 공원·녹지를 지속 확보한다.
- 생활권 내에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녹지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내·외사산 둘레 길과 기성시가지 내 공원을 연결하여 시민의 공원·녹지 접근성을 강화한다.
- 도시공기순환을 유도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바람길숲 체계를 확보하며 서울 전체 공원·녹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추진 방안

서울을 관통하는 남북녹지축을 따라 녹지공간 확충과 공원·녹지 간 연계 강화

-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은 외사산과 내사산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과 내사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녹지축으로 구분한다.
 - 서울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종묘~세운상가~퇴계로를 중심으로 입체적 선형공원을 조성하고 블록별 거점공원을 확충하여 우선적으로 녹지축 연결
 - 남산~용산공원~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녹지축은 용산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벽면 녹화, 입체적 녹화, 입체보행교 설치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점진적 연결
- 용산공원은 역사·문화중심 공간으로서 남북녹지축과 한강축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며 녹지가 전 방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근 공원·녹지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 최초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

수변공간 잠재력 발굴 및 소하천-지천-한강의 수변공간 연결성 강화

- 수변중심의 공간구조 구축을 위하여 1+4수변축(한강, 4대 지천)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고 수변의 규모·입지를 고려한 수변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 한강은 강·남북 수변거점을 활성화하고 수변거점 간을 연계하여 한강의 전면적 활용을 도모
 - 4대 지천은 수변 인근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특성화하여 수변중심의 도시문화기능을 강화
- 주민과 자치구 주도로 도시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소하천에서 지천으로, 지천에서 한강으로 수변공간의 연결성을 단계적으로 확보·강화한다.
 - 다양한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수변명소를 조성하고 시민의 일상 공간이 되도록 적극 활용

- 기존 복개구조물에 감성요소를 도입하고 지역 명소로 전환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 한강 등 수변과 인접한 공간을 개발 시 바람길, 열환경 등 기후인자들을 최대한 고려한다.

생활권 내 공원·녹지의 확충·정비로 녹지·생태계 네트워크인 '그린 클린 코리도어' 구축

- 서울시 주요 녹지축에서 생활권 녹지까지 이어지는 그린 클린 코리도어(Green-Clean-Corridor)를 구축하여, 도시 내 연속적인 녹지축을 따라 신선한 공기 순환을 유도한다.
 - 도로 등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녹지축·하천축을 복원하고 녹지연결로, 에코브릿지 등 다양한 녹지축 연계수단을 도입하여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시민 누구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내·외사산 둘레길과 한강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서울시 전역의 녹지 연결체계를 구축한다.
 - 공공청사, 공용주차장, 학교 등에 대한 복합화, 민간시설의 옥상개방 등으로 동네공원 확보
 -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입체복합화에 따라 창출된 상부공간은 공원·녹지로 조성
- 생활권 내 공원의 만족도 향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공원의 수요 및 도시여건 변화를 살펴 기존 공원의 효율적 정비를 추진한다.
 - 녹지 확보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물을 활용한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입체녹화조성 지원,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민간공원 조성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공원·녹지축을 연계한다.
 - 미세먼지 저감과 녹지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도시숲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녹지 조성에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그림 4-4〉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수변축

제2절 토지이용계획

1. 기본 원칙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 토지이용체계 확립

-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생활방식이 일상화되며 업무, 교육, 소비, 주거 등 생활 전 분야에 걸쳐 토지이용 경계가 모호해지고 재구성되는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융복합적인 토지이용체계로 전환한다.

압축적·친환경적 토지이용으로 탄소중립도시 구현 및 지속가능성 강화

-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약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물질 순환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토지이용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한다.
-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 효율·절약형 공간구조를 지향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기반시설과 연동한 압축적이며 입체·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한다.
- 탄소흡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원·녹지의 확대, 생태네트워크 구축, 개발제한구역 보존·복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 및 신종재난에 대한 회복탄력적 대응체계 마련

- 기후변화로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해와 신종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적 도시공간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과증해진 중심지 기능을 분산하여 생활권별 중심기능 및 자족성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의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 바람길 확보, 투수면 및 생태면적률 적용의 확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강화하고 유사시 생활권 경계의 녹지, 숲 등을 재해 완충공간으로 활용
 - 재해취약지역 또는 상습재해지역의 토지이용을 사전에 관리하는 안전체계를 구축

토지이용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실현, 공공성 강화

- 권역별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
- 시민 공유재 확충과 활용, 공공공간의 비축과 자원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 생활SOC 및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도시개발 등으로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2.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방향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7대 목표를 실현할 토지이용 혁신방안 마련

- 향후 서울의 토지이용 방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7대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 다양화·다각화하는 미래 생활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
 - 광역교통축 및 기반시설과 연계한 중심지·역세권 기능의 고도화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며, 도시정비·개발의 원활한 추진으로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
 - 도시 공간의 단절을 해소하여 새로운 교류공간을 창출하고 미래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입체복합 확대 및 적극적 활용

기성시가지와 보존관리대상지의 토지이용 차별화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시가지는 토지를 집약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존관리대상지는 용도지역 상 녹지지역과 용도구역 상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해당되며 우수한 생태환경을 유지·보존하도록 관리
- 기성시가지는 유연하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를 수용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배출을 저감을 도모한다.
- 개발가용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지특성과 배후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다양한 경관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높이관리로 전환

- 높이관리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성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유연하게 운영한다.

1) 기성시가지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기능 고도화를 위한 중심지의 고밀·복합 토지이용 강화

- 중심지는 다양한 산업과 상업·서비스 기능을 집적하여 서울의 산업·경제를 부양하고 시민편의를 증진하며 24시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밀·복합 토지이용을 유도한다.

- 도심의 노후·저밀 시설 정비 시 고밀·복합개발로 국제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고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특례를 적용하는 용도구역 지정,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 유연한 도시계획체계 적용을 검토
- 6대 융복합 거점 및 신성장 산업거점은 서울의 미래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근무·여가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 시 주거 및 생활지원기능을 충분히 공급하되 과도한 주거비율을 제한 하며 공원·녹지 등을 확보·연계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북 수변 거점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능 연계

- 한강 양안에 인접한 중심지가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되면 수변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점 간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광·문화·여가기능 등의 연계를 추진한다.

필요 시 중심지별 관리계획 수립·운영

- 공간구조계획에서 정한 중심지의 기능 및 역할, 기반시설 용량, 가용지 여부 등 공간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중심지별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 도심·광역중심은 도시경쟁력과 고용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중심은 잠재력과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계획의 조정 혹은 수립·운영을 검토

□ 지구중심 및 역세권

보행일상권의 핵심거점인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기반 구축을 위한 집약적 토지이용

- 지구중심 및 역세권 지역은 규모와 배후지역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상업, 문화 뿐 아니라 생활SOC와 결합된 도심형 주거기능 등 다양한 기능의 입체·복합을 유도하여 자족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보행일상권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 교통수단 간 연계가 강화하여 신속·편리한 대중교통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 고용의 중심지로서 고용시설의 집적을 유도하고 양질의 비즈니스 및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생활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생활SOC와 편의시설이 복합된 주거시설을 공급
- 지구중심과 잠재력이 있는 일반 역세권은 생활권계획에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적용하여 보행일상권의 중심거점으로 육성·관리한다.
- 역세권은 특성에 따라 주거·비주거 간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실현한다.
 - 주거·비주거 비율, 도입 기반시설, 용도지역 변경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개발가용지 및 주요 기반시설

개발가용지의 선제적·체계적 관리로 지역 활성화 유도

- 기성시가지에 미·저이용 되고 있는 공공부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권 단위에 필요한 시설 제공 등의 미래 토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개발가용지는 고용창출을 위한 업무 및 신성장산업 시설, 생활SOC 등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용도 중심으로 개발하고 직주근접 및 도심형 주거 등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형태의 주거기능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 대규모 가용지의 전략적인 활용과 효과적인 개발을 위하여 공공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 민간 소유의 대규모 가용지는 필요한 경우 공공의 정책 목표·방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선제적 계획기준을 마련
 - 민간 이행 시 효율적으로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공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
-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는 지역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문화·체육·복지·보육시설 등 생활SOC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창업·일자리지원시설, 공공임대상업시설 등 다양한 시설로 계획한다.

주요 기반시설의 입체복합화로 상부 공간 활용 및 단절된 공간 통합·연계

- 지상철도와 주요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의 기능고도화 정책은 단절된 공간 통합·연계, 가용지 확보, 보행환경 개선, 소음·진동과 같은 생활환경 문제 해소, 지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 기반시설의 입체복합화로 생성된 상부공간은 기반시설의 기능이 유지·개선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 수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용자원으로 활용한다.
-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은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기능의 개발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능이 도입되는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지향한다.
 - 상위계획 및 해당 생활권계획의 방향성, 지역 필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의 도시맥락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

□ 일반 지역

다양한 지역 특성을 유지하며 점진적 변화 유도

- 중심지와 역세권 이외의 기성시가지는 지역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자연경관, 도시 조직, 지역 커뮤니티 등을 고려하여 주거 및 산업 환경을 개선·정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한다.

2) 보존관리대상지

보존관리대상지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복구하여 양호한 자연환경·경관을 시민과 공유

- 개발제한구역은 우수한 생태환경의 유지·보존과 훼손된 지역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녹지를 확충하여 순기능 회복을 유도한다.
 - 해제는 제한적으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영개발 등에 한해 훼손을 최소화하여 추진
- 또한, 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호수 100호 이상, 호수밀도 20호/ha 이상인 경우 해제할 수 있다.
-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집단취락, 단절 토지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을 포함하는 도시공원은 시민이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원으로 활용 시 필요한 시설을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 도심 속 녹지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3) 경관관리

도시경쟁력과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정성적 높이관리체계로 전환

- 자연경관 및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서울시 스카이라인 조성을 원칙으로 도심 속 다양한 열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유연한 방식으로 높이를 관리한다.
- 정비 및 개발 사업 추진 시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및 열린 공간 유도

- 중심지는 다양한 경관 형성을 원칙으로 기능 및 공간구조 등 중심지 특성과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차등 관리한다.
- 일반지역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원칙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용도·밀도·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시가지 경관을 차등 관리하며 중고층의 적정 배분을 계획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내 조망점, 조망대상, 조망축 등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한 관리 대상과 기준 마련
-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 등 자연 자원 연접부는 산 조망과 지형 특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 내외사산, 배후산, 자연녹지 등에 대하여 통경축 확보 및 지형 보호를 위한 배치계획 유도
- 한강·지천 등 수변부는 변화감이 있고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되, 수변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경축을 고려하고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한다.
- 역사문화유산 연접부는 자원 보호를 원칙으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비지원계획¹⁰⁾ 추진과 연계한 공동주택 경관관리방안 마련

- ‘현상설계’ 등을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도시맥락과 조화로운 건축디자인을 유도한다.
- 하나의 거대블록(슈퍼블록)으로 조성되었던 하나의 단지를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하여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 주변 지역과 보행동선이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단절성을 극복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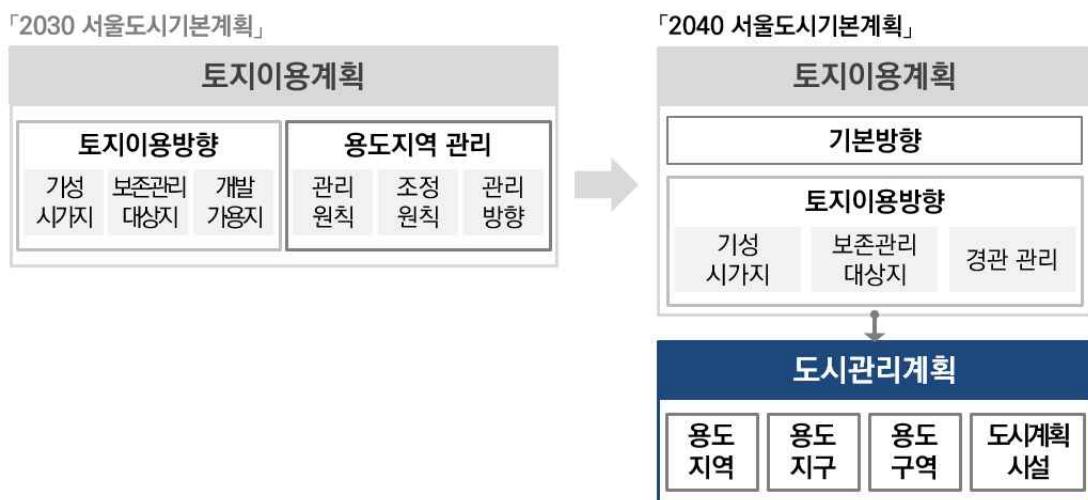
10)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계획을 말하며, 신속통합기획을 의미

제3절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역할과 기능

통합적인 도시관리 방향 및 원칙 제시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관리의 기반이 되는 용도지역편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고 용도지역 관리 및 조정 원칙,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용도지역 뿐만 아니라 별도의 부문별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는 용도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통합적 관점으로 도시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¹¹⁾.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 용도지역·지구·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계획의 일관성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지침 성격을 가진다.



〈그림 4-5〉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구조

11) 도시관리계획 중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2. 용도지역

1) 서울형 용도지역제 ‘Beyond Zoning Seoul’ 관리원칙

관련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목적 및 관리방향을 준수하며 기능과 성능 중심의 정책을 지향

- 경제적·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한 용도지역별 지정목적과 관리방향을 원칙적으로 준수한다.
-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 기능을 유연하게 도입하여 시민의 생활 변화에 맞춰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복합적인 도시 기능을 보행일상권 내에서 쾌적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능과 성능 중심의 정책을 지향한다.

도시공간 및 토지의 융복합적·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연한 운영·관리

- 기존에는 역세권 등 일부 공간에 한정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디지털 전환, 팬데믹 등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간 수요에 대응하도록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실현 대상 공간으로 확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 중심지 기능 고도화,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실현, 지역균형발전 등 서울시 정책으로 고밀·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은 복합용도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및 특례 제도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지역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차등 관리와 용도지역 운영방안 마련

- 기존의 동일 용도지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동일한 규제를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일 용도지역이라도 공간구조·도시조직·기반시설 여건·개발현황 등 지역특성에 따라 용도·밀도·높이 등을 차등 관리한다.
- 세밀하고 구체적인 용도지역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보행일상권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소 중심적인 관리기준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생활여건과 다원화되는 시민수요에 대응한다.

용도지역 조정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확보

- 여건 변화와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용도지역 조정 시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도시계획을 전제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성 및 용도지역 조

정 목적에 부합하는 밀도·용도·높이계획을 유도한다.

-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개별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정 목적 및 기준 등과 정합성을 확보하여 운영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형태의 공공기여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이나 녹지,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시설로 확보한다.

2) 용도지역별 관리

□ 주거지역

- 주거지역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유지하며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및 생활SOC를 확보한다.
 - 양호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주거용도가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 주요 산, 구릉지, 한강 및 지천, 역사문화자원 등 주변 환경과 조화할 수 있도록 적정 용도와 밀도로 관리한다.
- 전용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의 지원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 일반주거지역은 종세분화 기본원칙과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용도, 적정 주거 밀도 및 높이 기준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 준주거지역은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도심형 주거를 비롯한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복합 용도지역으로 관리한다.

□ 상업지역

- 상업지역은 업무·상업·주거·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24시간 활력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융복합적 용도지역으로 운영한다.
- 일반상업지역 중심의 획일적 지정을 지양하고 지역특성, 중심지 체계·혁신축·보행일상권 등 도시공간구조, 개발수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관리목적에 부합한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 중심지 체계 및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지역균형발전, 장래 상업·업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을 지정·관리하고,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변경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역세권 중심의 입체복합화 기조에 따라 상업지역은 중심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정·관리하고, 업무·상업·주거·생활SOC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용도를 유도한다.
- 지역별로 상업지역이 특색 있고 다채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중심지 체계, 지역맥락, 기반 시설 및 입지여건 등 지역특성에 따라 상업지역의 용도·밀도를 차등 관리한다.

□ 준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의 역할을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산업 중심지역의 육성 및 특화관리 수단으로 강화하고, 산업기능 유지 및 산업육성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집중 관리한다.
- 준공업지역은 산업·일자리 기능과 함께 일과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상업·문화·여가기능을 보완하며, 보행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쾌적하고 편리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보행 일상권의 중심지역으로 육성·관리한다
-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반영하고 도시경쟁력 정책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지정·변경을 유연하게 운용한다.

□ 녹지지역

- 친환경 여가공간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이자 기후위기 대응 수단인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확대됨에 따라, 녹지지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공원·녹지로 활용을 다각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강화한다.
-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생태녹지축 연계 등 녹지지역의 지정목적을 훼손하는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은 지양한다.
- 녹지지역 내 불법 용도의 유입이나 공장 등 도시기능의 과도한 밀집에 의해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된 녹지지역은 복원을 원칙으로 관리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타 용도지역으로의 조정을 검토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 관리방향〉

1.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별 수요추정 및 공급방안에 의한 정량적 관리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한적인 조정 조건 제시

- 관련 법령의 재·개정 관련계획에서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
- 주요 시 정책 및 재난 방지 등 급격한 여건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조정은 서울시 용도지역별 소요면적 공급방안 범위 내에서 정량적으로 추진(2011~2030)

- 주거지역: 기성시가지 내 밀도관리를 통한 공급(+5.98km²)
 - 상업지역: 중심지 활성화 및 상위계획 실현 등 필요 시 확대 검토(+1.92km²)
 - 준공업지역: 미래 신산업공간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총량 유지(0km²)
 - 녹지지역: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녹지 감소 최소화(-7.9km²)
- ※ ()는 2011년 현재 면적 대비 2030년 소요 추정 면적의 증감량

2.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디지털 전환시대 도시공간의 융복합적 활용을 위한 정성적 관리

Work·Live·Play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되고 개인 삶의 공간이 작은 도시가 되는 경향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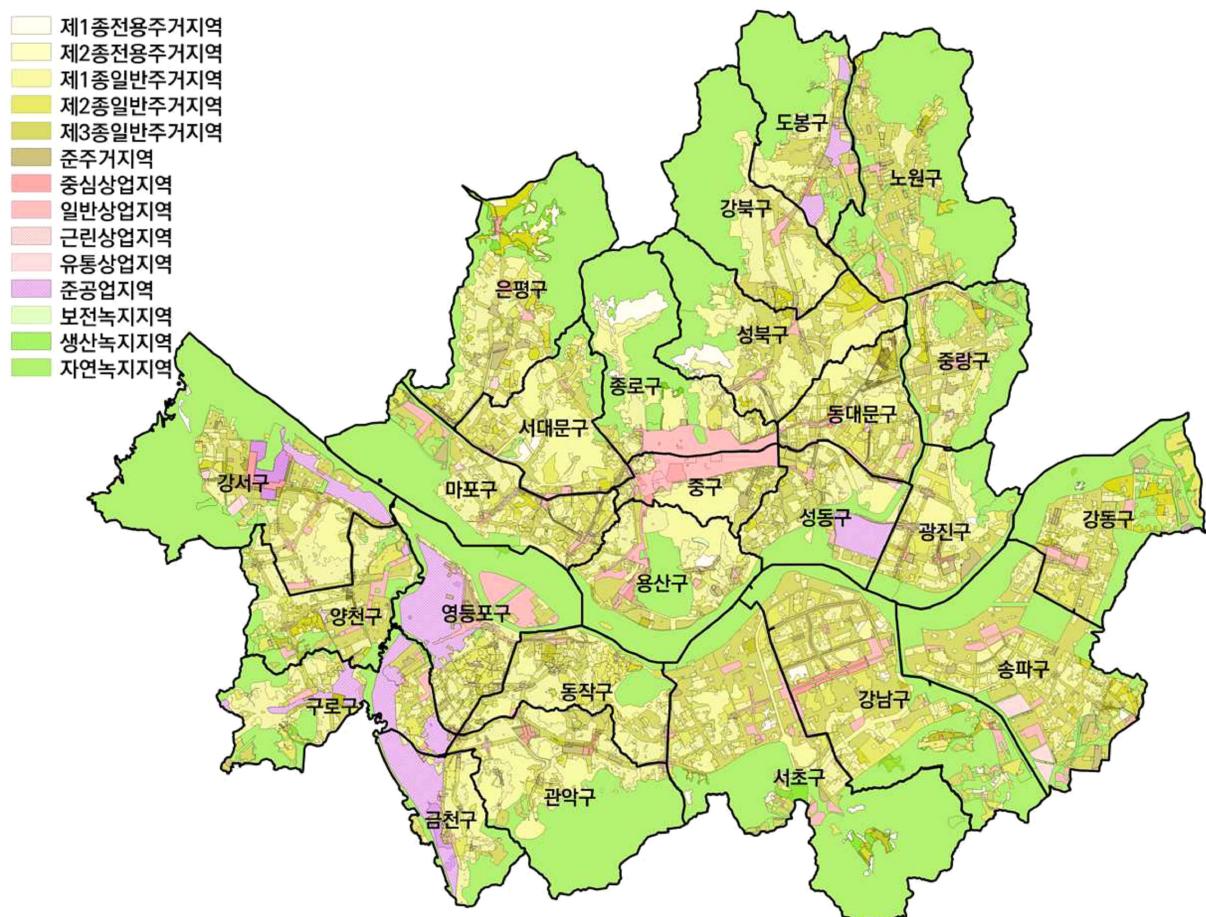
- 경직된 토지이용과 정량적인 용도지역별 관리는 미래 도시공간을 담기에는 한계
- 융복합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물 용도·밀도·높이의 허용범위를 확대

용도지역 조정의 허용범위는 공간목표와 관련 정책실현을 위한 경우로 확대 운영

- 일, 여가, 주거를 걸어서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 실현
- 풍부한 수변자원을 발굴하고 도시매력을 제고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는 수변중심공간 구축
- 도시공간을 단절하고 낙후한 도시기반시설을 보행중심의 입체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 중심지 기능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연계 및 규제혁신
- 미래 교통수단에 도입에 따른 3차원 교통시스템 구축
-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 신종 도시재난에 사전 예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

서울형 용도지역제(Beyond Zoning)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

- 단기: 현행 규제 하에서 유연한 용도지역제 운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간 장벽 해소
- 중기: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 조성
- 장기: 정부와 협의 및 학계·전문가·주민 등 공론을 통한 미래형 도시계획체계 연구



〈그림 4-6〉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2021년

3) 향후 과제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실현을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 역세권 사업 관련 용도지역 관리방향을 검토·제시한다.
- 자치구별 중심지 기능 고도화,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실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상업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 상업지역 지정은 서울시 차원의 권역 자족성 및 자치구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
 - 신규 상업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주변 지역과의 조화, 고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용량, 업무·상업용도의 개발수요, 서울시 정책 및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반영

현재 용도지역체계의 운영·관리 검토 및 공공기여 방식 및 활용의 개선

-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와 밀도의 규제를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서울시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용도와 밀도 규정에 대한 완화를 도모한다.
- 개선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역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로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한 기준과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용도지역 변경 시 적용하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다각화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공공기여 총량 산정, 공공기여 대상 범위 설정 등 공공기여 기준을 구체화하며, 주거·녹지·상업·업무 등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다양화한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 적용방식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보완·검토

단기적으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장기적으로 유연한 도시관리체계 연구 추진

-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상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국토교통부 신설 제도(입지규제최 소구역 등)를 활용하는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형 도시관리체계를 연구하여 정부·학계·전문가·주민을 대상으로 공론화한다.
- 이와 함께 용도지역의 유연한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권자의 재 량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관리·변경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중기적으로는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는 현재의 용도지역제를 진단하고 미래형 용도지역 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중심지 기능 고도화, 스마트도시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미래 토지이용 변화와 포스트코 로나 시대 주택 소요면적의 확대 및 주거기능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밀주거지역 및 도심형 고밀복합지역 검토
 - 신산업 거점, 융·복합지구, R&D 지구 등 미래 신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능·용도를 유 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용도지역 신설 검토

3. 용도지구

1) 관리방향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도록 합리적 관리체계 운영

- 경관·지형·건축현황 등 지역 특성과 지정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용도 지구를 관리한다.
- 산·구릉지·숲 등 자연경관의 보호, 도시환경 경관 유지·제고 등 지구 지정의 목적에 부합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 지역의 관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낮은 지역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정을 검토한다.

2) 용도지구별 운영방향

경관특성 보존 및 강화가 필요한 지역은 경관지구, 고도지구로 관리

- 경관자원과 조화로운 시가지 경관을 유지하거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지·구릉지,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 등 경관특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관리한다.

개발진흥지구·문화지구 등으로 도시 활력을 증진

- 문화, 산업, 복합용도 등 지역별 특성 있는 및 도시기능을 증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육성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지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도시기본계획 미래상과 7대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구체적인 관리수단과 연계한다.

4. 용도구역

1) 관리원칙 및 운영방향

- 자연환경·생태계 보존,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의 편익,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서울시 지정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운용한다.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확장 한계로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제하고 훼손을 최소화한다.
- 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주택호수 100호 이상, 호수밀도 20호/ha 이상인 경우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 소규모 단절 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중에서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별도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집단취락, 단절 토지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체계적인 계획 유도를 위해 개발 제한구역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공원의 한 종류로서 공원 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생태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으로 도시민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보전 및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 도시공원 중 공원시설의 설치, 이용 및 접근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관리하고, 도시공원 중 생태 및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경관 보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과 식생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보,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한다.

2) 주요 추진과제

서울시 도시공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통합한 도시공원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도시 공원에 대한 중장기적·통합적 관리계획을 마련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을 통합한 “서울시 도시공원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도시공원 지정 및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운영

-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조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속적 보상 추진 및 제도 개선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정적·비재정적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한다.
- 녹지 활용계약 등 비재정적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구역 내 행위제한, 재산세 감면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5. 도시계획시설

1) 관리원칙 및 운영방향

공공서비스 및 공공자산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고도화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한다.
- 현재와 장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민 수요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질적 수준 제고

- 이용자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 종류·규모를 결정하고 실질적인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현황과 수요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유연한 공급 및 관리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및 입체복합 유도

- 도시계획시설의 노후화 및 저이용, 가용지 부족 등에 대응하고 필요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입체·복합적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특히, 역세권에 입지한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 시, 중복·복합을 유도하여 생활밀착형 시설로 공급한다.
- 도시계획시설을 입체·복합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친환경적인 개발 및 정비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설의 활용을 지향한다.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안전성 확보

-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공급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므로 노후 시설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정기적 점검으로 특별 관리한다.

2) 주요 추진과제

도시계획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공급기준 보완 및 모니터링

- 지역의 인구 및 가구 특성, 접근성, 주변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시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공급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원칙 및 기준을 마련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기준에서는 기존의 정량적 기준에 더하여 접근성, 형평성, 보완성, 다양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유도기준으로 전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공급 실태 및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 또는 이용자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특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입체·복합 원칙과 구체적 기준 마련 및 실행

- 개발 가용지 부족, 인구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여건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공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공공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 도시계획시설 본연의 기능 유지, 공익 창출, 구조적 안전성 확보,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최소화 등 도시계획시설 활용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도시계획시설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체계를 정비하며, 현황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사업부서 및 자치구와 공유하여 자료를 일원화한다.
 -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하여 공간정보로써 활용성을 제고
 -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운영 관련 정보를 포괄하는 관리시스템으로 고도화
- 임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시설) 및 공공기여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일괄 결정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미집행시설 및 공공기여의 집행력 강화

-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다양한 재원 확보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집행력을 강화한다.
-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다.

제5장 생활권계획

제1절 생활권계획의 개요

제2절 생활권 구분 및 설정

제3절 권역별 구상

제1절 생활권계획의 개요

1.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배경

- 서울시는 2013년에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을 발표하며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정교한 도시관리와 시민 생활개선 과제를 담고자 하였다.
- 2014년에는 20년 장기적인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범위를 규정하였다.
- 생활권계획은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등을 통해 별도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었고, 서울시가 생활권계획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 2019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생활권계획의 수립·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권역생활권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을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2012년 4월에 생활권계획 수립을 착수하였고 2018년 3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확정하였다.

2. 생활권계획의 개념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이자 후속계획이다.
- 생활권계획은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 생활권이란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를 의미
-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다양한 생활개선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서울시·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 관련 주체가 협력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
- 생활권계획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권 간 격차뿐만 아니라 생활권 내의 격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생활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적인 공공투자와 중점정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갈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

3. 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기능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단위로 구체화·종합화

-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과 공간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다양한 가치와 정책방향을 공간단위로 구체화한다.
- 이에 따라 분야별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담아내는 중간 단위 성격의 계획으로, 자치구 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하위 및 관련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 주거지 관리를 포함한 복지, 문화, 교통 등 시정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조정하여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시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사업, 도시관리계획 등을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이 된다.

자치구 발전계획 및 자치구 간 상생발전을 위한 근거 제시

- 자치구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5개 권역 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조정한다.
- 자치구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특정시설의 입지 시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2개 이상의 인접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급효과가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생활권 차원에서 조정·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생활권계획의 구성 및 수립방향

- 생활권계획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계획내용을 권역별로 제시하는 권역별 구상과 후속계획인 권역생활권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성된다.
 - 특히 지역생활권계획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 보행일상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공간관리지침을 지역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제시
- 권역별 구상은 5개 권역(대생활권)별로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방향과 부문별 계획과제를 제시하며, 이후 생활권계획 재정비 시 기본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권역생활권계획은 공간적으로 권역별 경쟁력과 자족기반을 강화하여 권역 간 균형성장을,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 권역생활권계획은 권역의 발전 목표와 함께 권역 내 중심지와 주거지 등의 관리 및 육성방향을 제시
 - 지역생활권계획은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권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
- 생활권계획의 계획항목은 권역발전구상과 지역발전구상, 공간관리지침 3개로 구성되며, 공간관리지침 내용은 시민·행정기관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해 권역 및 지역별로 구분한다.
 - 권역·지역발전구상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단위로 구체화 및 종합화
 - 공간관리지침은 권역·지역발전구상을 공간단위로 구체화하고 관련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할 경우 권역별 구상의 발전방향과 계획과제의 내용을 반영하되, 생활권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수립할 수 있다.
 - 필요 시 기존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수립방식, 절차, 구성, 운영방안 등을 진단하고 개선 하여 수립·운영

〈표 5-1〉 생활권계획별 특성 및 주요내용

구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권역별 구상	권역생활권계획	지역생활권계획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상·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을 5대 권역별로 공간화 • 생활권계획의 재정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요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구상의 구체화 • 지역생활권의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상의 개선과제와 주민밀착형 이슈 발굴
계획범위	권역생활권 단위	권역생활권 또는 중생활권 단위	인구 10만 명 내외(3~5개동)
수립 목적		권역 간 균형성장을 위한 권역별 경쟁력과 자족기반 강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생활환경 개선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 주거환경, 교통체계, 산업경제, 공원녹지, 지역 특화 등에 관한 계획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발전구상: 미래상, 목표 및 전략(도시공간, 산업일자리, 교통 등 핵심이슈별) • 공간관리지침: 공간구조 구상, 중심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방향: 이슈 도출(지역 현안 관련), 미래상, 목표 • 지역발전구상: 목표별 전략 • 공간관리지침: 중심지(지구중심), 생활SOC 등

제2절 생활권의 구분 및 설정

권역생활권 및 지역생활권 구분 방식 유지

- 서울의 생활권은 기존 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
 - 현행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 차원의 미래상과 발전구상이 없어 중간단계 계획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시 자치구 단위로 통합하여 수립 가능
- 권역생활권은 지형·지세, 하천, 도로 등의 자연적·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 과정과 영향권, 중심지 기능과 토지이용 특성, 행정구역과 교육학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 권역(대생활권)으로 구분한다.
 - 5개 권역은 도심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 동남생활권으로 구성
 - 권역생활권은 행정구역 및 인구수, 거주인구 및 토지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2개 이상의 자치구를 하나의 공간단위로 하는 중생활권으로 세분 가능
- 지역생활권은 보행일상권의 단위로 인구 10만 명 내외의 3~5개동으로 구성되며, 생활권 계획을 재정비할 경우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구분한 지역생활권은 필요시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보완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림 5-1〉 권역생활권 구분

제3절 권역별 구상

1. 권역별 구상의 개요

권역별 발전방향과 계획과제 제시

- 2040 권역별 구상은 2030 생활권계획 수립 이후 변화한 여건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공간계획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다.
-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참여형 행정계획의 취지를 살려 자치구 정책 및 의견을 구체화하고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금번 권역별 구상에서는 자치구 의견수렴과 권역별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발전방향과 계획과제를 제시하였다.
 - 5개 자치구 방문면담과 권역별 워크숍·후속 논의에서는 자치구 및 권역별 중점사업에 초점을 맞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권역별 구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별 구상(안) 작성

1차 25개 자치구 방문면담	2차 권역별 워크숍	3차 권역별 후속 논의	4차 권역별 의견수렴
2019. 8. ~ 2019. 9.	2020. 2.	2020. 3. ~ 2020. 4.	2022.6

〈그림 5-2〉 권역별 구상 도출을 위한 논의 과정

권역별 계획과제는 6개 부문으로 구성

- 권역별 계획과제는 미래상, 부문별 전략계획 및 공간계획을 연계하여 권역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도시공간, 주거환경, 기반시설, 공원녹지, 지역특화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2. 도심권

〈표 5-2〉 도심권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권역 발전 방향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 재탄생”
구분	계획과제
도시공간	서울도심,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정비사업을 연계·추진하여 활력 제고
	서울역 및 주변지역의 종합개발로 국내외 중심 역할 강화
	용산 광역중심, 교통망과 다양한 기능이 집결한 새로운 국가상징거점으로 육성
	신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심지 육성
주거환경	서울도심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 추진
	서울도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서울도심 주거지의 역사적 특성 보전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능 강화
기반시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으로 지역 간 단절 해소
	보행 중심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권 생활물류시설 확충
공원녹지	서울도심을 녹지생태 공간이 가득한 경쟁력 있는 복합도심으로 구축
	용산공원의 정체성·역사성·상징성 회복을 위한 종합계획 및 적극적 관리방안 수립
지역특화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경제·역사·문화도심으로서 서울도심의 기능과 특성 강화
	지역정체성을 유지하며 청와대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녹지 활용 방안 마련

1) 도시공간

서울도심,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정비사업을 연계·추진하여 활력 제고

- 4+1축과 연계한 신산업 및 도심형 주거의 고밀복합개발로 서울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 획일적인 높이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울도심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면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특화산업과 융·복합된 관련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검토하고, 창업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 종묘~퇴계로 일대(종로의 귀금속, 충무로의 인쇄출판·영화산업), 동대문 일대(패션, 디자인) 등은 도심형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지역 내 산업생태계 및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며 특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 보존이 필요한 도심부는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정비유형을 적용하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한다.
 - 지역 특성에 따라 소단위 정비 및 보존 재개발 방식 다양한 정비유형 적용

서울역 및 주변지역의 종합개발로 서울도심 중심성 강화

- KTX, GTX, 신안산선, 인천공항철도 등 다수의 광역철도교통이 교차하는 서울역 및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도심권의 중심성과 국제적 기능을 향상한다.

용산 광역중심, 교통망과 다양한 기능이 집결한 새로운 국가상징거점으로 육성

- 용산 광역중심이 국가상징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도심과 용산 간 대중교통 연결 체계를 개선하고 국제·광역접근성을 강화한다.
 - 미래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하~지상공간 연계된 입체도시를 조성하고, ICT기반의 미래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기술혁신의 선도도시 조성
 - 용산의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도심권의 광역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산 남북축 지하도로를 신설을 검토하고 주요 간선도로 순환망과 연계된 지하 도로체계를 구축
 - 공항 등 주요 거점을 도심항공교통으로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검토
 - 강변북로 재구조화로 상부 공간 활용 및 거점 간 연결 도로·교통시설 재구축 검토
-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한 주변 산재부지를 업무·주거·문화·여가 등이 공존하는 복합기능 지역으로 조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국제업무중심지로 육성한다.
 - 용산정비창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여 국제 업무·MICE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여가, 주거, 문화 등 모든 활동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복합용도 도입
 - 캠프김 부지는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다기능 복합용도의 한강로변 신(新) 복합업무거점으로 개발
 - 수송부 부지는 개발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캠프김과 연계하여 외교·관광·문화 등 국제관광문화 특화 거점으로 조성
-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 다양한 유형 및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한강과 용산공원을 연계한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 교통 체증, 주민 간 갈등, 소음·분진 발생, 조망·채광 악화 등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검토하여 최소화

신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심지 육성

- 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신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중심지를 육성하고, 도로·교통시설을 재구축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한다.

2) 주거환경

서울도심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 추진

- 서울도심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도심형 주거를 개발·도입하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거 공급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거주 계층의 다양화·혼합화를 지향
 - 누구에게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령자, 1·2인 가구 등 인구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공공의료와 문화·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을 마련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 주거 및 복합기능을 도입할 경우 도시계획적 지원과 함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을 검토한다.

서울도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서울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신규 도입을 검토

서울도심 주거지의 역사적 특성 보전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능 강화

- 한옥밀집지역, 한양도성, 궁궐 등 역사문화재 주변 주거지의 특성을 보전할 수 있는 정비 방식과 함께 자율적인 주거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추진

3) 기반시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으로 지역 간 단절 해소

- 경부선 철도 입체화를 검토하여 지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용산공원과 연결하여 동서 간 단절을 극복한다.

보행 중심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 주차상한제 강화, 공해 차량 통행 제한 확대, 탄력적인 주차요금제 적용 등으로 도심 내 승용차 수요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도심 우회도로를 조속히 확충하여 서울도심 내 도로·교통시설체계를 재편한다.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등 도시철도망을 확대하고 간선급행버스(BRT) 확충 등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 개인이동수단(PM),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지상 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간선도로(CRT)를 확대 설치하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 및 확대·재편한다.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권 생활물류시설 확충

- 도심권역에서 생활물류가 원활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등 저이용 기반시설에 대해 물류 복합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소규모 집배송시설 또는 도심형 물류센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유도한다.

4) 공원녹지

서울도심을 녹지생태 공간이 가득한 경쟁력 있는 복합도심으로 구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도심 내 다양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심의 녹지 공간의 비율을 세계 선진 대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녹지공간 조성 시 오픈스페이스 집적·연계를 위한 배치와 개방형 녹지 확대 등을 유도하고 녹지생태 네트워크를 구축
 - 정비사업이 기 완료된 구역은 리모델링 시 공개공지 재조성이나 입체녹화 등으로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 유도
 - 인사동, 북촌 등 특색 지역은 장소 맞춤형 보행 녹지 가로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용산공원의 정체성·역사성·상징성 회복을 위한 종합계획 및 적극적 관리방안 수립

- 남북녹지축과 동서수경축이 만나는 서울의 지리적 중심인 용산공원은 입지적 중요성과 역사적인 상징성에 따라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 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과정에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

-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남산에서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복원하여 보행자 녹지생태축을 조성하고, 공원 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개선한다.
 -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는 권역 녹지축 형성과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계획 수립
 - 남산~한강 보행 녹지생태축 조성을 위한 입체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및 보행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
- 누구나 편하고 쉽게 용산공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접근 체계를 정비하고, 입체 보행교 설치,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 공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용산의 장소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공원 내부에서 주요 거점 경관자원을 향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경관 사유화를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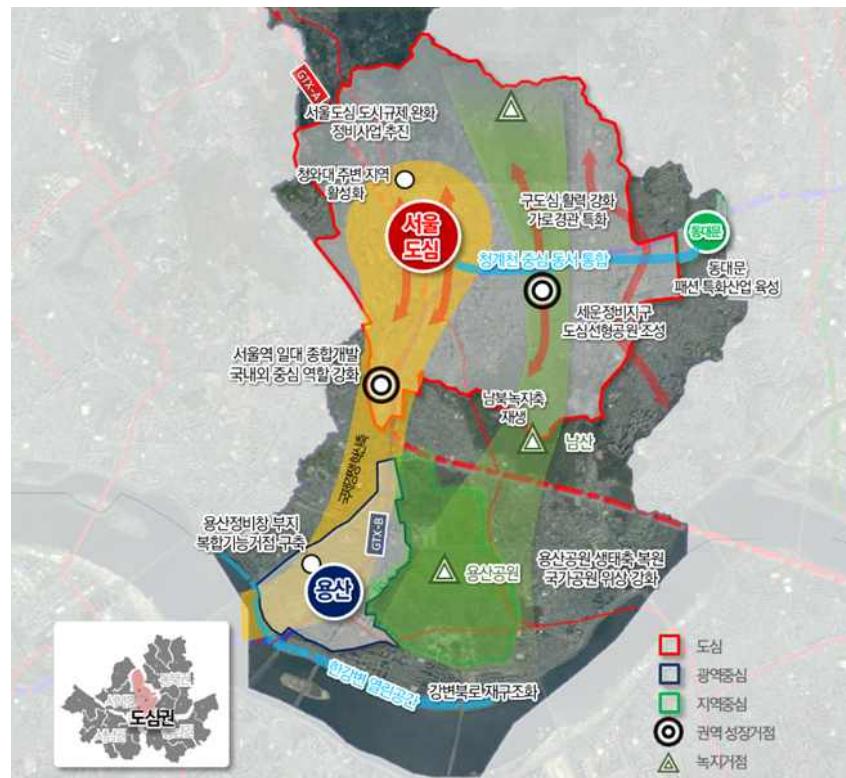
5) 지역특화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경제·역사·문화도심으로서 서울도심의 기능과 특성 강화

- 서울도심이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경직된 보존으로 사라지거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장소성을 증진할 수 있는 유연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지인 서울도심의 문화관광 지원기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내사산, 한강, 청계천 등 자연환경 및 역사 문화재 주변 지역의 경관관리를 강화하고, 북촌길, 인사동길, 대학로, 명동길, 이태원로, 삼청동길 등 특색 있는 가로경관의 증진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정체성을 유지하며 청와대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녹지 활용 방안 마련

-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청와대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청와대 및 주변 녹지 활용방안을 계획할 때 과도한 개발로 지역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 문화재·자연녹지와 조화를 추구한다.
 - 청운·효자·삼청동 지역과 청와대의 보행 연결방안을 마련하고 관광 인프라로 계획하여 주변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



〈그림 5-3〉 도심권 발전구상

3. 동북권

〈표 5-3〉 동북권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권역 발전 방향	“신성장·교통경제거점으로의 도약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구분	계획과제
도시공간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 동북권의 최대 교통·경제 중심지로서 위상 제고
	창동·상계 광역중심, 미래 신산업과 문화예술 기반의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지 육성
	도심 접근성 강화로 광역중심을 서울의 신 성장거점으로 발전 유도
	지역의 내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중심 특화발전 도모
주거환경	청년첨단 혁신축을 중심으로 신 산업거점을 육성하여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견인
	정비시기 도래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선제적 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높이 및 배치로 다양한 경관 창출 유도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입체복합화 검토
	지역 및 중심지 간 교통 연결성을 강화하여 교통 소외지역 해소
공원녹지	수도권과 동북권을 연계하는 교통 연결성 및 기능 개선
	수변친화 생활공간 조성 및 녹지공간과 연계
지역특화	풍부한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 구축
	동북권 문화·창조 허브 조성 및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역사문화자원과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거리 및 관광 명소 조성
	우수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지식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연계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한 도심 제조업 고도화

1) 도시공간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 동북권의 최대 교통·경제 중심지로서 위상 제고

-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은 동북권의 최대 교통 결결지로서 역세권과 저이용·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업무·상업·주거·문화의 복합기능을 확충·집적하고 교통연계 환승 기능을 강화하여 중심지 간 연결성을 향상한다.
 - 수도권 동북부 광역수요를 고려하여 가용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
 - 강변북로 재구조화 등 교통인프라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녹지로 조성하고 기존 녹지축과 연계하여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

-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조성, 왕십리역 GTX-C 노선 및 동북선 신설로 동북권의 광역교통 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상·지하 공간구조와 보행체계를 개선
- 청량리 전통시장의 재정비, 왕십리 일대 성동경찰서를 비롯한 행정기관 이전 등을 추진하고 업무·상업기능을 강화

창동·상계 광역중심, 미래 신산업과 문화예술 기반의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지 육성

- 창동·상계 광역중심의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및 문화예술 특화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K-POP 등 한류 문화관광의 문화거점으로 활용한다.
- 창동·상계 중심지 주변의 도시 부적합시설의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단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창동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등 도시 부적합시설의 이전 계획과 가용지의 복합개발 검토

도심 접근성 강화로 광역중심을 서울의 신 성장거점으로 발전 유도

- 경기 북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중심을 글로벌 미래 혁신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역 고속철도, 경전철, 간선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도심 접근성을 강화한다.
 -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광역중심에 상업·문화 기능을 집중·강화

지역의 내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중심 특화발전 도모

- 성수 지역중심은 성수동 준공업지역과 연계하여 ICT 산업 특화거점으로 육성하고, 건국대·한양대·세종대 등 주변 대학을 연계한 창조적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조성한다.
 - ICT·자동차·인쇄 및 디지털 콘텐츠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주변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전시·체험·쇼핑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 동대문 지역중심 중 신설동역 일대는 공공용지와 청계천 주변을 활용하여 관광·업무·상업·문화 중심으로 육성한다.
- 망우 지역중심은 우수한 교통 여건을 기반으로 동북부 수도권의 업무·상업·문화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기능 및 인접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 경기 북부(의정부, 동두천 등)와 경기 동북부(구리, 남양주 등) 지역과 교통연계 강화
- 미아 지역중심은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자치구의 여건을 반영하여 문화·쇼핑·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중심지로 육성한다.

청년첨단 혁신축을 중심으로 신 산업거점을 육성하여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견인

-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전략이자 고용 창출 기반인 흥릉 바이오의료허브를 광역중심인 청량리·왕십리와 연계하여 혁신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
- 광운대 역세권 일대는 신설·물류 부지를 활용하여 동북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켜 동북권의 자족성을 강화한다.
-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등 권역 내 대규모 가용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동북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특화산업 집적지를 조성한다.
- 청년첨단 혁신축의 산업기능을 중랑~구리, 천호~하남 등으로 광역적 확산과 연계를 강화한다.

2) 주거환경

정비시기 도래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선제적 관리계획 수립

- 노후 공동주택 정비사업 추진의 확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맞춤형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 노원구 상계와 중계 등 대규모 노후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단위 도시기반시설 공급 및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
 - 디지털 전환으로 다양화되는 미래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여 주거와 일자리가 융합된 자족형 공동주택단지 도입 유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높이 및 배치로 다양한 경관 창출 유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높이 관리로 유연하고 특색 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고 도시경관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 한강과 중랑천 등 수변부는 수변으로 열린 시야를 조성하고, 변화감 있고 다양한 경관 형성
 - 북한산 등 구릉지는 산 조망과 지역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및 배치계획을 유도

3) 기반시설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입체복합화 검토

- 서울 시계까지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지상부 공원·녹지 조성으로 수변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역 내 주요 산과 하천 등을 연계하여 중랑천 문화녹지축 활성화를 유도한다.

- 경의중앙선, 2호선, 4호선(창동~당고개 구간) 등 지상철 일부 구간에 대하여 단계적인 입체복합화를 검토하고 지상부에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 및 중심지 간 교통 연결성을 강화하여 교통 소외지역 해소

- 권역 내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KTX 동북부 연장(수서~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 구간), 동북선 연장,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강북횡단선 등 철도망을 확충한다.
- 권역 간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북권 내 광역교통 결절점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과 지하교통망 등 입체적 교통체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 대규모 도시변화 예정지를 고려하며 지하도로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

수도권과 동북권을 연계하는 교통 연결성 및 기능 개선

- 동북권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관문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원구~의정부, 도봉구~양주, 중랑구~구리·남양주 구간 등 교통흐름 개선, 4·7호선 급행화 등으로 인접도시간을 단축한다.

4) 공원녹지

수변친화 생활공간 조성 및 녹지공간과 연계

- 옛 물길 복원 등 재정비 사업과 연계한 수변 친화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여가 및 레저활동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당현천, 우이천, 성복천, 정릉천, 긴고랑천, 수락산 소하천 등 지류 하천 정비 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여가·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수변 친화적 공간 조성
- 일자리·상업·여가문화 기능과 수변·녹지를 연결하여 보행일상권이 구현되는 워터프론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강·중랑천·청계천 등 수변과 서울숲, 공원 등 녹지를 연계한다.
 - 한강·중랑천 등에 구릉지 지형을 활용하여 주변 자연 및 도시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거점을 조성

풍부한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 구축

- 풍부한 자연환경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북한산~도봉산~중랑천~수락산 등과 지역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
- 도시공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과 기성시가지 경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5) 지역특화

동북권 문화·창조 허브 조성 및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 창동 서울아레나,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등 지역자원을 광역 문화·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기업 유치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시 복합문화시설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공급하고 성수동 일대와 서울숲, 한강을 연계하여 문화관광 거점 및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랜드마크 명소로 조성

역사문화자원과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거리 및 관광 명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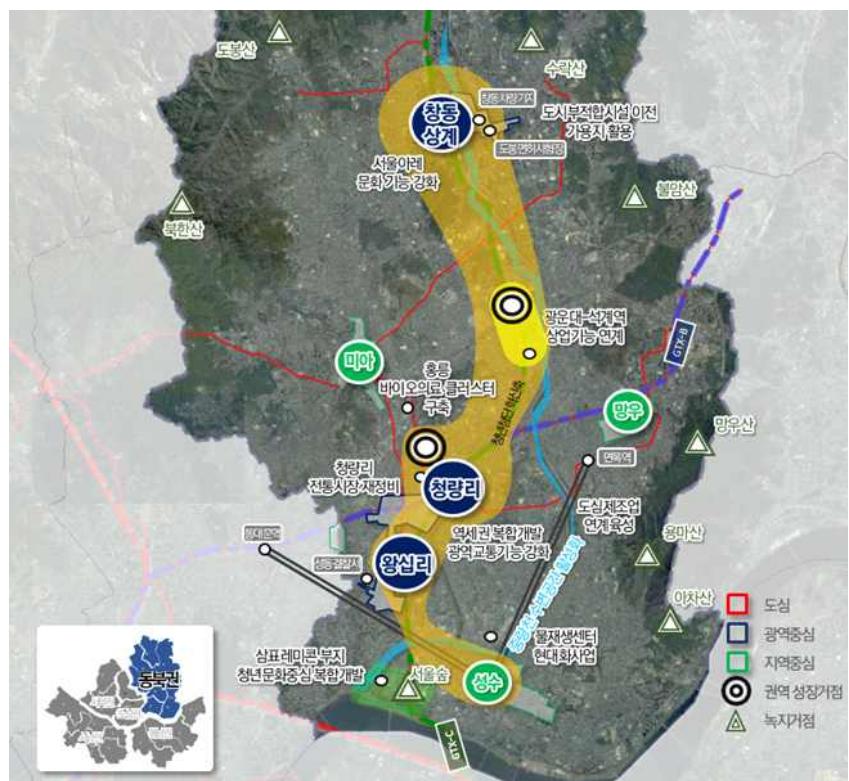
- 역사·생태문화공간과 권역 내 주요 산, 하천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역사문화탐방 등 체험 연계형 관광명소로 개발한다.
 -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
-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차로과 보행로의 분리계획 등 특화가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노원역, 광나루역 등 역세권 특화가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활성화 도모

우수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지식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연계

- 권역 내 다수의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직접 고용 창출을 위한 대규모 창업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 덕수고 이적지 및 지역 내 기존 교육인프라를 활용·연계하여 복합교육문화시설을 조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노파크, 한전연수원 일대를 지식기술산업 거점으로 육성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한 도심 제조업 고도화

- 동대문(패션)~면목(패션·봉제)~성수(수제화·디자인) 등 도심제조업을 연계·육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앵커를 확대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도심제조업의 생산 환경을 혁신하며 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5-4〉 동북권 발전구상

4. 서북권

〈표 5-4〉 서북권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권역 발전 방향	“지역 연계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문화거점 구축”
구분	계획과제
도시공간	상암·수색 광역중심, 국제적 창조문화 중심지로 육성을 위한 가용지 활용과 광역교통체계 정비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창조 기반 연계 체계 구축과 특화거점 조성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교통 결절점의 복합개발 추진과 신규 역세권의 관리방안 마련
주거환경	대학교 밀집지역, 청년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과 주거지 관리
	주거지 정비사업의 합리적 추진
기반시설	기반시설 입체복합화에 따른 가용부지 확보와 시민 맞춤형 생활SOC 확충
	인접지역 간 연결 교통망 고도화
	물류기능 인프라 체계 정비
공원녹지	수변공간의 활용성 제고 및 녹지·공원 연계 촉구축
지역특화	문화·출판·창조산업 등 미디어문화콘텐츠 자원을 이용한 지역 특화 도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산업·문화·자연 등 거점 간 연계성 강화

1) 도시공간

상암·수색 광역중심, 국제적 창조문화 중심지로 육성을 위한 가용지 활용과 광역교통체계 정비

- 상암·수색 광역중심은 상업·업무 토지이용 극대화 및 주변 중심지와 연계로 R&D 관련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의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고도화하며, 수색역사 복합개발 및 철도 가용지 개발로 서북권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 수색역 일대는 디지털미디어산업의 중심거점과 서북권 광역교통 결절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등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첨단 미디어 기능을 비롯하여 미래첨단산업 플랫폼과 복합 상업공간으로 조성
- 난지도는 지역 성장을 위한 가용지로 적극 활용하고 상암~난지도~마곡 간 월드컵대교 추가 교량 완공 등 연결성을 강화하여 글로벌 창조문화산업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
- 서부운전면허시험장부지, 은평공영차고지, 마포 농수산물시장부지 등 저이용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인력 양성 및 연구기능을 조성하며 상암·수색 광역중심과 연계하여 서북권의 기술혁신 산업거점으로 구축한다.
 - 서부운전 면허시험장 일대는 방송·영상산업의 거점인 상암 DMC와 기능을 연계하여 DMC를 지원하는 업무와 여가·문화 및 주거 복합 기능 도입

- 서북 관문에 위치한 저이용 부지인 은평공영차고지 일대는 수색역 일대 및 고양시 향동지구와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산업과 주거·문화기능 등 복합기능의 신산업거점으로 육성
- 공항철도, 경의선, 6호선이 만나는 교통 요충지인 수색역을 서북권 광역교통 중추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행정기능 및 국제물류기능을 강화한다.
- 경의선으로 단절된 상암·수색지역 자치구인 마포구와 은평구 간 연계 교통망 구축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창조 기반 연계 체계 구축과 특화거점 조성

- DMC를 중심으로 조성된 창조문화산업 기반과 지역 내 다수 대학 지원을 활용하여 거점별 특화전략을 도출하고, 각 거점을 산업적·물리적으로 보완·연계하는 축 중심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 파주, 고양 등 수도권 북부지역과 산업축 구축 및 광역교통 기능 고도화
- 마포·공덕 지역중심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산업·창작 공간을 도입하고 마포로 등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업무·문화·상업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특화거점으로 육성한다.
 - 서울도심 및 여의도, 용산과 기능적 연결성을 확보하여 중심지와 연계된 산업축 조성
-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한 효율적 토지이용으로 주거·업무·여가를 총족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창의적 환경을 조성한다.
 - GTX가 도입되는 연신내의 광역교통기능 인프리를 강화하고 주변 자치구와 교통망을 연계하여 서북권 광역교통 거점을 조성한다.
 -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업무·상업, 주거, 창업, 공공·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경제문화타운으로 조성하여 서북권의 북부 신경제거점으로 육성
- 신촌·홍대·가좌 등 대학 인접 역세권은 창업 지원 공간을 구축하고 청년 중심의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 창업·문화복합거점으로 실현한다.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교통 결절점의 복합개발 추진과 신규 역세권의 관리방안 마련

- 역세권 등 주요 교통 결절점에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업·업무·주거·여가기능의 복합개발로 직주근접을 유도하고 주변 주거지역의 상업·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보행일상권을 실현한다.
 - 불광역, 연신내역, 홍제역, 새절역, DMC역, 명지대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개선 추진

- 서부선 경전철 및 강북횡단선 개발에 따른 신규 역세권에 대하여 지역 특성과 보행일상권 실현을 고려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2) 주거환경

대학교 밀집지역, 청년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과 주거지 관리

- 신촌 일대의 대학교 밀집지역은 청년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확충 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로 다양한 계층·세대가 어울려 사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한다.
 - 공공기여, 저이용 기반시설 입체복합개발 등으로 균린공원, 보육시설, 여가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을 확보

주거지 정비사업의 합리적 추진

-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촉진을 유도하고, 추진이 미비한 정비구역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 정비사업 추진 시 생활권 내 필요한 생활SOC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기반시설

기반시설 입체복합화에 따른 가용부지 확보와 시민 맞춤형 생활SOC 확충

- 철로·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지하화 및 입체복합화를 검토하고 입체복합화로 조성된 가용공간이나 저이용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수요에 부합한 지역 맞춤형 생활SOC를 공급한다.
 - 경의중앙선(수색·가좌~북아현동~신촌~서울역) 지선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공원, 자전거도로 등 여가 및 보행친화공간으로 조성
 - 경의선 지하화 및 서부선 경전철 연세대역과 연계한 신촌 창업플랫폼 공간 구축

인접지역 간 연결 교통체계 고도화

- 서북권의 이동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접지역 간 연결하는 도로·철도·터널 등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 잦은 정체가 발생하는 통일로는 서울시 간선도로 지하화 계획과 연계하고, 은평새길, 평

창터널, 고양삼송~은평뉴타운과 서울도심·용산·강남 간 직결 교통체계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지하도로 등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와 실현 방안 마련을 모색한다.

물류기능 인프라 체계 정비

- 서북권 생활 물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은평공영차고지, 철도차량기지 등 지역 내 유휴공간 재정비 시 물류기능을 강화하는 허브물류단지 등 조성을 검토한다.

4) 공원녹지

수변공간의 활용성 제고 및 녹지·공원 연계 축 구축

- 권역 내 자치구 간 합의된 공동 수계(홍제천·불광천 등) 및 남북녹지축(북한산~한강)을 대상으로 녹지·공원 연계 발전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서북3구 공동협력을 기반으로 공동 수계를 개발하고 생활권 녹지 및 하천축과 연계
 - 홍제천 등 하천의 단절된 주요 지점 복원 및 명소화사업,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공원화구역(마포새빛문화숲)의 한강과 연계한 여가시설 조성 등 다양한 수변 특화공간 조성 방안 마련
- 녹번천, 불광천 등 복개된 하천은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자연성을 회복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며 주변 녹지·공원과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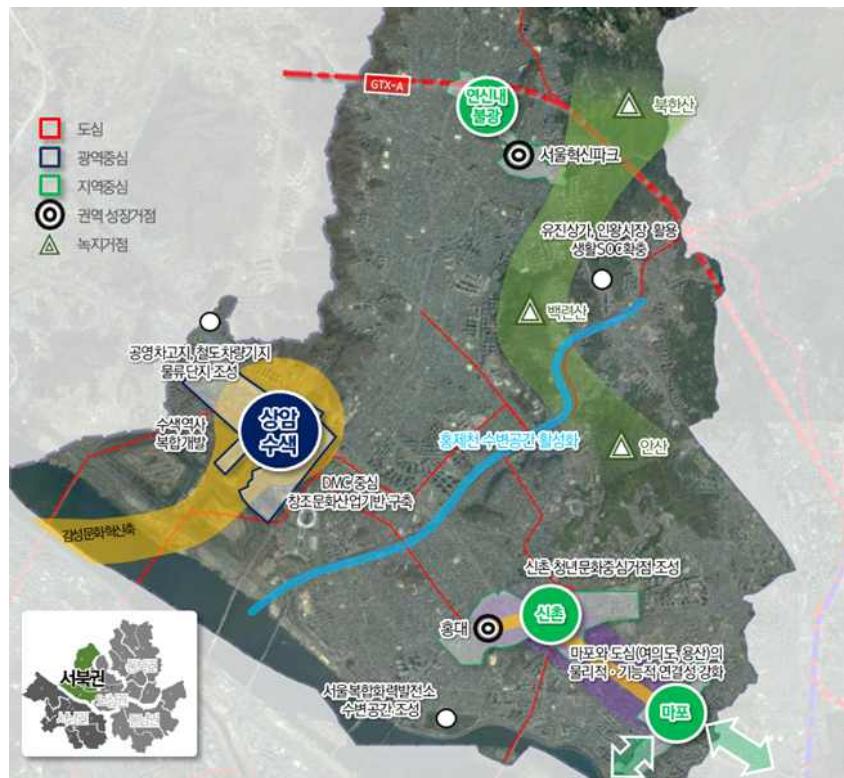
5) 지역특화

문화·출판·창조산업 등 미디어문화콘텐츠 자원을 이용한 지역 특화 도모

-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로 서울시 문화중심지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창작에 특화된 권역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 내 문화 자원을 활용 및 연계, 창작·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으로 미래융합형 창조콘텐츠 산업기반과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 상암DMC 방송·미디어 산업과 연계된 공연장, 문화창작 공원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 상암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은평구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불광천을 따라 상암에서 은평 성모병원 구간을 방송문화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
 - 북한산 진관사 및 은평 한옥마을 일대의 한문화 특구, 국립한국문학관(2024년 준공 예정), 문화예술인마을(2026년 준공 예정)과 인근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문화예술거점 육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산업·문화·자연 등 거점 간 연계성 강화

- 북한산, 한강 등 서북권 녹지·수변축과 연계된 관광·힐링 벨트를 구축하고 강변북로의 입체·복합화로 랜드마크를 조성하며 한강과 연계한 친환경 문화거점을 육성한다.
-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간 연계성 강화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 내 주요 거점을 순환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그림 5-5〉 서북권 발전구상

5. 서남권

〈표 5-5〉 서남권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권역 발전 방향	“교육·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신산업 기반 혁신”
구분	계획과제
도시공간	여의도·영등포 도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공간구조 구축
	가산대림 광역중심, 대구모 가용지를 활용한 혁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마곡 광역중심, 인접 지역과 연계한 지식기반산업 거점으로 육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별 특화 육성 계획 수립
주거환경	역세권 중심지의 일자리·복합 기능 강화 및 관리방안 마련
	노후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지원 강화 G밸리 연계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익시설 및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
기반시설	지역 내 단절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추진
	권역 내 교통체계 개선과 연결성 강화
	도시첨단물류단지 중심의 서남권 생활물류체계 구축
공원녹지	수경축 및 남북녹지축 연계와 공원·녹지 및 수변공간 접근성 강화
지역특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공간 육성으로 권역 경쟁력 강화
	권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축 육성

1) 도시공간

여의도·영등포 도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공간구조 구축

- 여의도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여의도 일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
- 여의도~영등포 간, 여의도·영등포 도심~인접 지역 간 대중교통 및 보행접근성을 개선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도심으로 형성하여 통합적인 공간구조를 구축한다.
 - 광역철도망·GTX-B 등과 연계하여 여의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여의도·영등포 도심의 지역 단절 해소와 중심성 향상을 위하여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
- 서울도심 및 강남 간 직결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권역 내 중심지 및 서울시 주요 거점 간 연계를 향상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UAM, GTX 등 신규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영등포 남북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열악한 철도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등포역~신도림역 구간 지하화를 검토하고 상부 공간은 영등포 도심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상부공간은 주변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산업·업무·상업·주거·여가 등 복합개발로 영등포 도심의 도시경쟁력 확보
- 기반시설 보수·확충 시 공유교통수단 및 1인용 교통수단의 증가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인프라를 확대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지역으로 구상한다.

가산대림 광역중심,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한 혁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 가산·대림 광역중심은 수도권 서남부의 신성장 혁신산업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하여 G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과 산업지원기능을 보완하고 생활권 중심기능을 강화한다.
 - 구로차량기지 이전적지는 G밸리와 연계하여 산업기능을 비롯한 비즈니스 호텔, 컨벤션 등 산업지원기능, 주거·상업·여가·문화 등을 공급하여 동·서 간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가산·대림 광역중심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육성
 - 준공업지역인 공군부대 이전부지는 G밸리의 첨단산업이 확대·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호텔, 컨벤션시설 등 산업지원기능과 함께 문화시설, 공원 등 지역 필 요시설, 다양한 중심기능을 도입하여 서남권의 IT 융복합 경제거점으로 구축
 - 대규모 가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밀접하게 협력
 - 종합적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통합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보행 여건을 제고한다.
- G밸리는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인접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문화·여가 기능 등 중심기능을 강화하여 종사자와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

마곡 광역중심, 인접 지역과 연계한 지식기반산업 거점으로 육성

- 4대 혁신축의 하나로 김포공항~마곡~상암·수색을 연계한 갑성문화 혁신축 육성을 위해, 마곡 광역중심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김포공항 일대를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자원과 가용지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김포공항에서 서울시 내를 원활히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위하여 통합연계환승센터 등 구축
- 마곡~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남북축은 수산물시장 관광자원화 및 대규모 공원녹지축 연계로 기능 활성화 추진
- 마곡 광역중심은 마곡 산업단지의 산업기능을 지원하고 국제 업무·상업중심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호텔, 컨벤션 센터, 상업·문화·여가시설 등을 확충한다.
- 마곡~화곡 간 발산역세권 및 강서의료특구를 기능상 연계하고 의료관광산업과 중대형 상업업무시설 도입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별 특화 육성 계획 수립

- 수도권 남부 주요도시와 서울을 잇는 관문으로 광역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사당·이수, 대학과 행정·문화·상업이 복합되어 있는 봉천, 상업·업무·문화 중심지인 목동 등 서남권 지역중심에 대하여 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특화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 목동 지역중심 내 저이용 기반시설인 목동유수지 및 목동 운동장 부지 일대는 스포츠를 비롯한 상업, 숙박, 문화·예술·여가기능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간을 도입하여 서남권 복합 문화 및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조성

역세권 중심지의 일자리·복합 기능 강화 및 관리방안 마련

- 서남부 관문지역인 온수 역세권 일대는 일자리기능 및 지역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하여 산업·주거·문화 복합거점으로 육성한다.
- 온수산업단지는 제조업 기반의 기술융합형 산업단지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서울·부천지역 통합된 단일 산업단지 관리체계 및 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광역 협력 강화
- 럭비구장·동부제강·화창기공 특별계획구역, 온수공영차고지 등 대규모 유휴공간은 온수산업단지 고도화와 연계하여 신산업기능과 상업·문화·주거 등 산업지원 및 중심기능을 도입
- 경인선으로 인한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통로 등으로 연결하고 공원·녹지와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을 활성화
- 신안산선 개통 이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업무·상업·주거·문화·여가기능 등의 복합개발로 신규 역세권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보행일상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2) 주거환경

노후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지원 강화

-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역은 지역 특성과 잠재력에 부합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양천구 목동 등 대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정비사업 추진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유도한다.

G밸리 연계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익시설 및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

- 산업과 주거가 혼재된 준공업지역, G밸리 배후 주거지역은 산업과 주거·문화·여가기능이 조화된 양호한 주거·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G밸리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 독산동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시 다양한 정비방식 추진을 위해 공공이 지원하고, 지역 수요를 고려한 부담가능하고 양질의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급

3) 기반시설

지역 내 단절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추진

- 경부선·경인선 철도 통과로 인한 서남권 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 지하화가 어려울 경우 철도 입체복합화를 추진하여 지하·지상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행환경을 개선
 - 노량진~여의도 연결도로 조성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개선 및 접근성 개선
 - 상부 공간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여가, 녹지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
 - 철도 입체복합화 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역세권·철도 주변 노후시가지 정비 등과 연계한 지역재생전략을 마련

권역 내 교통체계 개선과 연결성 강화

-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통과교통을 우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남권~동남권 간 교통체계를 확충하고, 서남권 내 순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권역 내부의 동선을 개선한다.
 - 서남권과 동남권 간 상습 혼잡구간인 지하철 2·9호선 교통량 포화 문제 해소

- 권역 내 지형적 여건에 따른 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및 중심지 간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 대규모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지역과 중심지 간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보라매공원~난향동을 연결하는 난곡선을 난향동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도시첨단물류단지 중심의 서남권 생활물류체계 구축

- 서부트럭터미널부지,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여 서남권 생활물류 체계를 개선한다.
 - 물류단지와 함께 업무·상업·문화·여가시설 등을 도입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중심으로 유도
 - 관문지역 특성 상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기반시설을 고려한 적정 밀도 계획과 개발 완료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 심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 방안 마련

4) 공원녹지

수경축 및 남북녹지축 연계와 공원·녹지 및 수변공간 접근성 강화

- 안양천 등 수경축과 관악산 등 남북녹지축을 잇는 서남권 녹지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여의 도공원, 선유도, 샛강, 현충원, 관악산 등 서남권 내 공원·녹지 접근성을 개선한다.
 - 여의도 일대에 한강 수변문화지구를 조성하고 녹색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하여 여의도 국회 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 조성과 올림픽대로 여의도구간 입체복합화 검토
 - 안양천~증미산~한강조망특화공원~서울식물원~강서습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한강조 망 둘레길 조성으로 저이용 수변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 안양천, 도림천, 봉천천, 대방천 등 주요 지천의 지속적인 생태 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시 관련 자치구가 공동 협력한다.

5) 지역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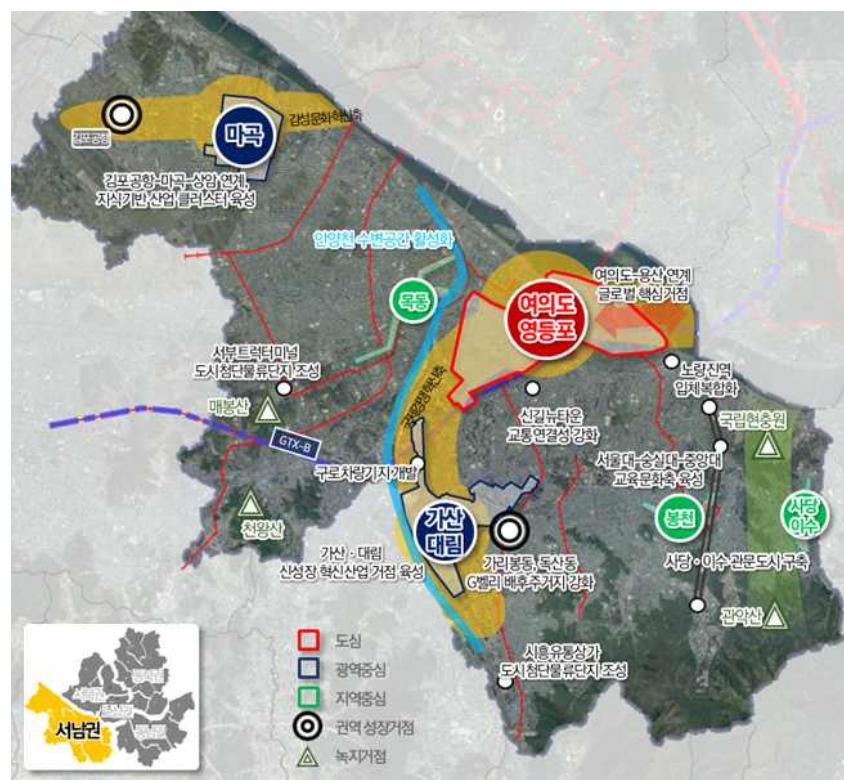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공간 육성으로 권역 경쟁력 강화

- 문화·예술(문래동), 문화특구(대림동), 역사문화(낙성대동)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공 간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인다.
 - 문래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문래예술창작촌의 특색을 유지하고 필요한 기반시설 및 생활SOC를 확충하도록 유도

- 대림동은 다문화 지역특색을 기반으로 음식문화 중심의 새로운 소비 및 문화 중심지로 지역 특화
-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 생가터, 안국사 등 고려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특화·정비,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지역축제 등으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권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축 육성

- 한강 이남의 중심 교육문화축인 서울대~송실대~중앙대 일대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한다.
- 학업 및 연구를 위해 머무르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창업 등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서남권의 산학 연구개발이 특화된 청년 창업거점을 육성한다.
- G밸리와 테헤란밸리를 잇는 연계 거점인 관악 S밸리 일대는 산학연계 등으로 청년벤처 산업을 특화 육성
- 남부순환로 일대 첨단벤처산업 지원을 위한 상업업무 복합서비스기능 확충 유도



〈그림 5-6〉 서남권 발전구상

6. 동남권

〈표 5-6〉 동남권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권역 발전 방향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존 주거지의 계획적 관리 도모”
구분	계획과제
도시공간	강남 도심, 대규모 가용지 개발과 교통체계 고도화로 국제 업무·교류의 중심지 기능 강화
	잠실 광역중심, 국제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
	수서·문정 지역중심, 신성장·R&D·물류 산업 등이 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
	천호·길동 지역중심, 자족기능 강화 및 청년문화 혁신거점 조성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미래융합 혁신축 및 새로운 산업거점 육성
주거환경	지역 주택시장 영향을 고려한 노후 아파트 단지의 계획적 정비 유도
	저층 주거지역 내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적 관리 추진
	수변 네트워크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
기반시설	광역교통 수요 대응 및 권역 내 중심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철도교통망 확충
	동남권 대규모 유통상업지역의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 구축
공원녹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
	간선가로변 완충녹지의 복합적 기능 전환 및 활용성 강화
지역특화	권역 내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및 관광산업과 연계

1) 도시공간

강남 도심, 대규모 가용지 개발과 교통체계 고도화로 국제 업무·교류의 중심지 기능 강화

- 강남도심은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발달된 국제업무 및 상업 기능을 고도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한다.
- 코엑스,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대차 GBC, 서울의료원 부지, 잠실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를 연계하여 국제교류·MICE 산업의 중심지로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한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대규모 개발 가용지는 국제업무·MICE·스포츠·문화·엔터테인먼트 기능 등을 복합화
 - SETEC 일대를 행정·문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타운으로 조성
- 경부간선도로 입체 복합개발로 도시 공간을 통합·개발하고 단절된 공간을 연계하며 보행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하여 강남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
 - 경부간선도로의 재구조화로 적정 도로용량 확보 및 상부공간 활용

- 녹색교통을 정착하고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차량 우대, 공해차량 제재 등 탄력적 교통수요관리 체계에 의해 승용차 통행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보도와 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위한 인프라 등을 확충한다.
- 삼성역 일대는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자율주행자동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모빌리티 허브 및 관련 인프라를 조성·확충하며 교통안전시설을 고도화한다.
- 강남도심의 주거 기능을 보완하여 도심부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 청년, 신혼부부 등 도심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도심형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유도한다.

잠실 광역중심, 국제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

- 잠실 광역중심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하여 관광·여가·쇼핑 기능을 구축·강화하고 강남도심의 국제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집중 공급한다.
 - 잠실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 스포츠산업 중심지로 특화하고 테헤란로 업무 및 MICE 산업벨트를 확대·육성
-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풍부한 매력 있는 공간으로 육성한다.

수서·문정 지역중심, 신성장·R&D·물류 산업 등이 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

- 수서는 로봇 및 IT산업 기업을 특화 육성하여 동남권의 신성장 산업거점으로, 문정은 업무·R&D·생산·물류기능 등이 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한다.
 - 수서 일대는 로봇기업 유치, 스타트업 입주 공간 등 로봇산업 지원시설 도입 등을 추진하여 로봇산업거점으로 육성
 - 수서역공영주차장, 수서차량기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신산업 관련 앵커시설을 비롯한 업무·산업·주거·상업·첨단물류시설, 녹지 등의 복합개발을 검토
- 탄천으로 단절된 수서~문정 간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수서·문정 지역중심 내 원활한 기능 분담 및 연계로 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한다.

천호·길동 지역중심, 자족기능 강화 및 청년문화 혁신거점 조성

- 천호·길동 지역중심은 강남 도심 및 잠실 광역중심과 연결·확장되는 동부 광역연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천호대로와 양재대로변을 중심으로 역세권 관련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업무·상업기능과 생활문화기반을 강화한다.

-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천호 사거리 일대를 문화예술 거리 및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문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변 지역의 문화적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 천호동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로 확보되는 공원 내 소규모 청년공연장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설 도입 검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미래융합 혁신축 및 새로운 산업거점 육성

- 서울의 신성장 산업거점인 양재와 신규 산업시설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AI, 빅데이터, IT 등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강남도심, 수서·문정 등과 연계한 미래융합 혁신축을 구축하여 동남권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 양재 일대는 AI, 빅데이터, IT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개발진흥지구 지정을 검토
 - 고덕 비즈밸리, 강동 일반산업단지, 강동 첨단업무단지 등은 주변 지역과 함께 업무·상업 등 복합기능이 도입되어 서울 동부 관문지역의 일자리 중심 및 연계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광역 및 권역 내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방안 검토

2) 주거환경

지역 주택시장 영향을 고려한 노후 아파트 단지의 계획적 정비 유도

- 재건축사업이 지역 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정비사업의 규모, 시기 조절 등을 계획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내 주거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 내구연한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도입하여 지역커뮤니티 거점으로 육성한다.
 - 미래 주거수요를 반영한 주거의 양적 공급 및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를 공급하고 복합기능의 자족적 단지로 계획

저층 주거지역 내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적 관리 추진

- 양호한 저층주거지는 지역 특성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이면도로 정비, 주차장 및 공원·녹지 확충 등을 추진하고 상업·업무 등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용도혼재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 등은 주거환경 개선과 저지대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각종 재난,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수변 네트워크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

- 한강변, 탄천변, 양재천변 등 지천변 주거지역에 대해 수변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지역과 수변 간 원활한 통경축 및 접근로를 확보한다.

3) 기반시설

광역교통 수요 대응 및 권역 내 중심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 강일 등 서울 동남권 및 인접도시 택지개발로 인한 대규모 도시공간 변화와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GTX, 위례신사선, 위례신도시 트램, 위례과천선,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등 철도교통망을 확충하고 지하철 추가 직결·연장 등 방안을 검토한다.
- 강일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광역대도시권 교통 연계기능을 강화

차량기지 입체복합화로 단절된 생활권 연계

- 고덕차량기지를 입체보행데크로 복합개발하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된 고덕생활권과 강일생활권을 연계한다.

동남권 대규모 유통상업지역의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 구축

- 가락시장, 동남권유통단지 등 대규모 유통상업지역은 교통문제 완화와 물류체계 효율화 측면에서 3차원 물류체계인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4) 공원녹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

-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결된 동남권 일대 한강·탄천변은 국제교류기능 지원과 시민 여가를 위한 매력적인 수변여가·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
 -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한강변 재정비 시 구간별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 추가 설치
 - 천호-암사-고덕-강일로 이어지는 강동 한강 수변축을 재정비하여 여가·레저시설을 확충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하며, 하남시와 광역거버넌스 협력으로 미사 한강변과 연계하여 녹지 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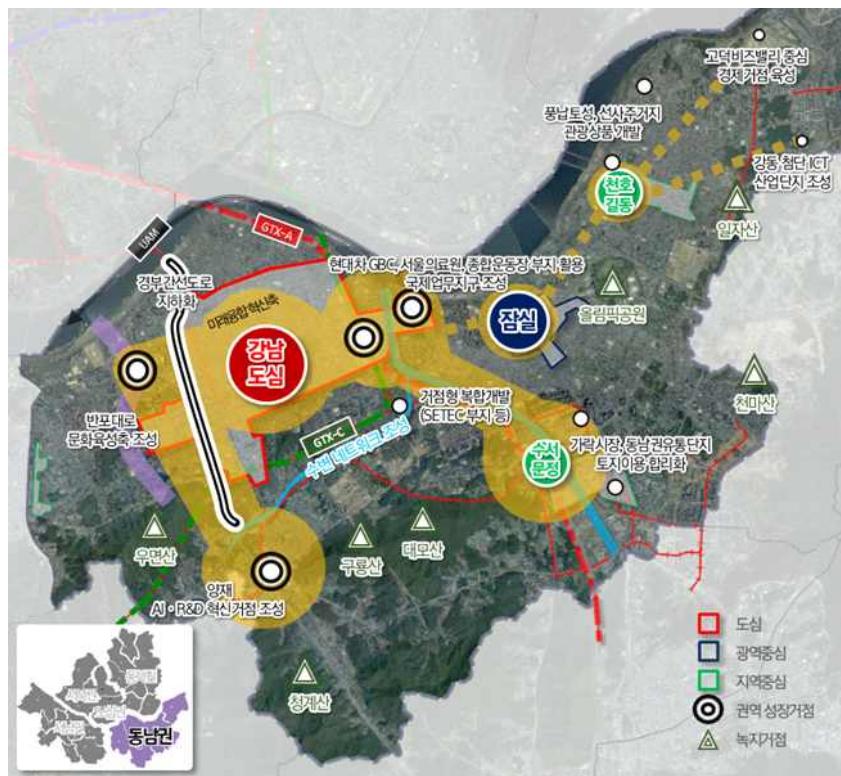
간선가로변 완충녹지의 복합적 기능 전환 및 활용성 강화

- 보행접근 및 가로활성화를 방해하는 완충녹지의 공간 단절에 따른 우범화를 방지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기능 전환과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5) 지역특화

권역 내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및 관광산업과 연계

- 국제 업무 및 MICE 산업 관련 방문객이 동남권에서 업무 외의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역사·문화거점 및 이벤트 공간 등을 조성한다.
- 세빛섬~고속버스터미널~정보사부지~예술의 전당을 연결한 반포대로 문화축 및 문화예술거점을 육성한다.
 -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터미널의 문화·업무·상업의 복합개발 검토
- 풍납토성 주변지역은 도심형 관광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수변역사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다.



〈그림 5-7〉 동남권 발전구상

제6장 계획의 실현

제1절 계획체계 조정·보완

제2절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제3절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강화

제4절 재원 투입의 원칙과 방향

제1절 계획체계 조정·보완

1.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서울의 장기 발전방향과 기본 공간구조를 제시한다.
- 서울의 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복지·경제·환경·문화·교육·교통·방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되, 공간계획 위주로 재편하도록 한다.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부서에서 대응하기 어렵거나 실·국을 아우르는 주제를 선정하고 공간적 함의를 도출한다.
- 이를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관련 부서의 시정 운영과 하위계획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간 지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7대 공간목표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 계획으로서의 특정지역계획 수립·재정비¹²⁾

- 향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도심과 7광역중심, 그 외 공간구조에 부합하는 주요 전략 거점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서울의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특정지역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점별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정책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이에 특정지역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거점별 특성에 부합하는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계획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한다.
- 강남 도심과 그 외 광역중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주요 거점에 대한 통합적인 도시관리 틀을 마련한다.

3. 생활권계획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서 성격과 역할 명확화

- 생활권계획은 지역과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밀착형 계획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설정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공간구조인 보행일상권을 실현하기

12) 맹다미 외, 2022,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위한 계획으로 역할을 전환한다.

- 이를 위해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 주도로 수립하고 서울시는 자치구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를 제시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치구 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생활권계획 재정비는 자치구별 대표 생활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지역생활권별로 중복되는 계획 내용의 통합, 실효성 낮은 계획 내용 조정 등을 통해 계획 내용을 경량화하도록 한다.

4. 도시관리계획의 통합적 관리방향 제시 및 상시계획체계 운영

-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재정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문별로 수립·운영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상을 실제 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도시기본계획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부문별 도시관리계획에 일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 이 때 통합적 도시관리 방향은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 등과 정합성을 높여 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해야 한다.
- 한편 상시계획체계를 구축하여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도시계획 시설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 방향과 운영 원칙을 제시하여, 개별 계획의 주기적인 수립·재정비를 도모하고 계획 내용 간 정합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제2절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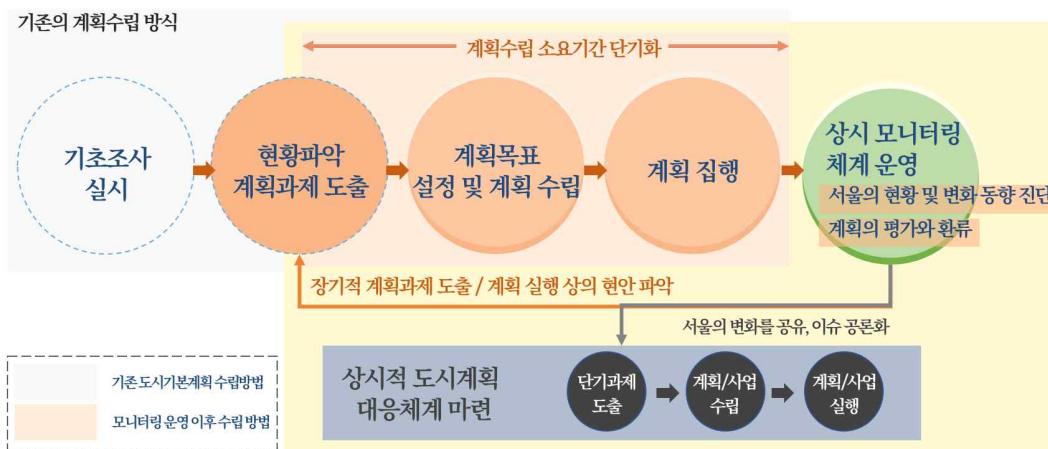
1. 계획 모니터링의 개요

모니터링의 필요성 및 추진 현황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주택, 정비,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다루면서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의 실현과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환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주기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2015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모니터링을 정례화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의 변화 동향과 계획의 실현과정에 대해 수시로 진단하고 있다.

모니터링의 목적 및 구성

-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며 계획 환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따라서 서울의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이슈를 공론화하고 계획과제를 도출하는 ‘서울 도시변화 진단’과 계획에 따른 추진을 점검하고 현안을 파악하는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으로 체계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그림 6-1〉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상시 대응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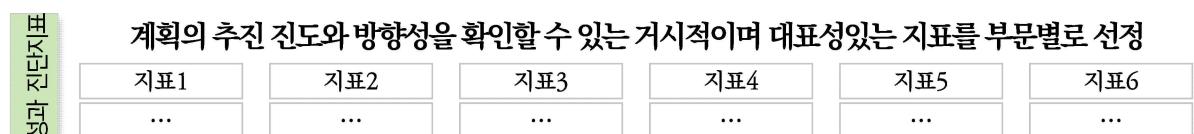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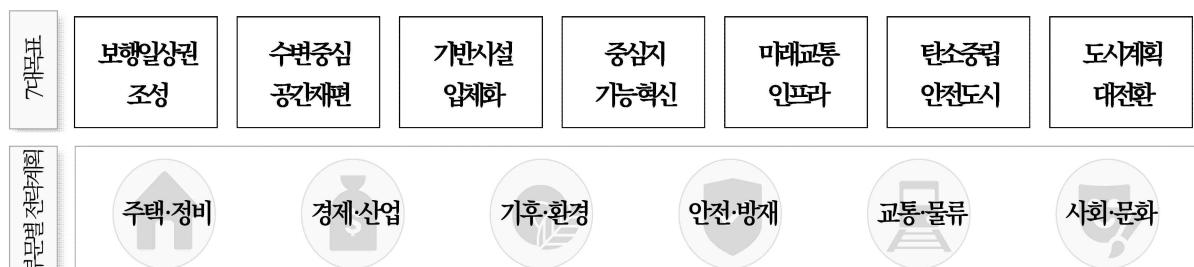
2. 주요 모니터링 내용

도시변화, 계획여건 변화 진단

-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시민의 수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구, 주택, 산업·경제, 토지이용·도시관리, 교통, 안전·환경, 생활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기초조사, 공간단위별 조사, 주제별 조사 등 진단체계를 다양화하여 도시의 변화를 여러 부분에서 살피도록 한다.
- 데이터 기반 조사 이외에도 세계 대도시의 계획 트렌드 조사, 시민의 인식 조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계획의 보완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상시적 도시계획 대응체계의 티대를 마련한다. 특히 도시 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민 인식 조사를 수행할 경우, 성별·연령별로 고르게 의견을 조사하고 인구 특성별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계획의 실현과정 평가 및 공간 관련 계획의 정합성 확보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전략계획의 실현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지표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 성과 진단지표는 7대 목표와 6개 부문별 전략계획의 주안점을 대표하면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도록 구성하며,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지표체계로 정교화한다.



성과 진단지표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행력 강화

〈그림 6-2〉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성과 진단지표의 구성 방향

〈표 6-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부문별 성과 진단지표(안)

부문	지표명	지표의 통계명	내용 및 산정식	출처	목표치 및 관리방향
주택·정비	주택재고	주택보급률 (천 인당 주택 수)	서울시 가구 대비 주택 수(서울시 전체 주택 수/전체 가구 × 100)와 인구 천 인당 주택 수(전체 주택 수/서울시 인구 × 1,000)	국토교통부	증가
	공공주택재고율*	공공주택 수/서울시 전체 주택 수×100	서울시 내부자료 (주택정책과)	증가	
	주거비부담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주거비과부담가구 기준(RIR 25% 또는 HCIR 30%)을 초과하는 가구 수/임차 거주 가구 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감소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단기)	국토교통부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총 조사대상가구 × 100, 적정주거기준 공표 시 지표 변경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감소
	주거환경만족	주거환경만족도	시민이 본인 거주 주변 환경(상업, 의료, 문화시설, 공공기관 접근성, 녹지, 교통, 접근, 안전, 교육, 환경(소음, 대기오염, 미화) 및 이웃관계 등)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증가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건수(사업면적)	저층 주거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협정 등 사업의 인허가 누적건수 및 사업구역 면적	서울시 내부자료 (주택정책과 주거환경개선과)	증가
	중심성강화	상위중심지 내 신축연면적 (전체 신축 중 비율)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에 대한 신축 허가 연면적과 전체 서울에서 중심지가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허가대장	증가
	직주균형	직주균형지수* (내부고용률)	대생활권별 취업자 수 대비 고용자 수(권역별 고용자 수/권역별 취업자 수×100)와 생활권별 고용자 중 지역 내부 통근자 비율	국가교통DB 또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권역별 차등 관리
경제·산업	신기술산업	지식산업 종사자 수	「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증가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산업 종사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증가
	혁신창업	벤처기업 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며 벤처기업 확인과정을 거친 기업의 수(매년 6월 말 기준)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 시스템	증가
	소상공인 경기체감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수준을 지수화한 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증가
	글로벌관광	외국인 관광객 수 (재방문율)*	서울에 방문한 외래관광객 수(입국 외래관광객 수×서울 방문 비율) 및 서울에 재방문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실태 조사	3,000만 명 (2030)

〈표 6-1 계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부문별 성과 진단지표(안)

부문	지표명	지표의 통계명	내용 및 산정식	출처	목표치 및 관리방향
기후·환경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	건물·수송·폐기물 처리 등에 따른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서울시 내부자료 (기후환경정책과)	2005년 대비 70% 감축
	대기질개선	초미세먼지 농도*	서울시 대기 중 $2.5\mu\text{m}$ 보다 작은 초미세먼지의 농도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10\mu\text{g}/\text{m}^3$ (204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서울시 총 에너지보급량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한국에너지공단	21% (2030)
	탄소배출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	에너지다소비건물, 공공건물, 상업건물, 주택 등에 대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개소수(누적)	서울시 내부자료 (친환경건물과)	100만 호 (2026)
	자원순환	인구당 생활폐기물 발생량(매립률)	서울시민 1인당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서울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인구 수)과 생활폐기물 중 매립되는 비율	서울통계	0.86kg/인/일 (2027)
	물순환	물재이용량*	빗물,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로 대체하여 이용한 물의 양	서울시 내부자료 (수변감성도시과)	증가
	녹지환경만족	녹지환경만족도	시민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녹지환경(공원, 숲 등)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서울서베이	증가
	공원확충	1인당 공원면적*	공원 면적(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 공원+국립공원)/인구수	서울시 공원통계	증가
	수변공간 활성화	한강공원 이용객수	산책, 낚시, 자전거, 인라인, 운동·수상시설, 수영장, 행사 등을 위하여 한강공원을 이용한 이용객 수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증가
안전·방재	자연재난	자연재난 피해액(이재민 수)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액과 이재민 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감소
	사회재난	사회재난 사고건수(사망자 수)*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철도, 가스, 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사망자 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감소
	감염병	제1급감염병 환자 수(비정기)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 즉시 신고가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제1급 감염병(에볼라 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 SARS 등)의 확진자 수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발생 보고	감소
	범죄	5대범죄 발생건수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범죄 건수	서울통계	감소
	시설물안전	재난안전 시설물 비율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교량, 건축물, 기타 토목시설물 등) 중 시설물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비율(개소 기준)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통계연보	증가
교통·물류	보행안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보행자 중 사망자 수	도로교통공단 통계	2019년 대비 50% 감소 (2030)
	대중교통이용	대중교통통행량 (수단분담률)*	버스, 지하철·철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통행량 및 종 통행량 중 비중	서울통계	75% (2030)
	환승편의성 제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소요시간(단기)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지하철-지하철 간 평균 환승 소요 시간	교통카드 자료분석	감소
	친환경교통	친환경차량 보급대수(보급률)	전기, 수소 등록차량 및 서울시 전체 등록차량 대비 비중	국토교통부 통계	증가
	첨단교통	첨단도로 연장(비율)	IT기술을 접목하여 보행자와 차량을 지원(차량과 도로인프라간 정보교류, 신호개방 등 도로인프라 구축)하는 시설이 갖추어진 도로 연장 및 첨단화 비율	서울시 내부자료 (미래첨단교통과)	증가
	도시물류지원	도시 물류시설 면적(장기)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물류창고 및 도시 내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조성된 생활물류시설 연면적	서울시 내부자료 (물류정책과)	증가

〈표 6-1 계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부문별 성과 진단지표(안)

부문	지표명	지표의 통계명	내용 및 산정식	출처	목표치 및 관리방향
사회·문화	사회적관계망	공동체지수	시민 중 우울할 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급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OECD 공동체지수 중 관계망지수)	서울서베이	증가
	아동돌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서울시 전체 영유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의 비율(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서울시 전체 영유아 수×100)	서울통계	증가
	노인돌봄	재가노인돌봄률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율)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재가 돌봄' 수혜 비율(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의 이용자수(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 수 / 장기요양 인정 노인 수×100)과 전체 돌봄 수혜 비율(장기요양 서비스 총 이용 노인 수/ 장기요양 인정 노인 수×100)	서울시 내부자료 (어르신정책과)	증가
	복지안전망	빈곤율*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50% 이하 서울시민의 비율	서울시 서울복지실태조사	감소
	문화인프라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서울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의 개소수(서울시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공연장,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총 수 /서울 총인구×100,000)	통계청 e-지방지표 보완 (서울통계 활용)	증가
	평생교육 참여	평생학습참여율*	국가학력체계에 포함되는 형식교육,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한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연간 평생학습 참여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의 평생 학습 실태조사	증가
	공공보건 인프라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보건기관 수* (공공병원 병상 수)	서울인구 십만 명당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의 수 (서울시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 총 개소수/ 서울 총인구×100,000)와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시립병원 등)의 병상 수	서울통계 및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 현황	증가

주1: *표시가 있는 지표는 기존 2030 서울플랜 성과 진단지표를 보전 또는 보완한 지표임

주2: 성과 진단지표와 목표치는 향후 여건 변화, 타 계획 수립에 따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성과 진단지표를 통해 부문 전반에 도시기본계획의 일관적 추진을 보조하는 한편, 공간정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 공간 관련 주요 중·장기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 이전, 계획별 재정비 방향성을 검토하고 상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¹³⁾.

13) 대상 계획에는 공간 관련 주요 법정계획 및 비법정계획을 포함한다.

3. 모니터링 방안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및 공개

- 급격한 여건의 변화와 복합적인 변화요인으로 인해 도시를 둘러싼 정책 판단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도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모니터링 보고서는 서울의 변화 동향,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여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돋는 의사 판단 근거로 기능한다.

관련 부서 결과 공유 및 환류

-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서별 후속 계획 및 사업 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환류과정에서 재원 필요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도 가능하므로 서울플랜의 전략과 목표를 실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3절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강화

1.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 서울·인천·경기로 이루어진 수도권은 국토 전체의 절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글로벌 광역경제권들과의 경쟁에 있어도 중요한 역할과 위상을 지닌다.
- 글로벌 대도시권들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국가의 공간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며, 그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공간이 광역교통 네트워크 중심으로 연결된 다핵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 3개 시·도 간 협력을 통해 공간적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실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교통 기술발달로 인해 지역 간 이동 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물리적·기능적 연계 강화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광역 거버넌스 체계 실현을 위한 노력

수도권 광역 거버넌스 기구 기능 강화 및 상설화

- 수도권 광역문제의 해결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여 문제를 직접 관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분권형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된다.
- 이를 위해, 서울·인천·경기 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그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통합된 발전전략의 수립과 공동관리를 도모한다.
 - 현재 운영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광역계획권 내 현안 사항을 논의
 - 수도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회의 개최로 수도권 전 부문에 걸친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안을 협의 및 조정

MPO형태의 수도권 계획·관리기구 설립 검토 및 추진

- 장기적으로 3개 지자체 간 협의 및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광역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설치형 계획전담기구(MPO,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를 설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종합계획의 검토 등 수도권 전반 계획 및 사업을 검토한다.
 - 대도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계획의 조정·관리, 관련부서 협의 등 추진

제4절 재원 투입의 원칙과 방향

1. 재원 투입의 원칙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이자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은 장기계획으로 실효성과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재원이 적절한 시기와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원투입의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원투입의 원칙

- 첫째, 2040년을 목표로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과 7대 공간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및 정책방향 등을 달성목표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하고 실현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 둘째,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그리고 기준에 시행되고 있는 중장기 시책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셋째, 연차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책의 재원투입 규모와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한다.

2. 단계별 실현전략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시가 달성해야하는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을 모두 동일한 위계로 중요하게 다루되, 중·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슈를 구분한다.

중·단기적 실현 전략

- 우선 중·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경직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하며 용도지역제, 스카이라인 관리기준 등의 대대적인 개편이 핵심이다.

-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또한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
- 또한 시민의 생활변화를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도시 모습을 담아내는 미래형 도시관리체계로 변화하기 위하여 ‘보행일상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일자리·여가·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자립생활권을 형성
 -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중심의 통합형 교통 네트워크 구축
 -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단위의 자원순환 체계 마련
- 이처럼 서울 전역의 보행일상권 구축을 위해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체계 개편, 경관관리, 생활권계획 등 유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중·장기적 실현 전략

- 우선, 전(全)지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공간계획 및 부문별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실현한다.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도시에 대한 노력은 모든 정책 판단에 있어 우선시 되는 이슈가 되어야하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다품과 동시에 공간계획과의 유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향후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므로 적극 대응
- 또한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중히 달성해야 할 과제로는 기반시설 입체화와 미래교통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있다. 이는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한 미래전략으로 상당한 재원 투입과 시간소요가 예상되는 바, 변화되는 상황 및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3.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은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이미 시행 중인 주요 사업, 필요성에 따라 제시된 정책이지만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단계의 계획 등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계획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기준

- 첫째,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 중, 관련 법정계획 및 시정계획과 정합성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시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이미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배분한다.
- 둘째, 관련 연구에 따라 시책의 시급성과 효과가 검증된 시책에 우선순위를 먼저 배분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시책의 내용은 법정계획 또는 시정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즉각적인 재원을 투입한다.
- 셋째,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안은 관련 법정 또는 비법정 계획에 반영하거나, 관련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들을 수립한 뒤 실행한다.

